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Architectural Policy Recommenda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조상규 Cho, Sang Kyu  
김영현 Kim, Young Hyun

( a u r i

AURI-정책-2013-9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Architectural Policy Recommenda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지은이: 조상규, 김영현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05호

인쇄: 2013년 11월 10일, 발행: 2013년 11월 1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8-89-97468-80-5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 |         |               |
|---------|---------------|
| Ⅰ 연구책임  | 조상규 연구위원      |
| Ⅰ 연구진   | 김영현 연구원       |
| Ⅰ 연구보조원 | 윤호선 연구인턴, 이은석 |

- 
- |          |  |
|----------|--|
| Ⅰ 연구심의위원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br>오성훈 연구위원<br>김근오 국토교통부 과장<br>민범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온영태 경희대 교수 |
|----------|--|



## 연구요약

### 서론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2010년 5월에 수립되었으며, 지난 3년동안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실천과제 113개 중 현재까지 29개가 완료되고, 63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계획수립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가 새롭게 발표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건축정책관련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건축분야에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부터 현시점까지의 정책성과를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새정부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제2차 건축정책이 반영해야 할 여건변화요소 및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한다.

###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사업성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1개 광역시·도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및 완료하였다. 또한, 경관조명, 수변경관, 해안경관 등 다양한 건축·도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마련

되었고, 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이 수립·진행되었다.

녹색성장 국정기조에 맞추어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법·제도 제·개정 및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건축문화유산 활용방안, 건축자산 DB구축, 유희시설 재활용 등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와 연구도 실행되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건축·도시 관련 시책 속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 및 이행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를 모니터링 하였다. 보도 자료는 건축정책기본계획 3대 목표에 따라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해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사업추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행사 및 홍보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건축문화’ 부문 관련 보도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녹색 건축도시’ 부문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다음해 급증한 이후 감소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201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3개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전까지는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이 전체 보도자료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부문별 차이가 두드러졌으나, 2013년 들어 그 차이가 상당수 감소하였다. 또한, 6개분야중 매년 비슷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는 반면, 주요 시책이 바뀌거나 또는 다양한 시책이 동시에 수립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분야별 정책동향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계획수립’ 분야의 경우 2010년 경관법과 관련하여 경관계획수립이 주된 정책동향이었지만, 2011-2012년에는 연안관리계획, 주택종합계획, 경관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 등 지자체 특징에 따라 건축·도시 관련 계획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는 주로 도시경관 관련 디자인가

이드라인 계획이 주된 정책동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함께 친환경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부문 관련 시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후, 2011~12년에는 도시재정비, 건축안전기준,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건축 및 도시환경 법·제도 관련시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에 들어서는 건축물에너지 효율기준, 녹색건축 설계기준 등 친환경건축물 관련제도가 다시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빗물활용, 재해로부터의 안전 등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제도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셋째,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확인된 건축·도시사업의 성격은 매년 크게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주요시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11년에는 도시경관개선사업과 함께 건축문화재(근대 건축, 한옥 등) 육성에 관한 내용 등 주로 미적인 측면과 관련된 시책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2012~13년에는 정주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과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내용 등 건축·도시환경과 관련된 주민복지 관련 사안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도시 시범사업도 다수 진행되었다.

넷째, ‘시스템 구축’ 분야는 건축·도시 공간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집계되었지만 주로 등산로, 여행, 건축지도 등 관광분야와 부동산, 도시계획 등 건축·도시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 등 크게 두 개 분야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수집되었다.

다섯째, ‘연구 및 교육’ 분야의 경우 2010년도에는 건축가상, 건축 조례집 등 건축·도시 관련 인쇄물 발간이 주된 내용인 반면 2011년에는 건축·도시 관련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주로 보도되었다. 2012년에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의해 6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및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축·도시 관련 기록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섯째,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는 201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건축·도시 수상 및 공모전,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보도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 지역적 성격적 다양성으로 인해 매년 집계되는 건축·도시 관련시책의 정책동향을 한눈에 살펴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발표 자료는 건축·도시 관련 시책이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복지향상과, 녹색건축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국가사회적 건축정책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2010년 전후로 영국, EU, 미국, 일본에서는 2020년 또는 2050년을 목표연도로 한 미래전망보고서가 다양한 미래연구집단 및 정부기관을 통해 매년 제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회적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22편의 미래예측보고서를 검토·정리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적 메가트렌드 키워드는 에너지, 고령화사회, 세계화, 양성평등사회, 기후변화, 물부족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 기반 변화에서는 석유의존도가 감소하면서 나노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비화석 연료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미래에 대한 자체 청사진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건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헬



스테크, 헬스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건강관련 연구 및 기술에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노인계층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로 인해 산업, 경제, 정치의 다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가치상승에 따라 국경을 넘는 신기술 투자 선도가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사회단위는 서서히 개인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등 개인화로 인한 사회 결속력 약화가 예측되고 있다.

양성평등사회가 도래하면서 직업을 갖는 여성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활동증가로 ‘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정신, 정서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은 가정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재택근무와 e-커뮤니티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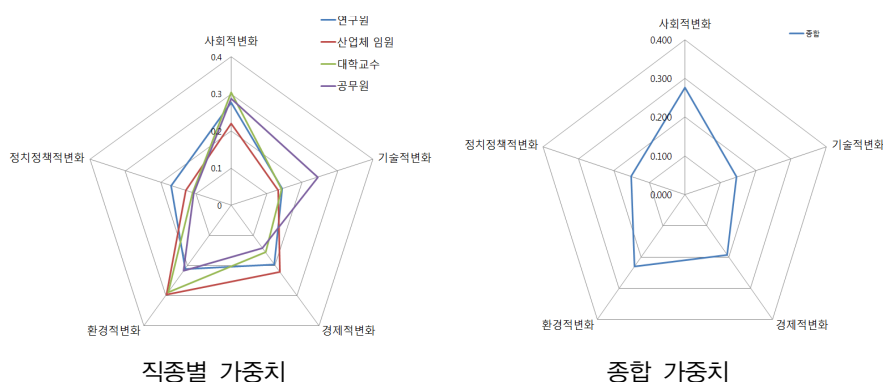
2015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국가 및 지역연합은 저탄소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운 국제기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청정기술 및 물 확보 기술 등 물활용 기술이 진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국내 미래트렌드는 국제트렌드인 세계화, 고령화, 에너지, 기후변화와 물 부족 외 경제시장의 변화, 정치행정의 변화를 추가적인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경제시장의 변화는 홈오피스, 홈스쿨, 문화생활 등 기존의 직주 분리개념이 점차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년층·장애인 노동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쇠퇴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정책결정자에서 정책조정자로 변화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는 실질적 참여민주주의가 활발해지는 등 정치행정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지식력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고유의 정보를 활용한 통제력 강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가 전망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경제적변화, 환경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중요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집단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회적변화, 환경적변화, 경제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기술적변화의 순으로 중요도를 나열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 변화와 정치·정책적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변화 부문에서는 노후주택 신축 및 개량을 통한 주거공급, 독거 노인 및 1인 2인세대형 주거보급, 다양한 주거유형 마련 등 주거공급 문제에 대한 미래 트렌드 반영을 중요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문화적 요소와 도시안전 및 도시재생 분야 항목도 중요 트렌드로 분석되었다.

기술적 변화 부문에서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노후 인프라 데이터 구축, CPTED 기술표준화 등 정주환경개선 관련분야가 주요 미래 트렌드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변화 부문에서는 건축 관련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 건축

전문가 육성 등 건축 관련 업체 및 인력 양성이 주요 트렌드로 판별되었다.

환경적 변화 부문에서는 녹색건축설계기법 개발, 에너지소비 총량제,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 관련 항목이 전반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판별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향후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5대 메가트렌드 중에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정치·정책적 변화에서는 정책반영에 타당한 세부항목이 분석되지 않았지만, 탄소 배출권 이행을 위한 도시차원의 대안마련, 상향식 의사 결정체계 마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앞으로 변화하게 될 정치 정책적 여건 중 환경적 정책과 풀뿌리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새 정부 국정과제와 건축정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정과제에 대응한 건축정책 마련이 불가피해 졌으며 중앙부처에서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2013년 업무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변경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건축·도시 관련 계획을 수립한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으며, 향후 대응이 필요 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정과제를 앞에서 언급한 국가사회적 미래트렌드를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경제부흥에 대응하는 건축정책은 총 7개로 국토부, 해수부, 농축산부가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로 서비스산업 육성, 주거안정, 부동산 시정 안정에 관한 과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소기업 성장,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 관련 세부과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행복에 대응하는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세부업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특정 과제에 집중적으로 정책이 편중되어 있었으며, 건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에 대응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과제가 상

당부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과제 및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융성 및 추진기반에 대응하는 건축정책은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구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건축문화행사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축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연관있는 사업 및 과제를 검토한 결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행화가 필요한 과제, 현재계획 계속 추진과제, 부서·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하는 과제, 신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건강, 고령화, 방재, 범죄예방 등 복지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경우 건축·도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지만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관련된 과제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이후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에 대한 국정과제가 중요한 정책기조로서 내세워진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 차 례

<b>제1장 서론</b>	<b>1</b>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6
<b>제2장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사업성과</b>	<b>11</b>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성과	11
1)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행현황 및 성과	11
2)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킴 마련 및 사업 추진	13
3)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 및 연구 진행	15
4)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벤트 추진	17
2. 건축·도시 주요 정책동향	18
1) 추진주체별 정책동향	18
2) 분야별 정책동향	31
<b>제3장 국가·사회적 건축정책 여건변화와 미래전망</b>	<b>49</b>
1. 메가트렌드를 통한 관련 여건변화 진단	50
1) 국제여건변화 및 이슈	50
2) 국내여건변화 및 이슈	61
2. 주요 메가트렌드와 건축정책의 관계 모색을 통한 방향 설정	77
1) 사회적 변화	77

2) 기술적 변화 .....	80
3) 경제적 변화 .....	81
4) 환경적 변화 .....	82
5) 정치, 정책적 변화 .....	83
3. 전문가가 전망하는 건축정책의 방향 .....	84
1) 조사개요 .....	84
2) 응답자 일반현황 .....	84
3) 전문분야별 메가트렌드별 중요도 .....	85
4)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86
5) 기술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90
6) 경제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91
7) 환경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93
8) 정치·정책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	94
<b>제4장 새 정부 국정과제와 건축정책 .....</b>	<b>97</b>
1. 새 정부 국정과제 대한 건축정책의 대응 현황 .....	97
1) 건축도시분야와 관련된 새 정부 국정과제 .....	97
2)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	99
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개선방향 .....	107
<b>참고문헌 .....</b>	<b>113</b>
<b>SUMMARY .....</b>	<b>119</b>
<b>부    록 .....</b>	<b>121</b>

## 표차례

[표 1] 연구의 목적 .....	2
[표 2]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	6
[표 3] 건축정책기본계획 2010~2012년 대상 단위사업별 이행 현황 .....	12
[표 4] 건축정책기본계획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의 추진현황 .....	14
[표 5] 건축정책기본계획 녹색성장기반 구축 부문의 추진현황 .....	15
[표 6] 건축정책기본계획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부문의 추진현황 .....	17
[표 7]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보도자료 추이 .....	18
[표 8] 2010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20
[표 9] 2011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23
[표 10] 2012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25
[표 11] 2012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29
[표 12] 2010년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32
[표 13] 2011년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35
[표 14] 2012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39
[표 15] 2013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44
[표 16] 2010~2013 분야별 주요정책 성과 및 동향 .....	47
[표 17] 국제여건분석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미래예측문헌 .....	51
[표 18] 국제적 메가트렌드 변화 및 이슈 .....	59
[표 19] 국내여건분석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미래예측문헌 .....	61
[표 20] 국내 메가트렌드 변화 및 이슈 .....	75
[표 21] 사회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	78
[표 22] 기술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	80
[표 23] 경제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	81
[표 24] 환경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	82

[표 25] 환경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	83
[표 26] 설문참여 전문가 일반현황 .....	84
[표 27] 5대 메가트렌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 결과 .....	85
[표 28] 사회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	87
[표 29] 기술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	90
[표 30] 경제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	92
[표 31] 환경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	93
[표 32] 정치·정책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	95
[표 33]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건축정책 관련 과제 .....	98
[표 34] 중앙부처 업무계획 중 건축·도시 관련 주요정책 .....	99
[표 35] 국정기조 1 경제부흥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	101
[표 36] 국정기조 2 국민행복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	103
[표 37] 국정기조 3 문화융성 및 추진기반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	105
[표 38]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행화가 필요한 과제 .....	107
[표 39] 현재 계획의 계속 추진 과제 .....	109
[표 40] 부서·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 .....	110
[표 41] 신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과제 .....	111



## 그림차례

[그림 1] 연구 범위의 시점 .....	3
[그림 2] 건축정책 소관별 추진계획 조사대상 및 절차 .....	5
[그림 3] 연구흐름도 .....	5
[그림 4] 기본계획부문별 이행상황 .....	11
[그림 5] 2011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21
[그림 6] 2011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24
[그림 7] 2012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27
[그림 8] 2012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30
[그림 9] 2010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32
[그림 10] 2011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36
[그림 11] 2012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40
[그림 12] 2013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44
[그림 13] 메가트렌드 분석 및 설문문항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과정 .....	50
[그림 14] 연료별 세계 1차 에너지수요전망 .....	52
[그림 15]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전망 .....	53
[그림 16]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의 개념도 .....	53
[그림 17] OECD 주요국 고령인구 비율 .....	54
[그림 18] OECD 국가의 외국인노동력의 비율 (%) .....	55
[그림 19] 세계경제에서 미와 중국의 비율 .....	55
[그림 20]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의 증가추세 .....	56
[그림 21]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의한 노동력의 확대 .....	57
[그림 22] 지구적 평균기온의 변화추세 .....	58
[그림 23] 세계 물 스트레스 지수현황 .....	59
[그림 24]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 .....	63

[그림 25] 총인구대비 결혼이민인구 비율전망 .....	63
[그림 26] 독거노인 증가추이 및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연도별 변화 .....	64
[그림 27]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	65
[그림 28] OECD 국가와 한국의 노인부양율 변화전망 .....	66
[그림 29]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증가추이 .....	67
[그림 30] 2011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	67
[그림 31]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수와 추이 .....	70
[그림 32]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 .....	70
[그림 33] 계층간 소득차이 변화 .....	72
[그림 34] 기초자치단체의 쇠퇴성 분석결과 .....	72
[그림 35]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	74
[그림 36] 연도별 남북 교역액 현황 .....	74
[그림 37] 직종별 가중치 .....	86
[그림 38] 종합 가중치 .....	86
[그림 39] 사회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89
[그림 40] 기술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91
[그림 41] 경제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92
[그림 42] 환경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94
[그림 43] 정치·정책적 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95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08년 6월,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건축의 품격 및 품질, 도시경관 향상 등을 목표로 한 국가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2010년 5월에 수립되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의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하고, 6개 추진 전략과 18개 실천과제, 113개 세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29개 단위사업이 완료되고, 대부분의 과제가 진행 중에 있어 계획수립 초기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어느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가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건축정책기본계획 관련 부처에서 2013년 업무계획을 새롭게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건축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 등 향후 건축분야에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축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건축도시 관련된 정책동향 및 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건축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15년에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어 현 시점에서 지난 1차 건축정책으로 인한 성과를 돌아켜보고,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검토와 미래전망을 예측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국가사회적 여건변화 및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부터 현시점까지의 정책성과를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새정부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건축정책에 반영해야 할 여건변화요소 및 정책아젠다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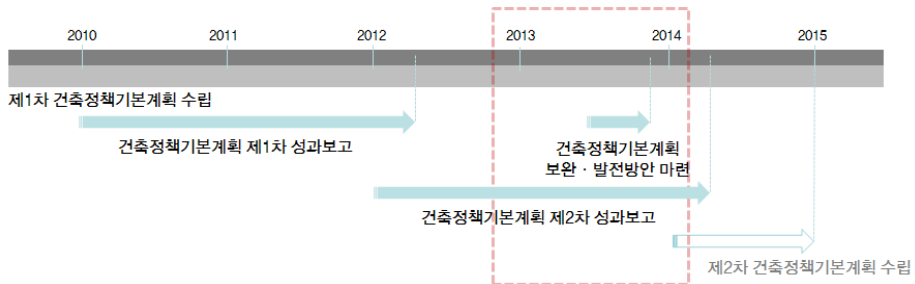
[표 1] 연구의 목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후의 정책성과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검토</li> <li>•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와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li> <li>•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국내 건축·도시분야의 여건변화 및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검토</li> <li>•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여건변화요소 및 새로운 정책 아젠다 제안</li> </ul> |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점인 2010년도 5월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 제2차 성과보고’ 이전까지의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수립될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한다.



[그림 1] 연구 범위의 시점

-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범위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단위사업으로 추진된 성과와 기본계획에 의해 관리되지는 않지만 건축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도시 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에 해당되는 3개 부문인 국토환경디자인 분야, 녹색건축도시 분야, 건축문화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성격에 따라 계획, 제도, 사업, 교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국가사회적 여건변화 및 새 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연구범위

국가사회적 여건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 이후에 발간된 국내외 미래전망 예측보고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

부에서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건축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33개의 과제를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여건변화요소 및 신규 아젠다 제안에 대한 연구범위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미래의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는 대표적 조사연구기법 중 하나인 STEEP법에 의한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영역으로 미래변화를 구분하여 검토하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안할 때에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고려하여 공간복지 디자인부문, 녹색건축 및 산업 육성부문, 건축문화 진흥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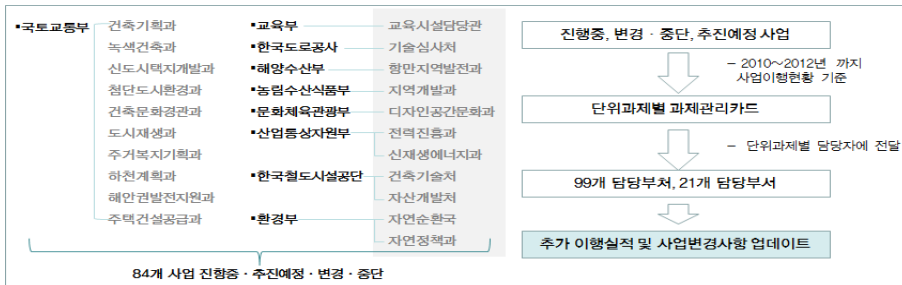
## 2) 연구의 방법

### □ 문헌조사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축정책 동향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는 건축도시와 관련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실적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발표된 국정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연관되어 추진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변화 및 미래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조사분석하였다.

### □ 건축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담당공무원 의견수렴

건축기본법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6조(건축 기본조사)에 근거하여 관련 소관부서별 기본계획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 및 전략과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 중앙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발표 이후의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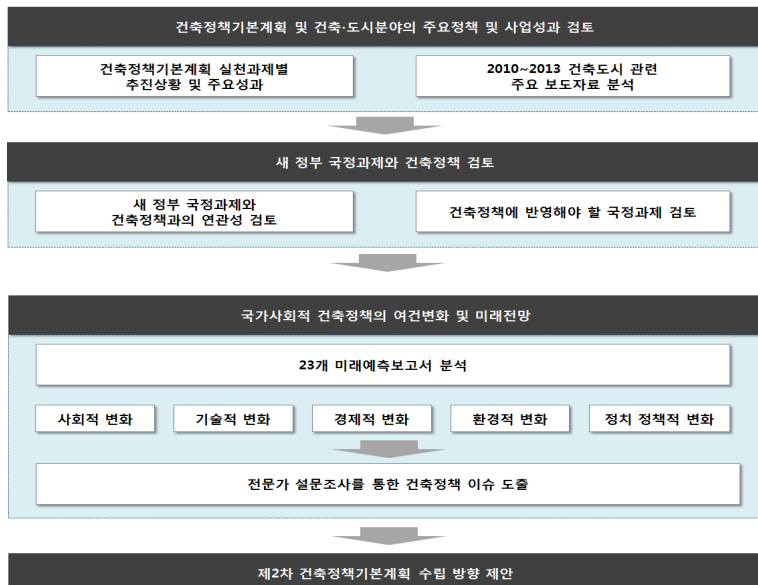


[그림 2] 건축정책 소관별 추진계획 조사대상 및 절차

#### □ 건축정책에 대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실시

건축, 도시, 조경 등 건축정책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 교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사업체 실무 임원, 지자체 건축정책 관련 담당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건축정책 부문에 있어서의 최근 이슈와 메가트렌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과 중요도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 □ 연구흐름도



[그림 3] 연구흐름도

###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 건축정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현황

건축정책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은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문화관광연구원을 중심으로 건축정책에 대한 소소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중앙부처에서는 2년간의 성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인천, 전북, 충남, 대구·경북,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사회적인 여거변화와 미래를 예측하는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3장에서 별도로 조사·분석하였다.

[표 2]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건축 정책 기본 계획 관련 연구	1 -과제명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2-2014)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2010) -연구목적: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법·제도 재개정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 -대국민 인식조사 -중앙부처·지자체 소관별 시책조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기본계획(안) 마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대통령 보고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의 구현을 위하여 3대목표와 6대 전략을 제시하고 18개 실천과제를 도출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도출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매년 전략별 실천과제 성과를 측정하고, 계획추진 현황, 추진실적 등 위원회 재평가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 2년마다 주요 성과 및 추진현황 국회보고의 지침 마련 -실천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수립
	2 -과제명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연구자(년도): 김상호, 김형현(2009) -연구목적: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수립중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 모색	-국내·외 성과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조사분석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청취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분석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해외 주요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의 운용현황 파악 및 분석 -국내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사례 조사분석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li> <li>-연구자(년도): 조상규, 김영현(2012)</li> <li>-연구목적: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건축 정책기본계획 단위·교제별 주요 성과내용을 2년마다 모니터링 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행연구 검토</li> <li>-국내외 사례조사 및 국토해양부 내부 사업점검 자료 및 추진자료, 성과계획서 등 조사분석</li> <li>-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전문가 설문조사</li> <li>-중앙부처 및 지자체 보도 자료 조사</li> <li>-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건축정책기본 계획 단위·교제별 사업추진 현황 조사 분석</li> <li>-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li> <li>-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li> <li>-건축환경, 문화창달을 위한 지역의 품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li> <li>-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li> <li>-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li> <li>-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보완·발전 방안 도출</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li> <li>-연구자(년도): 김효정(2008)</li> <li>-연구목적: 건축문화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건축문화의 개념 및 정책동향 분석, 건축문화정책의 범위와 목표 설정을 통해 부처별 정책 추진 기본방향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li> <li>-관련 법규 검토</li> <li>-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정책 추진 부서의 업무 및 활동분석</li> <li>-전문가 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건축문화정책동향, 주요국가의 건축문화추진방향 분석</li> <li>-현 건축문화정책의 문제점 분석</li> <li>-건축문화정책 필요성제기</li> <li>-건축문화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제안</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광주 건축정책 기본계획과 건축디자인 기준의 수립 방안 연구</li> <li>-연구자(년도): 정성구 (2009)</li> <li>-연구목적: 광주시 광역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아젠다 설정 및 세부 실천과제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기본법 및 건축정책 기본계획 검토</li> <li>-건축정책 및 건축디자인 기준에 대한 해외사례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시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 제안</li> <li>-광주시 건축디자인기준 수립방향 설정</li> <li>-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li> <li>-공개토론회, 컨설팅, 이벤트 등 공공 프로그램 개발</li> <li>-건축디자인 거버넌스 기반 강화</li> <li>-건축도시 관련 지표 설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li> <li>-지역근대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기반 마련</li> <li>-국제건축도시문화제 개최</li> <li>-건축디자인 자문단 운영 및 활용</li> </ul>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지역 건축 기본 계획 관련 연구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서울시 건축기본계획</li> <li>-연구자(년도): 서울시립대(2010)</li> <li>-목적: 실천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조례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 기본법 및 유사법정 기본계획 구성 체계 검토</li> <li>-국내 및 해외 선진 건축정책 사례조사</li> <li>-현재 진행중인 정책 및 사업동향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문화의 지역특성화를 통한 서울 브랜드화</li> <li>-건축문화 기반구축</li> <li>-녹색 건축·도시 환경 기반구축</li> <li>-건물 생애주기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li> <li>-건축·도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li> <li>-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li> </ul>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li> <li>-연구자(년도):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2011)</li> <li>-목적: 경기도 건축·도시환경 품격향상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및 지역내 중복·유사사업 총괄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 기본법 및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분석</li> <li>-경기도 종합계획, 특정경관계획, 주택종합계획 등 법에 근거한 계획 및 비법정 계획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공간 품격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주거환경 조성</li> <li>-효율적인 디자인품질 관리체계 구축</li> <li>-녹색건축 도시 관련 기준 정비</li> <li>-녹색 도시환경조성기반 마련</li> <li>-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li> <li>-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li> </ul>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li> <li>-연구자(년도): 전북발전연구원(2012)</li> <li>-목적: 건축·도시 부문의 통합적 관리와 공공성 구현 및 건축·도시 경쟁력 강화,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설정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분석</li> <li>-타시·도 건축 기본계획 분석</li> <li>-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li> <li>-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분석</li> <li>-국외 건축정책 사례 및 시사점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li> <li>-광역건축기본계획 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제도 및 실천방안</li> <li>-6개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도출</li> <li>-6개 핵심전략사업 제시</li> </ul>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li> <li>-연구자(년도): 인천발전연구원(2013)</li> <li>-목적: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기준 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li> <li>-타시·도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li> <li>-지자체 건축기준 체크리스트 수립을 통한 필요항목 검토</li> <li>-전문가 자문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건축 다양성 보존 및 건축 품격 향상</li> <li>-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조례 제정</li> <li>-정주환경의 다양성 보존 및 주거환경 향상</li> <li>-친환경 건축 및 녹색문화 공간 활성화</li> <li>-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li> <li>-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조성</li> <li>-건축행정 시스템 구축 및 발주방식과 제도 개선</li> </ul>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부산광역시	-과제명: 부산건축기본계획 -연구자(년도): 부산시(2012) -목적: 부산시 도시 품격 및 경쟁력 향상과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건축 기본법, 경관법 및 관련 조례 검토 -부산시 광역도시계획, 행복마을 만들기 등 법정 및 비법정 계획 분석 -타시·도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국외 건축정책사례 분석	-구·군 건축기본계획 및 정책 과제와 실행과제 수립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평가를 위한 '건축정책 이니셔티브' 운영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간의 정합성 유지와 유기적 연계방안 구축
	대전광역시	-과제명: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연구자(년도): 대전발전연구원(2012) -목적: 건축·도시관련 정책에 대해 중,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실천 계획 수립	-타시·도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국외 건축정책 사례 및 시사점 분석 -대전시 건축·도시 관련 주요 사업 분석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세부 추진사업 도출 및 계획안 수립 -자문 기구로서 건축정책위원회 필요성 제언 -커뮤니티 주도형 도시디자인 및 주거복지 구현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 및 관리 체계 구축 -역사적 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건축행정체계 개선
기타	4	-과제명: 「국토 대예측 연구(I)」 -연구자(년도): 이용우 외(2009, 국토연구원) -연구목적: 해외 국토 관련 예측 사례 조사·분석 및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국토관련 예측 사례 조사·분석 -전문가 특강 및 독서 토론회 -미래국토포럼 및 연구회 -원외 교육을 통한 미래 예측방법론 학습	-프랑스, 미국, 영국의 국토관련 예측사례 분석 -정치, 사회, 과학기술, 환경·자원, 통일 분야별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연구		-과제명 :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연구목적 :새 국정과제에 대한 검토 및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와 연계추진 가능한 정책 및 사업점검과 여건변화를 고려한 실행계획의 재점검 및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방향 정립	-문헌조사 및 해외의 신규 정책사례 조사 분석 -건축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단 구성·운영	-건축·도시분야의 주요정책 및 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 -국가사회적 메가트렌드별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대한 고찰 -건축·도시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정과제에 대한 검토

## □ 본 연구의 차별성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08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차원의 건축정책에 관한 전략계획으로서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와 지역차원에서의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와 관련되어 건축도시분야의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을 위한 과제로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국토 대예측 연구」로 정치, 사회, 과학 기술, 환경자원, 통일 등 분야별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과 프랑스와 미국, 영국의 국토관련 예측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새롭게 발표된 국정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와 연계추진 가능한 정책 및 사업, 현행 사업방향 및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과제, 새로운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로 선행연구와 차별을 가진다.

## 제2장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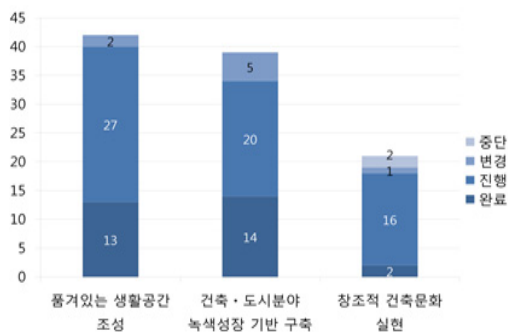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성과
2. 건축·도시 주요 정책동향

###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성과

#### 1)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행현황 및 성과

2010년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2012년까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13개의 세부 단위사업 중 29개 사업이 완료되고, 63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10개사업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다.<sup>1)</sup> 전체 단위과제 추진 사업 102개 중 약 90.2%정도인 92개 단위사업이 이행·완료되어 진행률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계획 부문별 성과를 살펴보면,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



[그림 4] 기본계획부문별 이행상황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국회보고자료 '2010-2012 건축정책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성부분은 42개 단위과제 중 13건(약 31%)이 완료되고, 27건이 진행(약64.3%) 중이고, 녹색성장 기반구축부분은 39개 단위과제 중 14건(약 35.9%)이 완료되고, 20건(약51.3%)이 진행 중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실현부분은 21개 단위과제 중 2건(약 9.5%)만이 완료되고, 16건(76.2%)은 진행 중이었다.

[표 3] 건축정책기본계획 2010~2012년 대상 단위사업별 이행 현황

목표 (부문별)	추진전략	세부과제	단위 과제 추진 사업	사업진행현황(건)				
				완료	진행	변경	중단	추진 예정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29)	1-1.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13	6	7	-	-	-
		1-2.SOC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10	4	6	-	-	-
		1-3.공공기관 디자인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6	1	4	-	-	1
	2. 건축·도 시환경 개선 (14)	2-1.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8	1	5	2	-	-
		2-2.민·관이 협력하여 도심재창조	6	1	5	-	-	-
		합 계	43	13	27	2	-	1
건축· 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3. 녹색·건 축도시 구현 (20)	3-1.탄소저감형 건축·도시환경 조성	3	-	3	-	-	-
		3-2.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7	6	1	-	-	-
		3-3.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6	1	4	1	-	-
		3-4.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4	-	4	-	-	-
	4. 건축·도 시 산업의 고도화 (19)	4-1.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7	3	2	2	-	-
		4-2.마태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6	2	2	2	-	-
		4-3.핵심기술 및 설계기법 개발촉진	6	2	4	-	-	-
		합 계	39	14	20	5	-	-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15)	5-1.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6	1	4	1	-	-
		5-2.지역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 문화 창조	4	1	3	-	-	-
		5-3.지역별 대표가리(브랜드가리) 조성 사업 추진	5	-	3	-	2	-
	6. 건축 문화의 세계화 촉진 (16)	6-1.국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실현	6	-	4	-	-	2
		6-2.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4	-	-	-	-	4
		6-3.건축문화역량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6	-	2	-	-	4
		합 계	31	2	16	1	2	10
총 계			113	29	63	8	2	11

\*출처 : 조상규 외(2012)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 , p.30~31.

## 2)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침 마련 및 사업 추진

### □ 도시경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부문에 대해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경관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가로환경에서의 간판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농어촌지역의 유형별 경관계획 및 경관개선 시범사업이 기획·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는 도시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SOC국가기간시설 유형별 디자인 매뉴얼, 항만디자인 표준 및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시설유형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조성단계별 준수해야 할 디자인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운영지침도 개발되었다.

### □ 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심의절차 개선 관련 법제도 개선

앞서 설명한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토대로 경관심의 및 공공건축 디자인 과정에서의 심의가 강화되는 법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공공적 성격의 건축 및 공공공간 조성시 가격입찰이 아닌 공모에 의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다.

### □ 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SOC 도시기반시설 디자인 강화, 테마별 경관도로 조성, 랜드마크시설의 경관개선, 학교시설 디자인 강화 등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디자인 기획, 설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과 전담지원조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4] 건축정책기본계획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의 추진현황

진행 상황	단위과제 (사업)	과제 유형
완료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수립(매뉴얼)
	간판문화 개선계획 수립, 시범사업추진	
	농어촌지역 유형별 경관계획 수립·시행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가이드라인 제정, 지자체 차원의 경관계획 및 관련지침 보완 추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2008)에 따른 시설별 디자인 매뉴얼 작성	
	디자인 개선 중기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지원
	항만디자인 표준과 지침을 마련	
	바람직한 디자인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하는 디자인 업무기준 제정	
	특별건축구역의 가이드라인 제공	연구 및 교육
	친환경 친수공간의 생태하천 조성	
진행	다중이용시설내 사인물, 입주업체 간판정비 등 추진	사업추진 및 지원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주거모델 개발·보급	
	복합용도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및 사업방식 다각화	연구 및 교육
	입체적 공간계획 수립, 총괄계획 기능강화 및 디자인 심의절차 강화	
	경관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관심의 강화	법제도 개선
	지자체 경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설계디자인 공모제도 도입	
	우수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는 발주방식 도입과 제도화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	
	기존 법령의 재정비를 통한 법제개편 추진	
	공동주택·공공건축물의 안허가시 디자인심의 강화	
	체감형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	사업추진 및 지원
	도시기반시설에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고 지속적인 디자인 향상 유도	
	친환경 친수공간의 생태하천 조성	
	농어촌 경관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특성을 반영한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 기존역사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인 환경정비 추진	
	사용이 중단된 폐선부지를 문화관광시설로 활용	
	테마별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랜드마크시설 도입, 경관등대 조성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특화 추진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학교시설의 디자인 강화	연구 및 교육
	지자체의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간 협력설계 추진	
	공공부문의 건축·도시 관련 디자인 기획과정 강화	
	공공건축과 시설물의 유형별 특화된 설계과정 평가지표(DQI)를 개발하여 보급	



진행 상황	단위과제 (사업)	과제 유형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조직 모델 보급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주택에 대한 시상·포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다양한 사업방식의 개발과 포괄적 도시재생 방식 도입	
	유형별 맞춤형 재생전략 수립 지원	

### 3)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 및 연구 진행

#### □ 녹색건축 구현을 위한 인증 및 설계기준 강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녹색건축과 관련된 제도가 다수 개정되고, 설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산업에 관해서는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 □ 녹색건축에 관한 다양한 시범사업 기획 및 추진

그린홈을 비롯한 녹색학교 시범사업, 실험적인 탄소제로 건축 테스트베드 사업, 미래형 스마트 그린시티 시범단지 등 에너지절감 관련 사업 및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교육이 다수 수행되었다.

[표 5] 건축정책기본계획 녹색성장기반 구축 부문의 추진현황

진행 상황	단위과제 (사업)	과제 유형
완료	에너지 소비총량제로 건축물의 유형별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 단계적 강화	계획수립
	친환경건축물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창호의 단열기준 50% 강화 및 냉방저감을 위한 기준 신설	법제도 개선
	대기전력 차단장치, LED조명 등 에너지절약 설비 적용 확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공동주택에서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학위취득자 중심으로 개선	

진행 상황	단위과제 (사업)	과제 유형
	에너지절약, 친환경, 생태조화성, 안전성, 사용성 등 건축 및 조경 분야 주요 성능별로 기준 제정	
	건축 및 조경관련 내진기준 안전대책 강화	
	에너지소비량 인터넷 공개방안 마련	
	건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수련 요건을 도입	연구 및 교육
	자격등록 및 2년마다 정기 연수교육을 이수	
	국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추진	
	건축설비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모색	
진행	임대주택 개보수,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100만호를 고효율화	계획수립
	평가기준주택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수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	법제도 개선
	건축 및 조경관련 방재기준 강화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의 설치 확대	사업추진 및 지원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추진	
	보금자리주택으로 연 10만호씩(2009~2018년) 100만호 이상 공급	
	미래형 Smart-Green City 시범단지 조성	
	에너지 절약형 녹색학교 건축방안 마련	
	친환경에너지절약 체감형 녹색학교로의 개선추진	
	친환경신기술을 적용한 탄소제로 건축 Test-Bed 사업 추진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분야의 신진 설계자 대상 설계공모를 시행	연구 및 교육
	자원재순환형 도시조성 기술 개발	
	친환경 저에너지 부문의 건축설계시공 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한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BIM 작성체계 구축	
	건축도시분야의 첨단 선진 설계기술 개발 연구 추진	
	초고층 건축물 및 수직 도시공간 등을 설계·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IT기술과 녹색기술의 융·복합 추진	
	초고층·복합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	

#### 4)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벤트 추진

건축문화 부문에 대해서는 한옥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범사업이 주를 이루어졌다. 그 밖에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DB 구축 및 유희시설 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6] 건축정책기본계획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부문의 추진현황

진행 상황	단위과제 (사업)	과제 유형
완료	공공부문 지원을 통한 한옥 활성화방안 검토	연구 및 교육
	구 서울역사의 원형복원 및 문화 공간 조성 추진	사업추진 및 지원
진행	한옥 건축 기술기준 마련, 자재 표준화, 생산기술, 설계기준 등 연구 추진	계획수립
	디자인 특화전략 수립, 경관계획 수립, 특정지역 가이드라인 마련	
	한옥건축물 대수선, 신축 등 건축행위에 대한 재정 지원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의 예산 및 기술 지원	사업추진 및 지원
	한옥스타일 공동주택 건설, 한옥 개인주택단지 건설 등 추진	
	근대 산업유산 및 유희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유희시설을 주거용도(Transit Housing)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검토	
	폐교나 농어촌 유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지역의 공간적 중심성 회복, 지역 정체성 강화	연구 및 교육
	각종 건축문화행사에 대한 차별화와 통합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건축문화행사 활성화	
	건축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주요 건축기록물의 수집·확보, 관리·보관전시를 위한 공간 확보와 전문 인력 육성	
	국가차원에서 우수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선정하여 DB를 구축	시스템 구축
	우수한 건축문화와 관련된 기록물의 축적관리 시스템 구축	

## 2. 건축도시 주요 정책동향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2010)에 따른 건축정책 동향, 성과 및 이행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도시 관련 주요 보도자료를 모니터링 하였다. 수집한 보도자료는 건축정책기본계획 3대 목표에 따라 ①건축문화 ②녹색건축도시 ③국토환경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해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사업추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행사 및 홍보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조사·분석하였다.

### 1) 추진주체별 정책동향

추진주체별 정책동향 분석은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매년 발표하던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의 비율은 다양하게 집계되었으나 중앙부처의 경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활발히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정책동향의 경우 ‘건축문화’ 부문 관련 보도자료는 2011년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녹색건축도시’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다음해 급증한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201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3개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보도자료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부문별 차이가 다소 컸으나, 2013년에는 부문별 차이가 상당수 감소하였다.

[표 7]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보도자료 추이

연도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	합계
2010(5-12월)	94(27.4%)	62(18.1%)	187(54.5%)	343(100%)
2011	59(12.3%)	144(30.0%)	278(57.8%)	481(100%)
2012	66(15.3%)	112(26%)	254(58.8%)	432(100%)
2013(1-6월)	80(26.2%)	88(28.9%)	137(44.9%)	305(100%)

## ① 2010년 건축·도시 정책동향

### □ 2010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2010년 건축·도시 정책동향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점인 5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앙부처 6곳 91(26.5%)건, 지방자치단체 252(73.5%)건이 집계되었다.

22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 국토교통부, 서울시에서 관련시책이 주로 보도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74건으로 전체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 중 21.6%를 차지하였다. 국토교통부 외 중앙부처는 1~7건의 분포를 보였으며 서울시(47건) 외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1건(인천광역시)에서 30건(부산광역시)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건축문화

‘건축문화’ 부문의 경우, 6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94건(27.4%)의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5건, 부산시 16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 중 환경부에서 1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나머지 부처는 관련시책을 보도하지 않았다. 부산시 외 지자체는 최소2건(충북도청)에서 최대 15건(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경남도청의 경우 관련시책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녹색건축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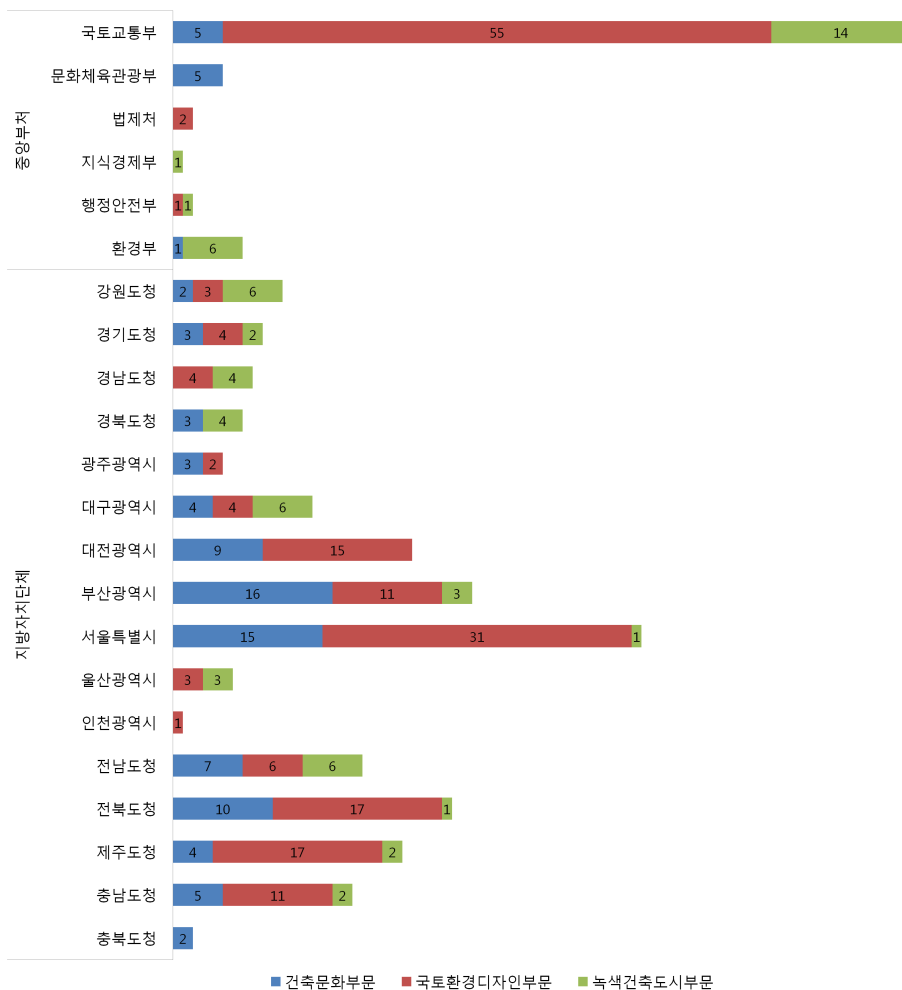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 총 62건(18.1%)의 건축·도시 관련시책이 발표되었으며, 이중 국토교통부 14건, 강원도청, 전남도청, 대구광역시가 각 6건의 관련시책을 보도하였다. 국토교통부 외 중앙부처는 0~6건의 관련시책을 보도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0~4건으로 집계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이 ‘건축문화’ 부문보다 32건 적게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경우 ‘건축문화’ 부문보다 11건 많은 관련시책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토환경디자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총 187건(54.5%)건의 건축·도시 관련시책이 발표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55건, 서울시에서 31건 관련시책을 보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 외 중앙부처의 경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2건과 1건의 관련시책을 보도하였으며, 서울시 외 지자체는 최소 0건(충북도청, 경북도청)에서 최대17건(전북도청, 제주도청)의 관련 시책을 보도하였다.

[표 8] 2010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구분	추진주체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6)	국토교통부	5(1.5%)	14(4.1%)	55(16.0%)	74(21.6%)
	문화체육관광부	5(1.5%)	—	—	5(1.5%)
	법제처	—	—	2(0.6%)	2(0.6%)
	지식경제부	—	1(0.3%)	—	1(0.3%)
	행정안전부	—	1(0.3%)	1(0.3%)	2(0.6%)
	환경부	1(0.3%)	6(1.7%)	—	7(2.0%)
	합계	11(3.2%)	22(6.4%)	58(16.9%)	91(26.5%)
지방자치 단체 (16)	강원도청	2(0.6%)	6(1.7%)	3(0.9%)	11(3.2%)
	경기도청	3(0.9%)	2(0.6%)	4(1.2%)	9(2.6%)
	경남도청	—	4(1.2%)	4(1.2%)	8(2.3%)
	경북도청	3(0.9%)	4(1.2%)	—	7(2.0%)
	광주광역시	5(1.5%)	—	2(0.6%)	7(2.0%)
	대구광역시	4(1.2%)	6(1.7%)	4(1.2%)	14(4.1%)
	대전광역시	7(2.0%)	—	15(4.4%)	22(6.4%)
	부산광역시	16(4.7%)	3(0.9%)	11(3.2%)	30(8.7%)
	서울특별시	15(4.4%)	1(0.3%)	31(9.0%)	47(13.7%)
	울산광역시	—	3(0.9%)	3(0.9%)	6(1.7%)
	인천광역시	—	—	1(0.3%)	1(0.3%)
	전남도청	7(2.0%)	6(1.7%)	6(1.7%)	19(5.5%)
	전북도청	10(2.9%)	—	17(5.0%)	28(8.2%)
	제주도청	4(1.2%)	1(0.3%)	17(5.0%)	23(6.7%)
	충남도청	5(1.5%)	2(0.6%)	11(3.2%)	18(5.2%)
	충북도청	2(0.6%)	2(0.6%)	—	2(0.6%)
	합계	83(24.2%)	40(11.7%)	129(37.6%)	252(73.5%)
전체	총합계	94(27.4%)	62(18.1%)	187(54.5%)	343(100%)



[그림 5] 2011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② 2011년 건축·도시 정책동향

### □ 2011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2011년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 10곳 106건(22%), 지방자치단체 16곳 375건(78%) 등 총 481건의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 집계되었다. 26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주로 국토교통부, 제주도, 서울시, 부산시에서 관련시책이 집중 보도되었고, 국토교통부가 76건(15.8%)로 가장 많은 건축·도시 관련시책을 보도하였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특허청은 각 2건, 지식경제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각 1건의 건축·도시관련 시책을 보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부산,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5건(경북도청)에서 최대 33건(충남도청)의 건축·도시 관련 시책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건축문화

‘건축문화’ 부문은 전체 812건 중 59건(12.3%)으로 녹색건축 및 국토환경디자인 부문보다 건축·도시 관련시책이 적었으며, 추진주체별로는 중앙부처가 18건, 지방자치단체는 41건으로 분석되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구시가 7건, 서울시가 5건 그 외 나머지 지자체는 4건 이하로 집계되었다. ‘건축문화’ 부문은 2010년 대비 94건에서 59건으로 관련시책이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녹색건축도시

‘녹색건축도시’ 부문은 총 144건(30%)으로 중앙부처가 25건, 지방자치단체가 119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앙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0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시와 전남도청이 각 12건으로 가장 많은 건축·도시 관련시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경우 지자체에서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졌는데(2010년 40건, 2011년 119건), 이는 녹색성장 기반구축 목표를 기반으로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친환경 주택건설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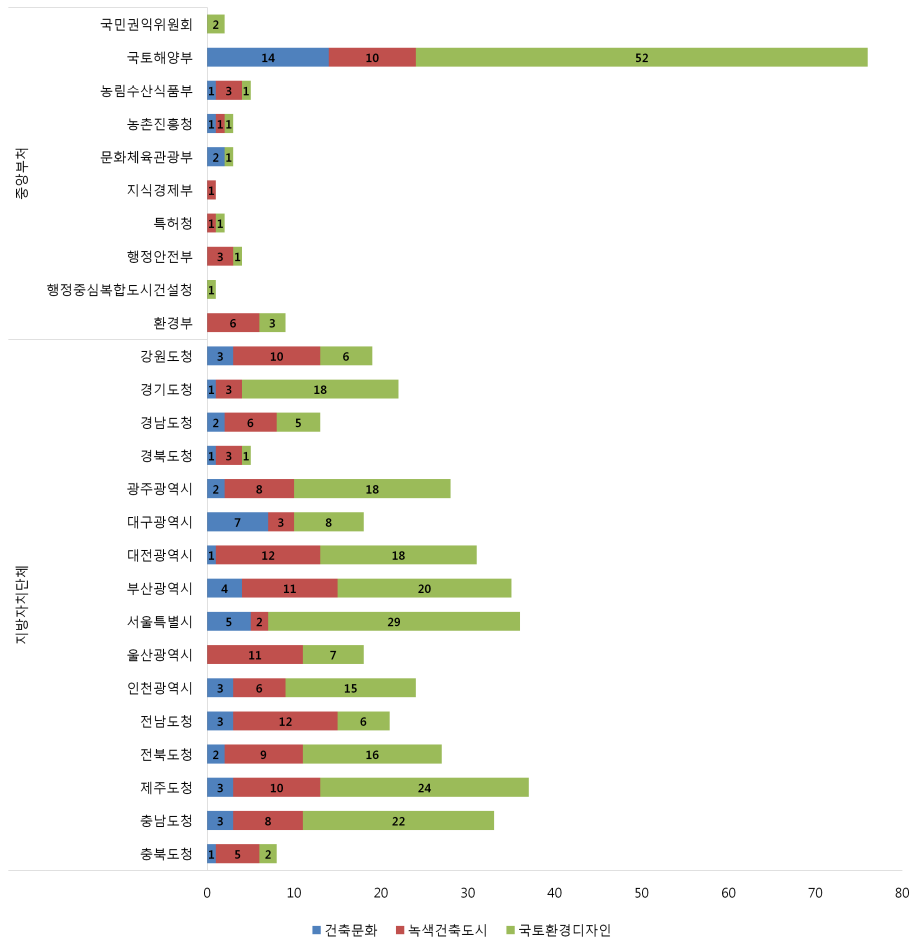
급 활성화 등 녹색건축 관련 전략 및 실천과제에 의해 관련시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 국토환경디자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총 278건(57.8%)으로, 이중 중앙부처가 63건, 지방자치단체가 215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다. 중앙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52건, 나머지 부처는 3건 이하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시 29건 외 지자체는 최소 1건(경북도청)에서 최대 24건(제주도)의 관련시책을 발표하였다.

[표 9] 2011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구분	추진주체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10)	국민권익위원회	-	-	2(0.4%)	2(0.4%)
	국토해양부	14(2.9%)	10(2.1%)	52(10.8%)	76(15.8%)
	농림수산식품부	1(0.2%)	3(0.6%)	1(0.2%)	5(1.0%)
	농촌진흥청	1(0.2%)	1(0.2%)	1(0.2%)	3(0.6%)
	문화체육관광부	2(0.4%)	-	1(0.2%)	3(0.6%)
	지식경제부	-	1(0.2%)	-	1(0.2%)
	특허청	-	1(0.2%)	1(0.2%)	2(0.4%)
	행정안전부	-	3(0.6%)	1(0.2%)	4(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1(0.2%)	1(0.2%)
	환경부	-	6(1.2%)	3(0.6%)	9(1.9%)
	중앙부처 합계	18(3.7%)	25(5.2%)	63(13.1%)	106(22.0%)
지방자치 단체 (16)	강원도청	3(0.6%)	10(2.1%)	6(1.2%)	19(4.0%)
	경기도청	1(0.2%)	3(0.6%)	18(3.7%)	22(4.6%)
	경남도청	2(0.4%)	6(1.2%)	5(1.0%)	13(2.7%)
	경북도청	1(0.2%)	3(0.6%)	1(0.2%)	5(1.0%)
	광주광역시	2(0.4%)	8(1.7%)	18(3.7%)	28(5.8%)
	대구광역시	7(1.5%)	3(0.6%)	8(1.7%)	18(3.7%)
	대전광역시	1(0.2%)	12(2.5%)	18(3.7%)	31(6.4%)
	부산광역시	4(0.8%)	11(2.3%)	20(4.2%)	35(7.3%)
	서울특별시	5(1.0%)	2(0.4%)	29(6.0%)	36(7.5%)
	울산광역시	-	11(2.3%)	7(1.5%)	18(3.7%)
	인천광역시	3(0.6%)	6(1.2%)	15(3.1%)	24(5.0%)
	전남도청	3(0.6%)	12(2.5%)	6(1.2%)	21(4.4%)
	전북도청	2(0.4%)	9(1.9%)	16(3.3%)	27(5.6%)
	제주도청	3(0.6%)	10(2.1%)	24(5.0%)	37(7.7%)
	충남도청	3(0.6%)	8(1.7%)	22(4.6%)	33(6.9%)
	충북도청	1(0.2%)	5(1.0%)	2(0.4%)	8(1.7%)
	합계	41(8.5%)	119(24.7%)	215(44.7%)	375(78.0%)
전체	총합계	59(12.3%)	144(30.0%)	278(57.8%)	481(100%)



[그림 6] 2011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③ 2012년도 건축·도시 정책동향

#### □ 2012년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2012년도 건축·도시 관련시책을 발표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 24곳으로 2011년 26곳 대비 2곳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대상은 그대로인 반면 중앙부처의 경우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제외되고 문화재청, 산림청, 조달청 등 3개 부처가 추가되었다.

2012년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 8곳에서 65건(15%), 지방자치단체 16곳에서 367건(85%) 등 총 432건의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가 집계되었다. 24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에서 관련시책이 집중 보도되었고, 국토교통부는 42건을 발표하여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은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32건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시책이 주를 이루었다.

[표 10] 2012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구분	추진주체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8)	국민권익위원회	—	1(0.2%)	1(0.2%)	2(0.5%)
	국토교통부	3(0.7%)	7(1.6%)	32(7.4%)	42(9.7%)
	농림수산식품부	—	—	4(0.9%)	4(0.9%)
	문화재청	1(0.2%)	—	1(0.2%)	2(0.5%)
	산림청	—	3(0.7%)	1(0.2%)	4(0.9%)
	조달청	—	1(0.2%)	—	1(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0.2%)	1(0.2%)	2(0.5%)
	환경부	—	8(1.9%)	—	8(1.9%)
	합계	4(0.9%)	21(4.9%)	40(9.3%)	65(15%)

지방자치 단체 (16)	강원도청	2(0.5%)	7(1.6%)	10(2.3%)	19(4.4%)
	경기도청	6(1.4%)	7(1.6%)	23(5.3%)	36(8.3%)
	경남도청	2(0.5%)	6(1.4%)	9(2.1%)	17(3.9%)
	경북도청	4(0.9%)	2(0.5%)	7(1.6%)	13(3.0%)
	광주광역시	5(1.2%)	8(1.9%)	16(3.7%)	29(6.7%)
	대구광역시	8(1.9%)	4(0.9%)	11(2.5%)	23(5.3%)
	대전광역시	4(0.9%)	6(1.4%)	10(2.3%)	20(4.6%)
	부산광역시	8(1.9%)	5(1.2%)	14(3.2%)	27(6.3%)
	서울특별시	5(1.2%)	3(0.7%)	25(5.8%)	33(7.6%)
	울산광역시	1(0.2%)	8(1.9%)	6(1.4%)	15(3.5%)
	인천광역시	—	2(0.5%)	12(2.8%)	14(3.2%)
	전남도청	3(0.7%)	9(2.1%)	11(2.5%)	23(5.3%)
	전북도청	3(0.7%)	6(1.4%)	23(5.3%)	32(7.4%)
	제주도청	3(0.7%)	5(1.2%)	12(2.8%)	20(4.6%)
	충남도청	4(0.9%)	7(1.6%)	14(3.2%)	25(5.8%)
	충북도청	4(0.9%)	6(1.4%)	11(2.5%)	21(4.9%)
	합계	62(14.4%)	91(21.1%)	214(49.5%)	367(85%)
전체	총합계	66(15.3%)	112(26%)	254(58.8%)	432(100%)

#### □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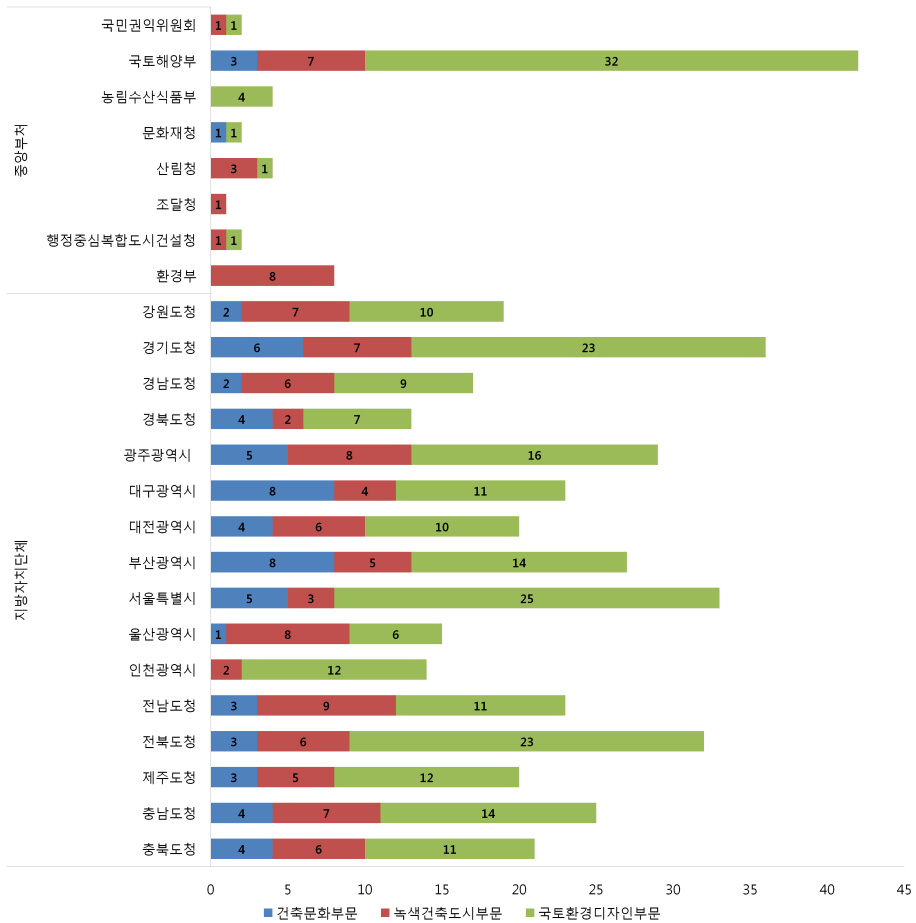
‘건축문화’ 부문은 전년도 대비 3건 증가한 총 66건(15.3%)의 건축·도시 관련 시책이 보도되었으며, 이중 국토교통부 3건, 부산·대구 광역시가 각각 8건 보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 외 중앙부처는 문화재청에서 1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0건(인천광역시)에서 최대 6건(경기도청)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 □ 녹색건축도시

‘녹색건축도시’ 부문은 전년도 대비 32개 감소한 총 112(26%)건의 건축·도시 관련 시책이 보도되었으며, 이중 환경부 8건, 전남도청이 9건으로 집계되었다. 환경부를 제외한 중앙부처는 0-7건의 분포를 보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2건(인천광역시)에서 최대 8건(광주광역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 □ 국토환경디자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전년도 대비 24건 증가한 총 254(58.8%)건의 건축·도시 관련시책 보도되었으며, 이중 국토교통부 32건, 서울시 25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 외 나머지 중앙부처는 0-4건,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6건(울산광역시)에서 최대23건(전북도청, 경기도청)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그림 7] 2012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④ 2013년도 건축·도시 정책동향

##### □ 2013년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2013년도 상반기(1월~6월) 건축·도시 관련시책을 발표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 27곳으로 작년대비 3곳이 증가하였으며 중앙부처 12곳, 지방자치단체는 15곳으로 나타났다.

6개월간 발표된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는 총 305개로 작년보다 건축·도시 관련시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앙부처 12곳에서 101건, 지방자치단체 15곳에서 204건이 집계되었다. 27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중 주로 국토교통부, 서울시에서 관련시책이 집중 보도되었고,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는 1~10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2건으로 가장 적은 건축·도시 관련시책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5건(21.3%)을 발표하여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은 관련시책을 보도하였고, 이중 30건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해당하는 시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으로 이와 관련 사업이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사업으로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서 중점 보도되었다.

##### □ 건축문화

‘건축문화’ 부문의 작년대비 16건 증가한 총 80건(26.23%)의 건축·도시 관련시책이 보도되었으며, 이중 국토교통부 15건, 서울시 13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는 0~2건의 관련시책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0~5건으로 집계되었다.

##### □ 녹색건축도시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7개 중앙부처,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 대비 24건이 감소한 총 88건(28.85%)의 건축·도시 관련시책 보도되었으며, 이중 국토교통부 20건, 서울시 9건, 강원도 6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는 0-4건의 관련시책을 보도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1-6건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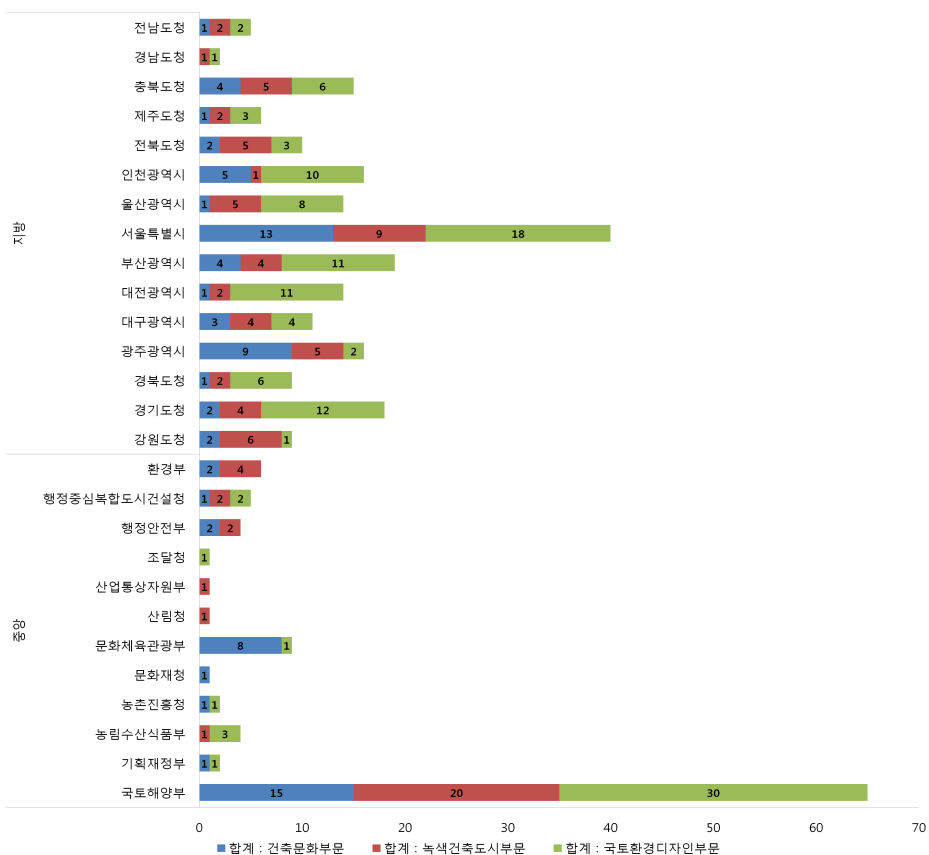
#### □ 국토환경디자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현재까지 작년대비 117건 감소한 총 137건 (44.92%)의 건축·도시 관련시책이 보도되었으며, 이중 국토교통부 30건, 서울시는 18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는 0-3건의 관련시책을 보도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2건에서 19건의 분포를 보였다.

[표 11] 2012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구분	추진주체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12)	국토교통부	15(4.9%)	20(6.6%)	30(9.8%)	65(21.3)
	기획재정부	1(0.3%)	—	1(0.3%)	2(0.7%)
	농림수산식품부	—	1(0.3%)	3(1%)	4(1.3%)
	농촌진흥청	1(0.3%)	—	1(0.3%)	2(0.7%)
	문화재청	1(0.3%)	—	—	1(0.3%)
	문화체육관광부	8(2.6%)	—	1(0.3%)	9(3%)
	산림청	—	1(0.3%)	—	1(0.3%)
	산업통상자원부	—	1(0.3%)	—	1(0.3%)
	조달청	—	—	1(0.3%)	1(0.3%)
	행정안전부	2(0.7%)	2(0.7%)	—	4(1.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0.3%)	2(0.7%)	2(0.7%)	5(1.6%)
	환경부	2(0.7%)	4(1.3%)	—	6(2%)
	합계	31	31	39	101
지방자치 단체 (15)	강원도청	2(0.7%)	6(2%)	1(0.3%)	9(3%)
	경기도청	2(0.7%)	4(1.3%)	12(3.9%)	18(5.9%)
	경북도청	1(0.3%)	2(0.7%)	6(2%)	9(3%)
	광주광역시	9(3%)	5(1.6%)	2(0.7%)	16(5.2%)
	대구광역시	3(1%)	4(1.3%)	4(1.3%)	11(3.6%)
	대전광역시	1(0.3%)	2(0.7%)	11(3.6%)	14(4.6%)
	부산광역시	4(1.3%)	4(1.3%)	11(3.6%)	19(6.2%)
	서울특별시	13(4.3%)	9(3%)	18(5.9%)	40(13.1%)
	울산광역시	1(0.3%)	5(1.6%)	8(2.6%)	14(4.6%)
	인천광역시	5(1.6%)	1(0.3%)	10(3.3%)	16(5.2%)

	전북도청	2(0.7%)	5(1.6%)	3(1%)	10(3.3%)
	제주도청	1(0.3%)	2(0.7%)	3(1%)	6(2%)
	충북도청	4(1.3%)	5(1.6%)	6(2%)	15(4.9%)
	경남도청	—	1(0.3%)	1(0.3%)	2(0.7%)
	전남도청	1(0.3%)	2(0.7%)	2(0.7%)	5(1.6%)
	합계	49	57	98	204
전체	총합계	80(26.23%)	88(28.85%)	137(44.92%)	305



[그림 8] 2012년 추진주체별 건축·도시 정책동향



## 2) 분야별 정책동향

분야별 정책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①계획수립 ②법·제도 개선 ③사업추진 및 지원 ④시스템 구축 ⑤연구 및 교육 ⑥행사 및 홍보 등 총 6개로 세분화 하였으며, 상위 3개 항목(건축문화부문, 녹색건축도시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대해 각 부문별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녹색건축도시’ 부문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보도자료가 주로 발표되었으며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행사 및 홍보’ 관련 내용이 주로 보도되었다. ‘법·제도 개선’의 경우 건축기본계획수립 다음해인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점진적인 감소를 보였다.

### ① 2010년 건축·도시 정책동향

2010년 건축·도시 관련시책 보도자료는 총 34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시책이 총 154건(44.9%)로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및 홍보’ 95건(27.7%), ‘법·제도 개선’ 40건(11.7%)으로 집계되었으며 나머지 분야는 13-21건의 분포를 보였다.

가장 많은 건축·도시관련 시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총 187건의 보도자료 중 101건(29.4%)이 ‘사업추진 및 지원’과 관련된 보도자료이며, ‘법·제도 개선’ 31건, ‘시스템 구축’ 1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나머지 분야는 12-14의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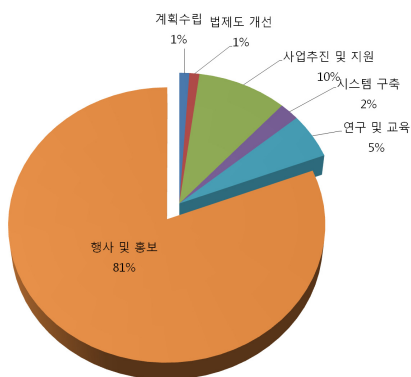
62건의 건축·도시관련 시책을 발표한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도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 보도자료가 44건(12.8%)으로 가장 많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법·제도 개선’ 8건, ‘계획수립’ 7건, ‘연구 및 교육’ 2건, ‘시스템 구축’ 1건으로 집계되었다.

94건의 건축·도시 관련시책을 발표한 ‘건축문화’ 부문은 ‘행사 및 홍보’ 분야가 76건(2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및 지원’은 9건으로 타 부문보다 점유율이 낮게 집계되었다. 앞의 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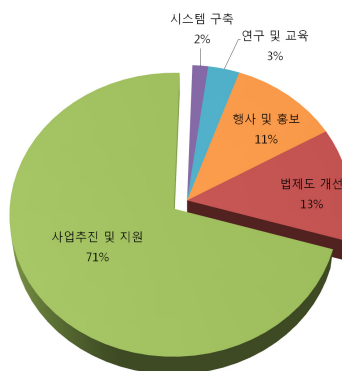
분야는 1-5건으로 나타났다.

[표 12] 2010년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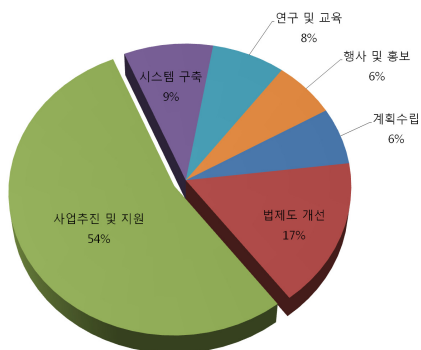
세부분야	건축문화부문	녹색건축도시부문	국토환경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계획수립	1(0.3%)	—	12(3.5%)	13(3.8%)
법·제도 개선	1(0.3%)	8(2.3%)	31(9.0%)	40(11.7%)
사업추진 및 지원	9(2.6%)	44(12.8%)	101(29.4%)	154(44.9%)
시스템 구축	2(0.6%)	1(0.3%)	17(5.0%)	20(5.8%)
연구 및 교육	5(1.5%)	2(0.6%)	14(4.1%)	21(6.1%)
행사 및 홍보	76(22.2%)	7(2.0%)	12(3.5%)	95(27.7%)
총 계	94(27.4%)	62(18.1%)	187(54.5%)	343(100%)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

[그림 9] 2010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 ‘계획수립’ 관련 주요정책 동향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되었으며 도시디자인기본계획, 경관법에 의한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이 활발히 진행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2010년 계획수립 관련 주요정책동향이라 할 수 있다.

#### □ ‘법·제도 개선’ 관련 주요정책 동향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총 40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친환경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부문 관련 시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친환경 인증기준이 적용 확대되면서 모든 건축용도, 신축건물에 대해 친환경 인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고, 친환경 주택에너지 의무 절감이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제도 정비가 주로 이루어 졌다.

#### □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154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주거환경, 건축문화재, 경관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거환경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관련 사업 및 새로운 복합주거단지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 특징이며, 건축문화재와 관련하여 한옥 활성화 및 보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경관관련 사업의 경우 경관개선을 위한 간판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해안권별 경관개선 시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시·도별로 경관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색채시범마을 조성,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야간경관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및 생태공간 조성 추진 계획이 실행된 것이 특징이다.

#### □ ‘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20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주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대한 관련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여행정보, 택지정보, 도시계획정보

등 주로 DB구축을 통한 정보제공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인 반면, 하우스 내부온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등 기술 관련 시스템 구축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및 교육’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21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주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관련시책이 총 14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분야의 경우 건축가상, 건축 조례집,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건축·도시 관련 인쇄물 발간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 ‘행사 및 홍보’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95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주로 ‘건축문화’ 부문이 76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분야에서는 건축상 공모와 수상, 건축·도시 관련 포럼 및 워크숍 개최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상 수상(부산, 대구, 서울, 광주, 강원도 등) 및 건축문화제(서울, 부산, 대전, 경북, 전북, 충남, 등) 등 건축 관련 문화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건축·도시 관련 포럼에서는 도시디자인 관련 행사(서울, 부산, 대전, 광주, 충남, 전북 등)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 ② 2011년 건축·도시 정책동향

2011년에 조사한 481개 보도자료 중 279건(58%)이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보도자료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법·제도 개선’ 72건(15%), ‘행사 및 홍보’ 64건(13.35%)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10% 미만의 건축도시 관련 사업 및 시책이 보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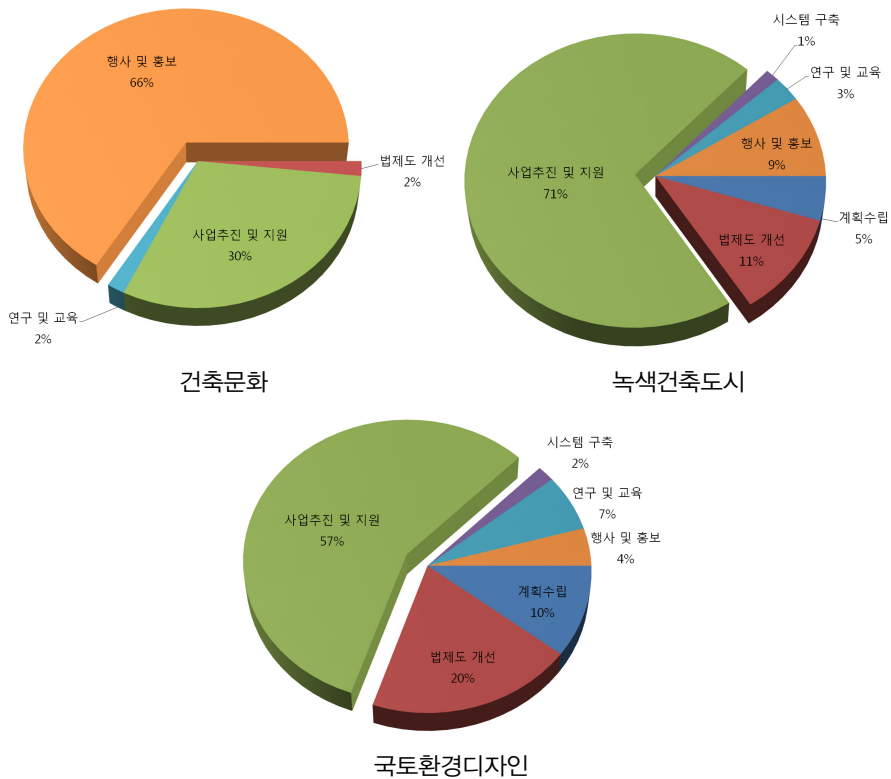
가장 많은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 총 278개 보도자료 중 159건이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보도자료이며, ‘법·제도 개선’ 분야 55건, ‘계획수립’ 29건, ‘연구 및 교육’ 18건, ‘행사 및 홍보’ 12건, ‘시스템 구축’ 5건으로 집계되었다.

144건의 건축·도시관련 시책이 발표된 ‘녹색건축도시부문’ 부문에서는 국토환경디자인부문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의 보도자료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제도 개선’ 16건, ‘행사 및 홍보’ 13건, ‘계획수립’ 7건, ‘연구 및 교육’ 4건, ‘시스템 구축’ 2건으로 집계되었다.

59건의 건축·도시관련 시책이 발표된 ‘건축문화부문’에서는 ‘행사 및 홍보’ 분야 보도자료가 39건, ‘사업추진 및 지원’ 18건, ‘법·제도 개선’, ‘연구 및 교육’ 분야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계획수립’ 및 ‘시스템 구축’은 0건으로 나타났다.

[표 13] 2011년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세부분야	건축문화부문	녹색건축도시부문	국토환경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계획수립	—	7(1.5%)	29(6.0%)	36(7.5%)
법·제도 개선	1(0.2%)	16(3.3%)	55(11.4%)	72(15.0%)
사업추진 및 지원	18(3.7%)	102(21.2%)	159(33.1%)	279(58%)
시스템 구축	—	2(0.4%)	5(1.0%)	7(1.5%)
연구 및 교육	1(0.2%)	4(0.8%)	18(3.7%)	23(4.8%)
행사 및 홍보	39(8.1%)	13(2.7%)	12(2.5%)	64(13.35)
총 계	59(12.3%)	144(29.9%)	278(57.8%)	481(100%)



[그림 10] 2011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 ‘계획수립’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36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분야에서는 도시 관련계획으로서, 주거환경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구역별 계획뿐만 아니라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 지역 종합계획, 경관계획, 연안관리계획, 주택종합계획 등 광역단위의 도시계획이 다양하게 수립된 것이 주요정책동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녹색도시계획 등 ‘녹색건축도시’ 부문 관련 계획 역시 5개 지자체에서 보도되었다.

□ ‘법·제도 개선’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72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계획수립’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이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 도시재정비, 도시계획시설 기준강화, 복합건축 허용 등 건축·도시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재 및 방화성능 강화 등 건축안전관련 보도자료도 다수 발표되었다. 시·도별 역시 건축조례 개정,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심의 기준 개정,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등 건축·도시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279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건축문화’ 부문의 경우 한옥지원 및 한옥마을 조성, 한옥 전문인력 육성 등 한옥산업 육성을 위한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문화공간조성사업 관련 보도자료 역시 상당수 집계되었다. ‘녹색건축문화’ 부문의 경우 그린홈 보급사업, 친환경 주거단지 등 친환경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별로 활발히 보도되었으며, 도시숲(강원도, 전북, 전남, 충남, 대전, 광주 등) 육성에 관한 보도자료도 다수 발표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경우 경관축,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공공건축 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경관관련사업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행복마을 만들기, 마을가꾸기, 농촌마을 종합개발, 마을발전계획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 ‘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정책 동향

‘시스템 구축’ 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5건, ‘녹색건축도시’ 2건 등 총 7건의 보도자료가 집계되었으며, 택지정보, 입체지적도, 주택행정, 걷고 싶은길 등 주로 DB구축에 대한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 ‘연구 및 교육’ 관련 주요정책 동향

‘연구 및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23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주

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관련시책이 총 18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건축·도시 관련 인쇄물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11년도의 경우 도시계획, 공간정보, 경관계획 등 건축·도시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교육이 주요 정책동향이라 볼 수 있다.

□ ‘행사 및 홍보’ 관련 주요정책 동향

‘행사 및 홍보’ 분야와 관련하여 64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주로 ‘건축문화’ 부문이 39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건축·도시 우수사례(건축상, 조경상, 마을만들기, 공공디자인, 경관대상 등) 수상 등 건축 관련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우수한 건축·도시 자원(녹색도시, 친환경 생활공간, 관광 명소화, 경관자원,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 ③ 2012년 건축·도시 정책동향

2012년에 조사한 432개 보도자료 중 271건(62.7%)이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보도자료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행사 및 홍보’ 83건(19.2%), ‘법·제도 개선’ 49건(11.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은 10건 전후로 집계되었다.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건축·도시 관련 시책이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와 ‘행사 및 홍보’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분야의 관련 시책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보도자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행사 및 홍보’ 분야에 관한 보도자료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등 부문에 따른 주요시책은 2011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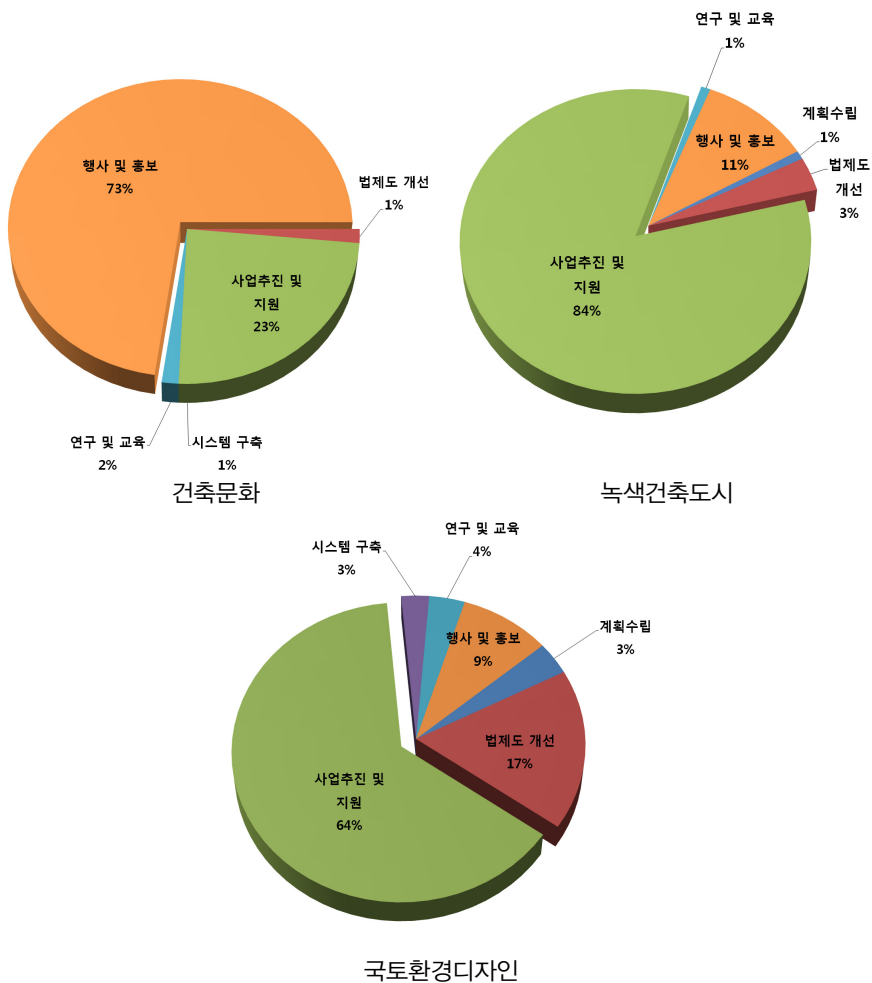
가장 많은 건축·도시관련 시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총 254개 보도자료 중 162건이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련된 보도자료이며, ‘법·제도 개선’ 분야 44건, ‘행사 및 홍보’ 분야 23건, ‘계획 수립’ 분야 9건, ‘연구 및 교육’ 분야, ‘시스템 구축’ 분야 7건으로 집계되었다.

112건의 건축·도시관련 시책을 발표한 ‘녹색건축도시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의 보도자료가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사 및 홍보’ 분야의 보도자료가 12건, ‘법·제도 개선’ 4건, ‘계획수립’ 1건, ‘연구 및 교육’ 1건으로 분석되었다.

66건의 건축·도시관련 시책을 발표한 ‘건축문화부문’에서는 ‘행사 및 홍보’ 분야의 보도자료가 48건, ‘사업추진 및 지원’ 15건, ‘법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분야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표 14] 2012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세부분야	건축문화부문	녹색건축도시부문	국토환경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계획수립	-	1(0.2%)	9(2.1%)	10(2.3%)
법·제도 개선	1(0.2%)	4(0.9%)	44(10.2%)	49(11.3%)
사업추진 및 지원	15(3.5%)	94(21.8%)	162(37.5%)	271(62.7%)
시스템 구축	1(0.2%)	-	7(1.6%)	8(1.9%)
연구 및 교육	1(0.2%)	1(0.2%)	9(2.1%)	11(2.5%)
행사 및 홍보	48(11.1%)	12(2.8%)	23(5.3%)	83(19.2%)
총 계	66(15.3%)	112(26%)	254(58.8%)	432(100%)



[그림 11] 2012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 ‘계획수립’ 관련 주요정책 동향

‘계획수립’ 관련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26건 감소한 총 10건으로 건축·도시 관련계획 수립 관련 내용이 상당수 감소하였다. 각 지자체에서는 주로 공공디자인, 연안관리, 스카이라인, 주택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이 2012년 계획수립 관련 주요정책동향이라 할 수 있다.

#### □ ‘법·제도 개선’ 관련 주요정책 동향

전년도보다 23건 감소한 총 49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국토환경디자인’ 관련 부문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본 분야의 경우 뉴타운 해제 절차 및 노후 주택이나 한옥 개축의 간편화 등 건축·도시사업 규제 완화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거안정, 임대주택 보급,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비 감축 등 정주환경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옥외광고물 관리, 경관기본계획, 도시 발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관련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 □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주요정책 동향

전년도와 유사한 271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건축문화재, 전통시장 활성화,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경우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노후주택개선, 주거복지사업 등의 정주환경개선과 간판·도로정비사업 등 미관개선사업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농촌마을, 행복마을, 한옥마을, 색채 시범마을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문화’ 부문의 경우 건축문화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원, 한옥, 남한산성 등 건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녹색길·자전거길 조성, 생태공원 조성, 친환경 도시육성 사업 등 시·도별로 진행된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 □ ‘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정책 동향

8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된 ‘시스템 구축’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도시계획 정보, 건축물 관광지도 구축, 지적재조사 등 DB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 ‘연구 및 교육’ 관련 주요정책 동향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도·제주도·인천시 등 지자체별 건축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진행이 주요 정책동향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건축·도시 공간 관련사업 운영방안 및 관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 ‘행사 및 홍보’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83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건축문화’ 부문에서 관련시책이 주로 보도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간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국가 및 각 시·도별 건축·도시 우수사례에 대한 수상, 공공디자인 등 공모 관련행사에 관한 내용이 주요정책동향이라 할 수 있으며, 건축·도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 및 공청회(국토계획법 설명회,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그린마을 추진계획 보고회)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 ④ 2013년 건축·도시 정책동향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건축·도시 관련시책 보도자료는 총 30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시책이 총 127개(41.6%)로 나타났다. ‘행사 및 홍보’ 67건(22%), ‘법·제도 개선’ 39건(12.8%)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20-30건의 분포를 보였다.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및 지원’, ‘행사 및 홍보’ 관련시책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했었던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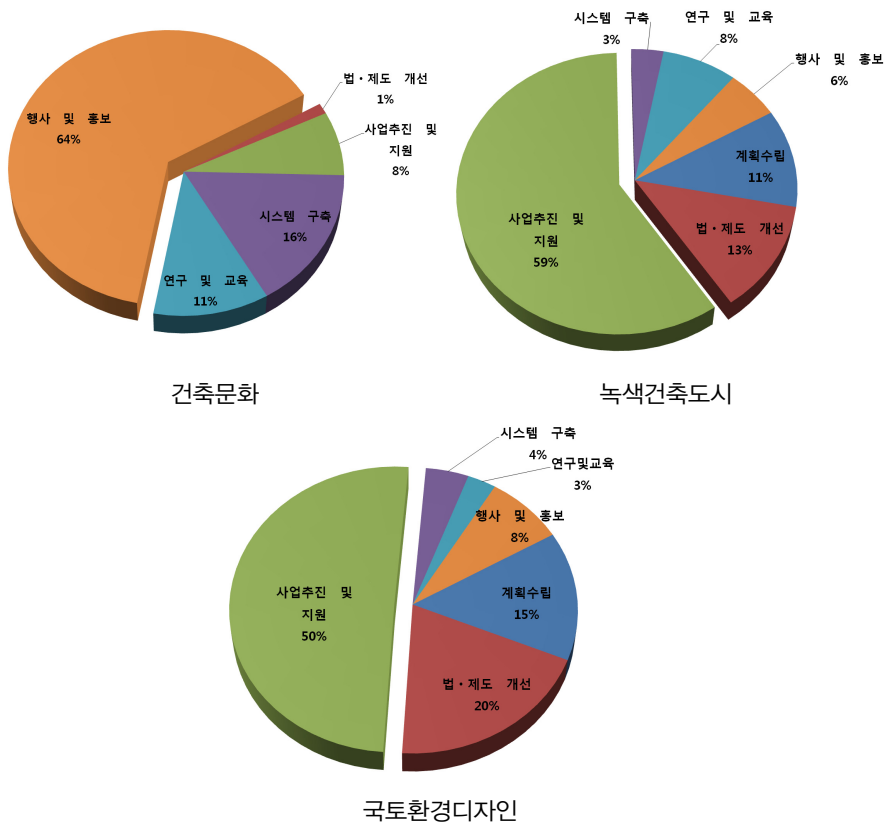
가장 많은 건축·도시관련 시책이 발표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총 137개의 보도자료 중 69건(50.4%)이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련한 보도자료이며, ‘법·제도 개선’ 분야 27건, ‘계획수립’ 분야 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나머지 분야는 4-11건 분포를 보였다.

88건의 건축·도시관련 시책을 발표한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도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 보도자료가 52건(59.1%)으로 과반이 넘는 수로 집중 발표된 것으로 보아 상반기 ‘녹색건축도시부문’ 사업진행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며, ‘법·제도 개선’, ‘계획 수립’이 각각 7건, 9건 증가한 11건, 10건으로 전년도 대비 녹색건축분야에서 계획 및 제도 관련시책이 활발해 졌음을 알 수 있다.

80건의 건축·도시관련 시책을 발표한 ‘건축문화’ 부문은 ‘행사 및 홍보’ 분야 보도자료가 51건(63.7%)으로 집계되었으며 포럼 및 공모와 같은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연구 및 교육’ 분야는 2012년도 대비 각 1건에서 13건, 9건 등 상당수 증가하는 등 기존 행사 및 사업추진에 집중되었던 건축문화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표 15] 2013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세부분야	건축문화부문	녹색건축도시부문	국토환경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계획수립	—	10(3.3%)	20(6.6%)	30(9.8%)
법·제도 개선	1(0.3%)	11(3.6%)	27(8.9%)	39(12.8%)
사업추진 및 지원	6(2%)	52(17%)	69(22.6%)	127(41.6%)
시스템 구축	13(4.3%)	3(1%)	6(2%)	22(7.2%)
연구 및 교육	9(3%)	7(2.3%)	4(1.3%)	20(6.6%)
행사 및 홍보	51(16.7%)	5(1.6%)	11(3.6%)	67(22%)
총 계	80(26.2%)	88(28.9%)	137(44.9%)	305(100%)



[그림 12] 2013 분야별 정책동향 현황

□ ‘계획수립’ 관련 주요정책 동향

‘계획수립’ 분야 건축·도시 관련 주요시책은 간판디자인, 도시디자인, 도시브랜드 수립 등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생태교육장 설립, 산지보전계획 등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 ‘법·제도 개선’ 관련 주요정책 동향

2013년도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토환경디자인부문과 녹색건축도시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서울, 울산), 도시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재해로부터의 안전, 빗물활용계획, 디자인 인증제), 건축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녹색건축부문’의 경우 건축물에너지 효율기준, 인증제도 통합, 녹색건축 설계 기준 등 친환경 건축물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주요정책 동향

총 127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국토환경디자인과 녹색건축도시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 중앙부처의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과 새로 구축된 건축정보 활용방안에 관한 사업이 주요정책동향이라 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색채, 농촌마을 개발 등 지역 형편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폐가·고가 활용방안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녹색건축부문’의 경우 녹색성장을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 시범단지·녹색아파트 조성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생태하천·탐방로·갯벌관리 등 자연환경 관리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 대구, 전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내 녹지조성을 위한 관련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 ‘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정책 동향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어난 22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본 분야의 주요정책동향은 전년도와 유사한 공간정보지도 구축이 계속 진행되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도로·건축지도, 부동산정보 지도, 등산로, 자전거 지도 등 다양한 전자지도 구축 및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연구 및 교육’ 관련 주요정책 동향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는 에너지 제로빌딩 모델, 녹색도시 등 녹색성장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과 근대건축물 기록, 일제 강점기 건축도면 발간,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등 건축·도시 관련 기록 구축을 위한 사업이 주로 진행되었다.

□ ‘행사 및 홍보’ 관련 주요정책 동향

‘행사 및 홍보’에서는 건축문화 관련 보도자료가 주로 발표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건축·도시 우수사례 수상(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서울시 건축상 등) 및 다양한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제주도, 충북, 경기도, 대전, 등 중앙 부처 및 지자체에서 도시디자인관련 워크숍·포럼 및 공모전 진행이 주요정책동향이라 볼 수 있다.



[표 16] 2010-2013 분야별 주요정책 성과 및 동향

분야	주요정책 성과 및 동향			
	2010	2011	2012	2013
계획수립	· 경관계획 수립	· 주거환경정비계획 · 경관계획 · 연안관리계획 · 주택종합계획 · 신재생에너지 · 녹색도시계획	· 공공디자인 · 연안관리 · 스카이라인 · 주택정비 · 기후변화 대응 환경생태계획 수립	· 간판디자인 · 도시디자인 · 도시브랜드 · 산지보전계획
법·제도 개선	· 친환경 인증제도 · 녹색건축 조성 · 에너지 의무절감	· 도시재정비 · 도시계획시설 · 복합건축허용 · 건축안전 기준강화 · 건축조례개정	· 건축·도시사업 규제 완화(뉴타운 해제, 한옥 개축) · 정주환경 안정(노후주택정비, 임대주택보급) · 도시계획 관련제도 개정(건축심의과정, 옥외광고, 주택건설기준)	· 개발제한구역 해제 · 도시환경관리제도개선(재해방지, 빗물활용) · 친환경 건축물 관련제도 개선(에너지 효율기준, 설계기준, 인증제도 통합 등)
사업추진 및 지원	· 주거환경개선 · 건축문화재 보전 · 경관개선(가로환경, 해안권역, 야간경관)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한옥산업 육성(한옥전문인력, 한옥마을) · 문화공간조성 · 도시숲 조성 · 도시경관개선(경관개선, 공공건축 디자인, 옥외광고물, 주거환경) · 마을 만들기	· 정주환경 개선(노후주택개선, 주거복지사업) · 도시경관개선(간판, 도로정비 등) · 유희공간 활용 · 마을 만들기	· 지적재조사 · 건축·공간정보 활용방안 · 도시환경 개선(공원조성, 주거환경, 농촌마을 개발 등) · 유희공간 활용 · 친환경 도시 및 단지 조성
시스템 구축	· 건축·도시 공간정보지도 작성(여행정보, 택지정보, 도시계획정보)	· 건축·도시 공간정보지도 작성(택지정보, 입체지적도, 주택행정, 걷고싶은 길)	· 건축·도시 공간정보지도 작성(도시계획, 건축 관광지도, 지적재조사)	· 건축·도시 공간정보지도 작성(도로·건축지도, 부동산 정보, 자전거, 등산로)
연구 및 교육	· 건축·도시 관련 인쇄물 발간(건축가상, 건축 조례집, 홍보책자)	· 건축·도시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도시계획, 공간정보, 경관계획)	· 건축기본계획 수립(인천, 제주도, 경기도)	· 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제로빌딩, 녹색도시) · 건축·도시 관련 기록구축(근대건축, 도시경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행사 및 홍보	· 건축·도시 수상 및 공모전 · 건축 문화제 · 도시디자인 세미나	· 건축·도시 수상 및 공모전(건축상, 경관대상, 마을만들기, 공공디자인) · 건축·도시자원 홍보 및 명소화(경관자원, 자연거도로, 녹색도시 등)	· 건축·도시 수상 및 공모전 · 건축·도시 관련사업 워크숍(국토계획법 설명회,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등)	· 건축·도시 수상 및 공모전 · 도시디자인 관련 워크숍 및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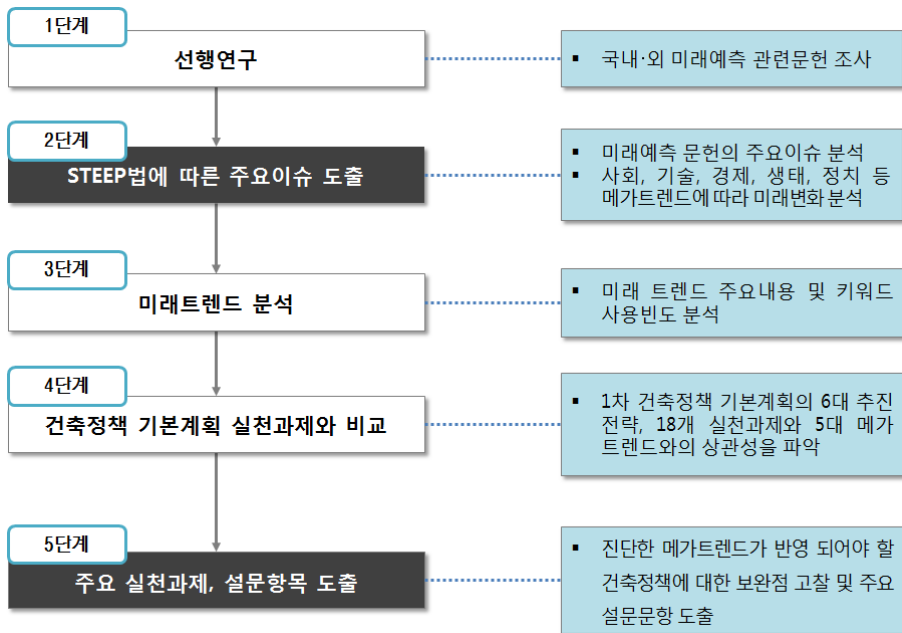


## 제3장 국가사회적 건축정책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1. 메가트렌드를 통한 관련 여건변화 진단
2. 주요 메가트렌드와 건축정책의 관계 모색을 통한 방향 설정
3. 전문가가 전망하는 건축정책의 방향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향후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반영해야할 미래트렌드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양한 미래예측보고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STEEP 유형에 따라 미래트렌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의 미래트렌드 반영도를 분석하고 정합성을 판단하기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실천과제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새 정부 국정기조와 추진전략, 국정과제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건축정책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기 위해 미래트렌드에 따라 건축·도시 관련분야에서 대응이 필요 또는 가능한 과제들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단한 메가트렌드와 연관하여 건축정책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고찰 및 주요 설문문항을 도출하였고, 설문을 바탕으로 건축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 사항을 선별하였으며 세부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3).



[그림 13] 메가트렌드 분석 및 설문문항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과정

## 1. 메가트렌드를 통한 관련 여건변화 진단

### 1) 국제여건변화 및 이슈

2010년 전후로 영국, EU, 미국, 일본에서는 2020년 또는 2050년을 목표연도로 한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다양한 미래연구집단 및 정부기관을 통해 매년 제출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간된 메가트렌드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주요한 트렌드키워드는 에너지, 고령화사회, 세계화, 양성평등사회, 기후변화, 물부족 문제로 요약되며<sup>2)</sup>, 특히, 다가오는 2020년까지의 미래는 과거와 연속적이지 않은 패턴의 현상이 다양하게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어 그에 따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에 정리된 총 26편의 참고문헌 중 본 보고서의 작성방향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미국, 영국, EU에서 발간된 총 21편의 미래예측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OECD의 발간물을 포함하여 정리한 결과임

른 쇼크, 놀라움이 복합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 NIC, 2008)

본 연구는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연구보고서 22편의 미래예측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였다.

[표 17] 국제여건분석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미래예측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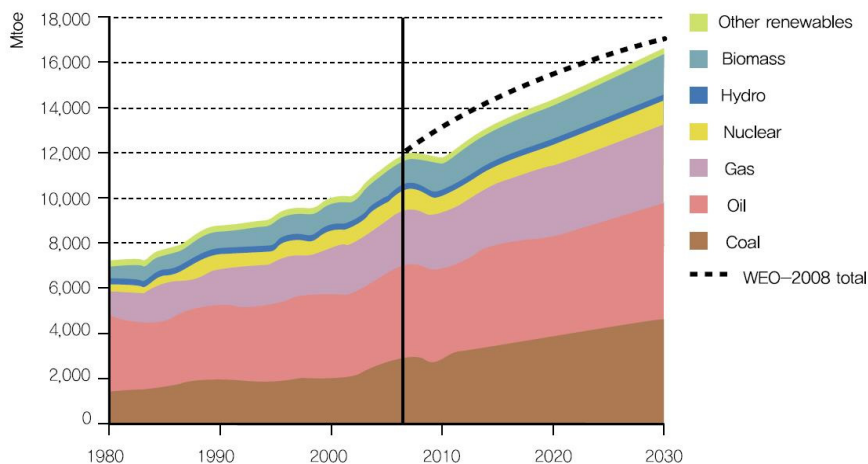
연번	보고서명	국가	기관	발행 년도
1	Government 2020 Scenarios	-	가트너	2005
2	Foresight 2020 Economic, industry and corporate trends	-	EIU	2006
3	Horizons 2020	독일	지멘스	2006
4	Powerful Times : Rising to the Challenge of Our Uncertain World	-	이몬켈리	2006
5	Innovation 25	일본	이노베이션 추진본부	2007
6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미국	미국RAND 연구소	2007
7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미국	NIC	2008
8	시나리오와 전략	-	국제 에너지기구	2008
9	UN 새천년개발목표 (MDGs:MillenniumDevelopmentGoals)	UN	UN	2008
10	IT Road Map of Unified Communications Until 2013	일본	일본 노무라연구소	2008
11	55 Trends Shaping Tomorrow's World	-	세계미래학회	2008
12	미리가본2018년유엔미래보고서	UN	박영숙, 제롬글렌등	2008
13	Shell Energy Scenario to 2050	미국	Shell	2008
14	Megatrends	독일	독일Z-punkt	2008
15	미래기술 전략지도	일본	경제산업성	2009
16	World Trade : possible futures	영국	DTI	2009
17	Future Internet 2020 : Vision of an Industry Expert Group	EC	EC	2009
18	역대MIT선정10대유망기술	미국	MIT	2009
19	The Futurist	-	세계미래학회	2009
20	유엔미래보고서2	UN	박영숙, 제롬글렌	2009
21	Sigma Scan 271개이슈	영국	DTI	2010
22	OECD 경제및도시정책보고서	-	OECD	2012

## ① 에너지 기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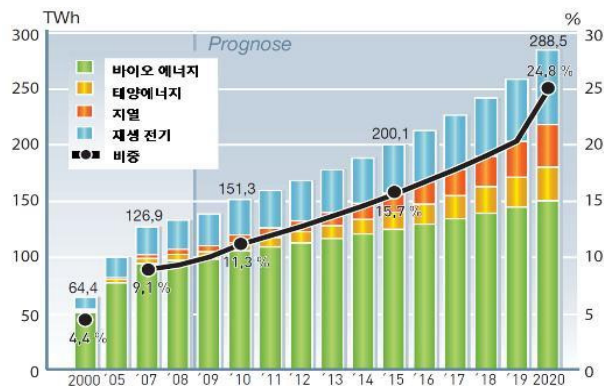
### □ 석유의존도 감소와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

석유자원의 무기화, 지구온난화, 국민건강의 위험증가 등의 문제로 석유의존도가 감소되면서 나노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태양열에너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너지, 지열발전, 핵융합 등 화학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다(박영숙&제롬글렌 2009). 2050년까지 전기의 60%이상을 비화석 연료에서 생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석탄, 가스에 의존하는 시설은 탄소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DTI 2010, 국제에너지기구 2008, Shell 2008).

또한, 2020년까지 농업폐기물 등을 이용한 2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이 예상되고, 2050년까지 바이오매스가 1차 에너지의 15%를 차지하고 바이오연료 이용으로 차량연료가 다양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화석연료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믹스에서 큰 비중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Shell 2008, 기획재정부 2009).



[그림 14] 연료별 세계 1차 에너지수요전망  
출처 : 에너지 경제연구원, 'IEA 세계에너지전망 2009.9



[그림 15]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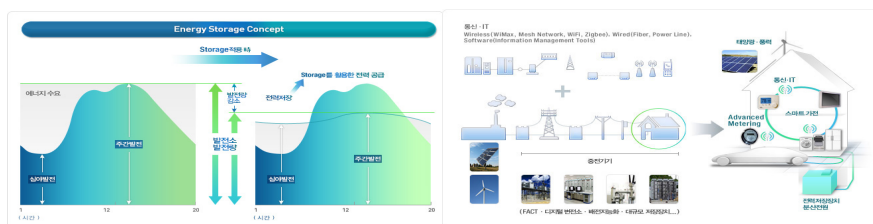
출처 : 녹색경영정보포털 <http://www.gmi.go.kr>

#### □ 풀뿌리 에너지정책의 형성 및 발전

도시, 지역, 또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공급, 환경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계획(이니셔티브)을 활발히 추진하고 에너지미래에 대한 자체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다(Shell 2008).

#### □ 에너지 효율기술의 발전

교통, 이동통신기기에 사용하던 기술이 배터리소재, 울트라배터리, 수소 저장물질 등의 새로운 에너지 저장기술로 발전되고, 건물, 전기기기, 수송, 산업 및 발전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크게 향상되어 효율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박영숙&제롬글랜 2008).



[그림 16]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의 개념도

출처 : 삼성SDI홈페이지 <http://www.samsungsd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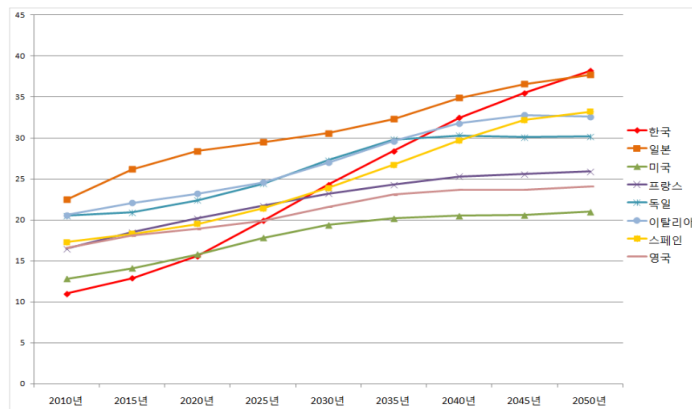
## ② 고령화 사회의 파장

### □ 건강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헬스테크, 헬스 스타일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사회의 값비싼 의료비용 문제는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영숙&제롬글렌 2008).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등 능동적인 활동을 취하려 하고, 국가는약품과 새로운 진단 프로시저 개발 등의 연구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멘스 2006, Z-punkt 2008).

### □ 경제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경제적 불평등, 인구문제 등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계층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새로운 타겟이 됨에 따라, 고령인구를 위한 투자상품, 저비용 기능성 자동차 등 고령화 사회에 맞춘 상품개발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향후 산업, 정치, 문화생활에 있어 육체/정신 양면에서 능력을 갖춘 많은 수의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EIU 2006).



[그림 17] OECD 주요국 고령인구 비율

출처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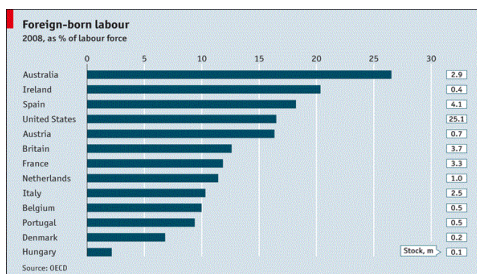
## □ 직업노동의식의 변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계층의 등장으로 중년에 직업을 변경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생 제2, 3의 직업이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세계미래학회 2008).

## ③ 세계화가 미치는 여파

### □ 산업, 경제, 정치의 다원화

미국의 신뢰도 손상, 중국의 부상 등에 따라 국제환경이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은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NIC 2008). 또한, 서구사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베이비붐에 따라 서구사회로의 경제적 이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 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인 장애나 이민자수와 기존주민수간의 역전(reversals)현상 등 갈등요인 또한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세계미래학회 2008). 무역과 경제발전을 발판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힘을 합해 빈곤 감소, 세계안보 구축, 무역 통합의 실현을 도모해야 하고, 지적재산권 가치상승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음으로서 국경을 넘는 신기술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DTI 2009).



[그림 18] OECD 국가의 외국인노동력의 비율 (%)

출처 : Economist, Alien invasions The share of foreign-born labour in rich countries, Jul 16th 2010



[그림 19] 세계경제에서 미와 중국의 비율

출처 : 동아일보, 가라앉는 美, 中 군사외교 1등도 내놔, 2012.11.5

## □ 인재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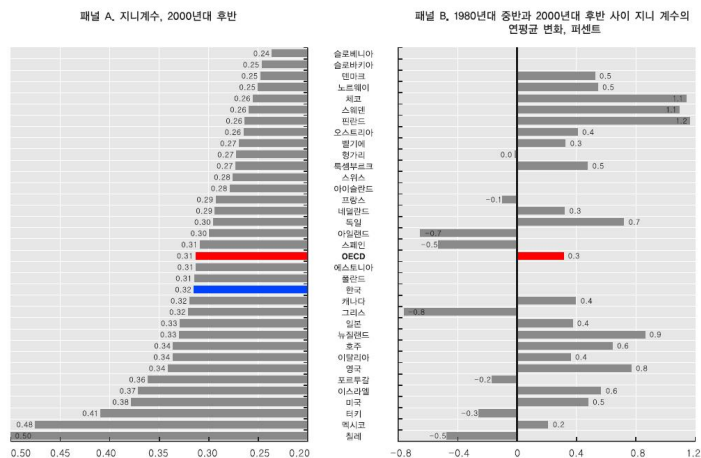
미래의 일은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고급기술, 질 좋은 교육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교육제도 개선 및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기술과 상업적 재능을 가진 젊은 세대가 출현하여 빠른 정보처리능력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인재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DTI 2010).

## □ 서비스산업의 발달

시장은 단순한 내수시장에서의 성장만 바라지 않고 국경을 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글로벌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분야이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지멘스 2006, 세계미래학회 2008).

## □ 개인화로 인한 사회 결속력 약화

전통적인 사회단위(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는 서서히 개인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등 사회 결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소비시장은 대량생산시장에서 마이크로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Z-punkt 2008).



[그림 20]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의 증가추세  
출처 : OECD(2012) 한눈에 보는 사회 2011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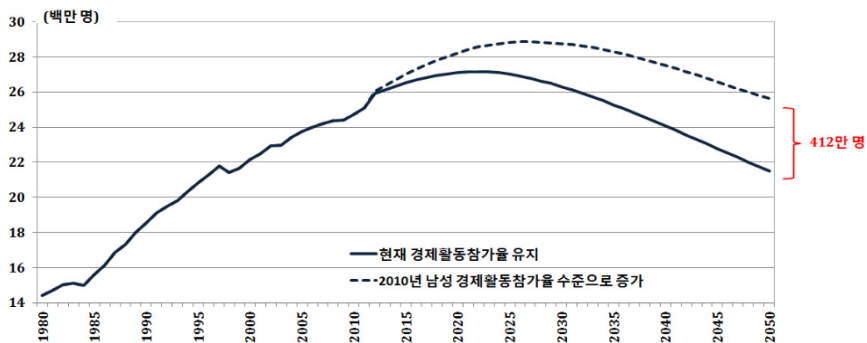
#### ④ 양성평등사회로 재편

##### □ 여성의 활동증대

앞으로 여성은 개인 및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남성을 능가하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발휘함으로써 향후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향후 20년간 직업을 갖는 여성이 증가 한다면 고령화가 초래할 경제적 충격이 완화될 것이며, 44~65세의 여성이 새로운 최대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는 ‘위미노믹스(Womenomics)’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영숙&제롬글렌 2008,2009,Z-punkt 2008, NIC 2008, DTI 2010, UN 2008).

##### □ 정신, 정서적인 삶 추구

경제적 부에 합류하는 제3세계, 중국/인도/러시아가 급부상하여 서구의 지속 가능한 소비(LOHAS, Eco Chic, Moral Commerce)를 향유하는 인구가 급증할 것이다. 또한, 가정과 육아를 동시에 하며 경제생활을 하는 여성계층의 증가는 재택근무와 e-커뮤니티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가트너 2005, Z-punkt 2008, DTI 2010).



주: 2050년까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총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나타냄

[그림 21]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의한 노동력의 확대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KERI 칼럼 (2012.6.4.)에서 발췌

## ⑤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의 일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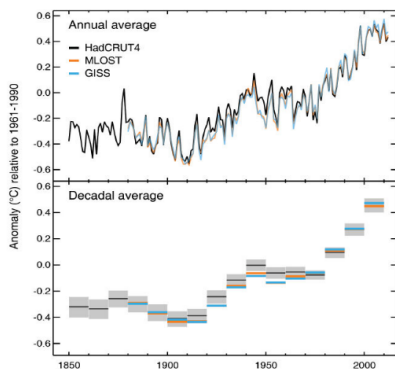
### □ 기후변화의 영향

2015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홍작·심각한 홍수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을 정부차원에서 인지하고, 국가 및 지역연합은 탄소세의 수익을 저탄소기술 등에 투자하는 새로운 국제기금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DTI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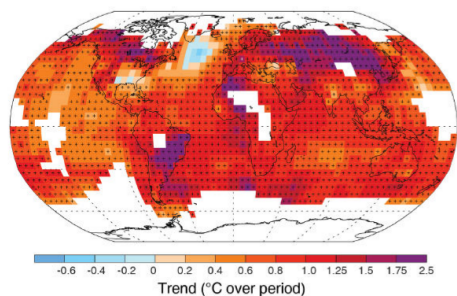
가뭄과 기상이변에 의한 수출제약, 높고 변동성 있는 식품가로 식량 생산 지장이 초래되나,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오히려 기후변화로 산업적 이득을 보는 국가에 해당 될 것이다. 한편, 극심한 온난화로 인해 아시아 해안지역은 홍수와 침수에 시달리고,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대가뭄은 유럽, 남아메리카, 북미대륙까지 확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제임스 캔턴 2007, NIC 2008, DTI 2009).

### □ 물 활용 기술의 진보

물 부족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청정기술 시장이 성장하는 등 물 활용 기술이 진보할 것이다(NIC 2008, 세계미래학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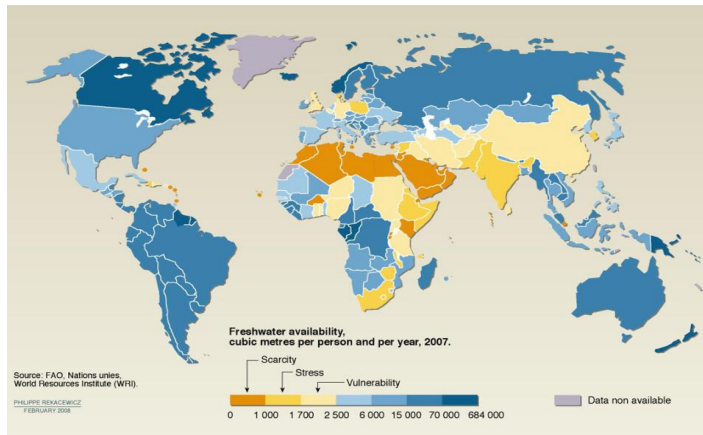
(a) 전지구 평균기온 변화경향



(b) 1901~2012년 전지구평균기온 변화

[그림 22] 지구적 평균기온의 변화추세

출처 : 기상청보도자료 (2013.9.27.) IPCC 5차 평가보고서 결과중 발췌



[그림 23] 세계 물 스트레스 지수현황  
출처 : FAO, UN, Water Resources Institute (2008)

[표 18] 국제적 메가트렌드 변화 및 이슈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내 용
에너지 기반의 변화	석유의존도 감소와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	· 석유의존도 감소로 화학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등장 · 2050년까지 전기의 60% 이상이 비화석 연료에서 생성될 전망 · 2020년까지 농업폐기물 등을 이용한 2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이 예상
	풀뿌리 에너지정책의 형성 및 발전	· 도시, 지역, 기업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
	에너지 효율기술의 발전	· 새로운 에너지 저장기술로 발전되고, 건물, 전기기기, 수송, 산업 및 발전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비용 절감
고령화 사회의 파장	건강	· 고령화 사회의 값비싼 의료비용 문제는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극복 · 사람들은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등 능동적인 활동을 취함 · 국가는 약품과 새로운 진단 프로시저 분야의 개발 등의 기초 연구지원
	경제	· 고령화로 인한 경제위기로 중산층의 붕괴, 경제적 불평등, 인구문제 등 대응능력 약화 가능 · 경제력을 갖춘 노인계층을 위한 투자상품, 저비용 기능성 자동차 등 상품개발과 서비스에 집중
	직업노동의식의 전환	· ‘액티브 시니어’ 계층의 등장으로 중년에 직업을 변경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생의 제2, 3의 직업이 보편화

메가트렌드	트렌드 이슈	내 용
세계화가 미치는 여파	산업, 경제, 정치의 다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사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중이고, 개발도상국은 베이비붐에 따라 서구사회로의 경제적 이민현상 가속화</li> <li>· 무역과 경제의 발전을 발판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힘을 합해 빈곤 감소, 세계 안보 구축, 무역 통합을 실현을 도모</li> <li>·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지적재산권이 보호받고 국경을 넘는 신기술 투자를 선도</li> </ul>
	인재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에는 뛰어난 고급기술, 질 좋은 교육 등이 요구될 것으로 교육제도 개선, 고도의 숙련된 기술 보유가 필요하게 됨</li> <li>· 테크놀로지의 아이들 : 기술과 상업적 재능을 가진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인재들이 주목</li> </ul>
	서비스산업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산업으로의 성장에 있어 서비스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분야이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li> </ul>
	개인화로 인한 사회 결속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사회단위가 개인 네트워크로 대체되어 사회 결속력 약화 될 것이며, 대량생산소비시장에서 마이크로 시장으로 변화 유발</li> </ul>
양성평등사회 로 재편	여성의 활동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은 개인 및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발휘</li> <li>· 일하는 여성의 증가는 고령화가 초래할 경제적 충격 완화</li> <li>· '위미노믹스' 의 시대:44~65세의 여성이 새로운 최대 소비계층</li> </ul>
	정신, 정서적인 삶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부에 합류하는 제 3세계, 중국/인도/러시아가 급부상하여 서구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향유하는 인구 급증</li> <li>· 가정과 육아를 동시에 하며 경제생활을 하기위해 재택근무와 e-커뮤니티의 증가 유발</li> </ul>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의 일상화	기후변화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역연합은 탄소세의 수익을 저탄소기술 등에 투자하는 새로운 국제기금을 추진</li> <li>· 가뭄과 기상이변에 의한 수출제약, 변동성 있는 식품가로 식량 생산에 지장 초래</li> <li>· 온난화로 인해 아시아 해안지역은 홍수와 침수에 시달리고,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대가뭄은 유럽, 남아메리카, 북미대륙까지 확산 가능</li> </ul>
	물 활용 기술의 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기술 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이며, 물 부족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어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될 것임</li> </ul>

## 2) 국내여건변화 및 이슈

우리나라는 국제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회적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국내 미래 메가트렌드의 변화는 세계화, 고령화, 에너지, 기후변화와 물 부족, 경제시장의 변화, 정치행정의 변화로 구분하여 정리 할 수 있다.<sup>3)</sup>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개념이자 무분별한 개발시대에 탄생한 ‘지속가능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국제적 변화, 지구적 변화 등 거대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견디면서 사회를 유지 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 국내여건분석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미래예측문헌

연번	보고서명	기관	발행년도
1	Future 2030 : 우리의미래모습은?	과학기술부	2005
2	함께하는희망한국VISION2030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
3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	NIA	2006
4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STEPI	2007
5	미래트렌드와 미래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7
6	2013 KOREA Scenario	한국CEO포럼,AT커니코리아,미래경제연구원	2007
7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8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보완	과학기술부/KISTEP	2008
9	2020/2050 미래전망토론회	미래기획위원회/KDI	2008
10	IT기술예측	IITA	2008
11	정치)미래선진한국의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12	메 가 트 렌 드 연 구 보 고 서 (2003~2008)	KISDI	2008
13	퓨처코드:대한민국미래트렌드	미래전략포럼	2008
14	IT KOREA 5대미래전략	미래기획위원회/지식경제부	2009

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에 정리된 총 25편의 참고문헌 중 본 보고서의 작성방향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국내에서 발간 된 총 20편의 미래예측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3편의 보고서를 추가로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임

15	새로운 예측 프로세스를 적용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미래사회 전망	KISTEP	2009
16	국토대예측연구	국토연구원	2009
17	(SERI 보고서로 읽는)미래산업	삼성경제연구소	2009
18	해외미래예측기관들이보는10년후 세상	LG경제연구원	2009
19	10년후세상을말한다	LG경제연구원	2010
20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LG경제연구원	2010
21	Green Vision Plan 미래라이프 랜드보고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2013
22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와 교통체계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2013
23	도시 혁신의 길을 가다	경기개발연구원	2013

## ① 세계화

### □ FTA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통합

전통산업 및 타기술/산업과 IT의 융합으로 생산성이 제고되고 산업규모가 커지며, 글로벌 무역체계의 발달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따른 e-커머스의 성장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와 제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STEPI 2007, IITA 2008).

### □ 지리적 경계와 조직 경계의 약화

정보혁명으로 전 세계적 연결망이 구축되어 세계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시-공간 경계 약화, 동조화, 가상공간을 활용한 산업환경이 일반화 되며, 국가간 경제적·공간적 제약이 약화되면서 부품/소재,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한 신제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IITA 2008, 국토연구원 2009).

### □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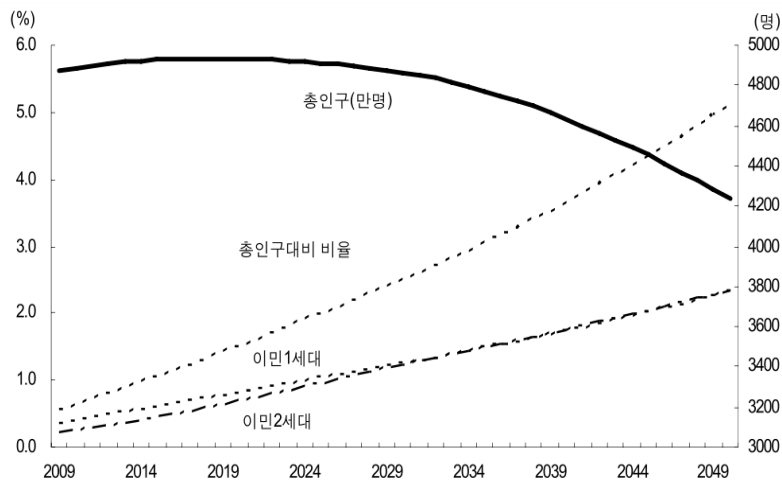
외국인 비중은 현재 2%에서 2020년에는 4~8%대로 증가될 것으로 전



망하며, 일반적인 육체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급지식노동자의 비율 또한 함께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은 다문화사회로 급속한 이행을 유발 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발전연구원 2007, KDI 2008, 한국행정연구원 2008, 국토연구원 2009).



[그림 24]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  
출처 : 연합뉴스홈페이지 (2013.4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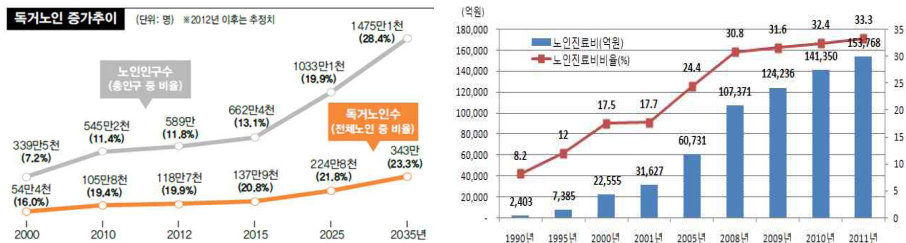
[그림 25] 총인구대비 결혼이민인구 비율전망  
출처 : 이삼식 외(2009)에서 발췌

## ② 고령화

### □ 삶의 질 중시 시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 1,6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85세 이상인구는 2010년 37만 명에서 2040년 208만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은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에서 2040년 남자 83.4세 여자 88.2세로 변화가 예상된다(통계청 2011). 고령화와 개인화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 되면서 삶의 가치가 가족과 여가중심으로 바뀌고, 소득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로 전환하는 다운쉬프트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국토연구원 2009).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건강지출비용은 수도권기준 2010년 2조 2,306억원에서 2020년 3조 5,92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수명은 연장되지만 질병, 빈곤, 고독 등 3고 문제에 직면한 노인계층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의 80% 이상은 1가지 이상 질병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경기개발연구원 2012).



[그림 26] 독거노인 증가추이 및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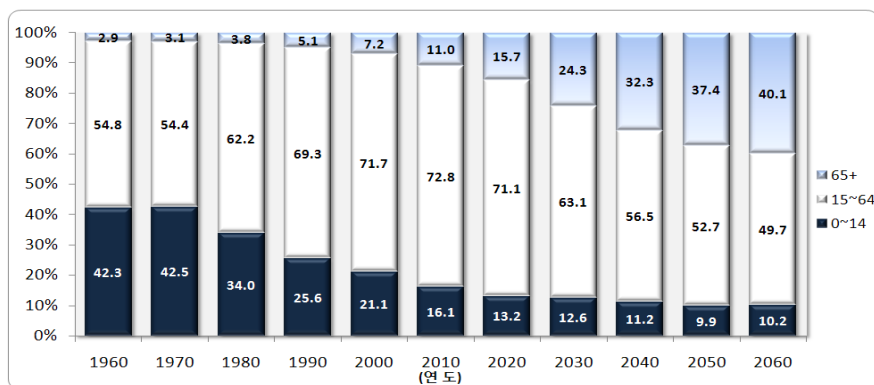
출처 : “빈곤·질병에 갇혀 고립된 삶… ‘고독사 경고등’ 10만명 추정”, 한겨레(2012.6.24).

통계로 본 건강보험 시행 3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12.7.2.)

### □ 비노동집약 사회진입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동력감소 및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노년층의 자원봉사활동, NGO활동 등은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부담을 줄일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 증대는 비노동 집약산업인 서비스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공공부문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LG경제연구원 2010).



[그림 27]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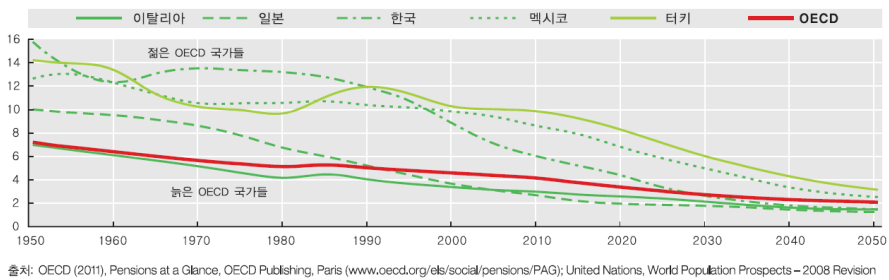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발췌

#### □ 노년층의 재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산업증대

고령화 소비트렌드 및 고령친화산업이 부상하여 재력있는 노년을 위한 서비스산업(재택의료, 재택쇼핑)이 증대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도시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무장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사회의 지역개발, 도시계획, 주택정책의 방향은 취약노령계층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KDI 2008, 국토연구원 2009).

#### □ 가족해체

퀵앤컨비니언트 러브(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같은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30년 6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족해체로 인한 고령인구의 부양, 사회 인프라 정비 등과 관련된 비용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DI 2008, 미래전략포럼 2008).



[그림 28] OECD 국가와 한국의 노인부양율 변화전망

### ③ 에너지

#### □ 에너지 고효율산업구조로 전환

자원을 보다 적게 사용하고, 소비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소비와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Energy Regime)' 차원의 접근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은 교통수단의 녹색화, 지능화, 초고속화를 유발할 것이며, 자원고갈 및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제로 주택 등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건물이 일반화될 것이다(STEPI 2007, 국토연구원 2009 KISTEP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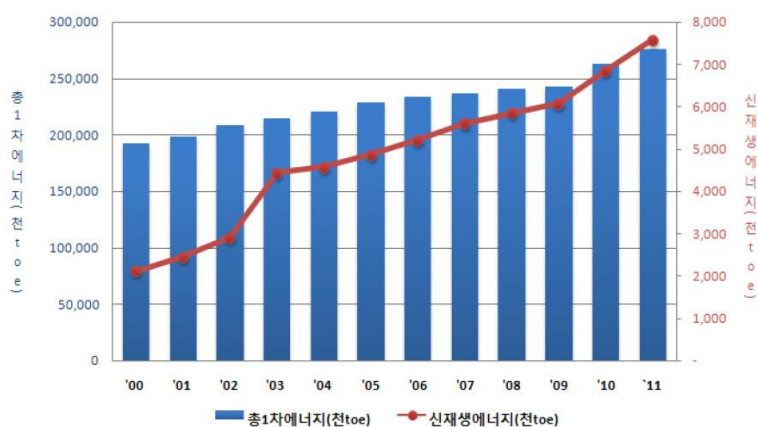
####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재활용 및 재제조 산업, 환경산업, 에너지 소비 저감기술과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산업은 연 20~30% 급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대체에너지원을 찾는 시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STEPI 2007, 삼성경제연구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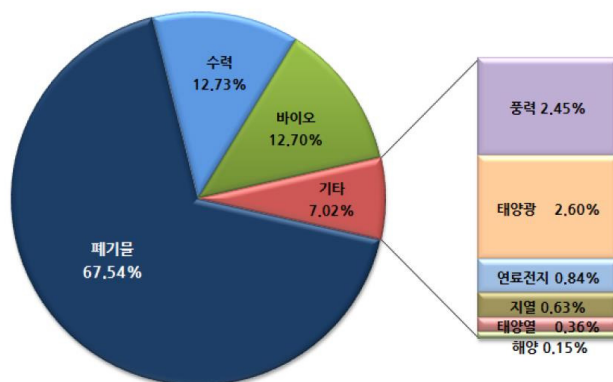
#### □ 석유대체기술의 발달

수소에너지망을 통한 분산형-민주적 에너지 권력시대로 전환되어 수소 경제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발전연구원 2007).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 연료저장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해결책으로 부상하여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및 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대체에너지 개발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시장에서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KDI 2008).



[그림 29]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증가추이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2)



[그림 30] 2011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2)

#### ④ 기후변화 및 물 부족

##### □ 물 부족은 식량의 부족을 가중

인류가 사용하는 물의 70%가 농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하대수층은 해마다 줄어들고 강은 말라가는 등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기획재정부 2009), 2025년 30억 인구가 물 기근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물 부족은 필연적으로 식량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LG경제연구원 2009).

##### □ 기후, 물 비즈니스 시장 성장

기후변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0년 이내에 매년 1,500억~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발달로 신 금융시장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물 비즈니스관련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화학분야는 분리막처리 및 생산분야로 전환될 것이며, 선진국은 아시아시장으로 진출하고, 관련 로컬기업이 글로벌자이언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기 외 2008).

##### □ 기후변화대응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37%, 2050년에는 52%까지 증가하여 기온이 1.7~2.4℃ 상승할 것으로 전망(OECD, 2008)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7℃만큼 기온이 상승했으며, 2050년에는 2000년 대비 2℃, 2100년 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생태계의 변화와 육상자원 부족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개발, 해양자원 개발 및 재활용기술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13).

## ⑤ 경제시장의 변화

### □ 체험적 소비 증가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한 협업(소셜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안전, 건강, 감성 중시의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서비스산업, IT산업, 문화산업 등 소프트웨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경제의 소프트화현상(예 : 빅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 예측기술의 발달)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발전연구원 2007,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또한, 웰빙(wellbeing), 홀리즘(holism)에 의해 자연친화적 여가 활동 및 무공해 상품이 각광받고 예방의학(예:건강검진, 성형수술, 치아교정 등)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KDI 2008).

### □ 일터와 가정의 분리개념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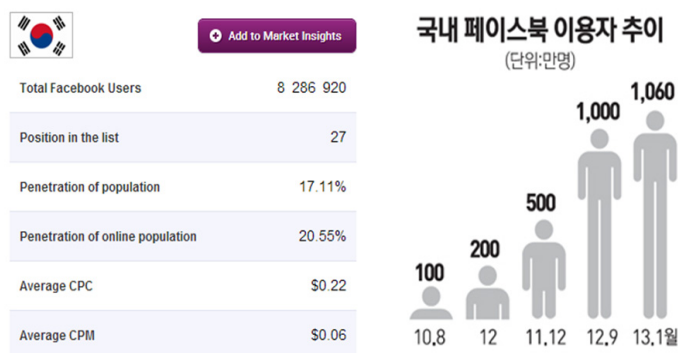
주거환경의 역할이 기존의 의·식·주를 위한 기본 생활환경에서 헬스케어, 홈오피스, 홈스쿨, 문화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향후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 로봇을 연계한 기본적인 기기제어부터 게임,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생활지원기능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노약자보호, 교육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KISTEP 2009, STEPI 2007).

또한, 재택근무의 확산 등 근무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이에 맞춰 기업들은 행태 구조를 좀 더 자유롭게 변화시켜 회사를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국토연구원 2009).

### □ 여성, 노령인구, 장애인의 노동참여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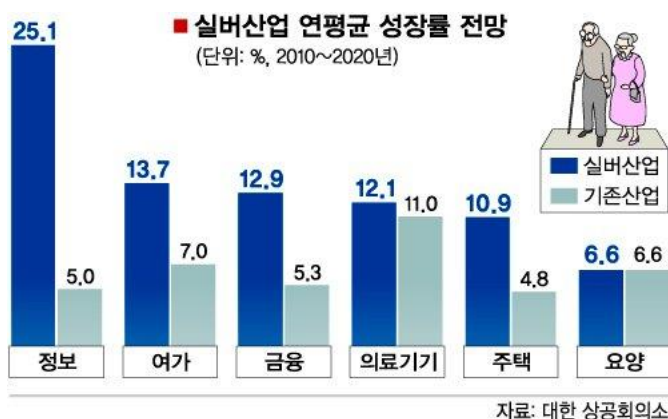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와 역할이 늘어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양성 친화적 환경이 일반화 되고 있다. 여성취업 증가,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은 일터와 가족을 변화시킬 것이다(과학기술부 2005, 정부민간합동작업단 2006, KISTEP 2008,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생산인구 공동화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여성·노년층·장애인의 노동 참여, 비전형적 경제활동 증가를 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노년층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TEPI 2007, 부산발전연구원 2007, 한국행정연구원 2008, 국토연구원 2009).



[그림 31]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수와 추이

출처 : <http://www.socialbakers.com/>



[그림 32]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

출처 : 세계일보 2009.12.31, 실버산업 황금시장으로 뜨나



#### □ 생체인식기능 결합 시스템 시장의 보편화

IT, BT, NT 신소재 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이 활발해지면서 생체측정시스템, 인공위성을 포함한 통신네트워크의 발달은 광범위한 실시간 원격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KDI 2008).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진보는 생체인식기술의 발전 및 Device기술 발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오감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친숙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UI기술을 진보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TEPI 2007, KISTEP 2009).

#### □ 경제적 양극화 심화

고성장기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저성장기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한 사회통합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근로자는 상층으로, 범용근로자는 하층으로 편입되면서 직업계층의 양극화 역시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07). 또한, 저성장 고착화,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부의 불균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미래전략포럼 2008).

#### □ 교역, 자본, 인력이동 패턴의 변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체결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등 선진통상국가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정부민간합동작업단 2006, 국토연구원 2009), 한편으로 보호주의, 자본 및 인력이동(이민 제한) 등 통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 2010). 이동패턴의 변화에 따른 안전 위험성 증대는 대테러방지기술, 방재기술, 경비산업 등 관련기술 및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 □ 도시 인프라의 변화 및 메가시티 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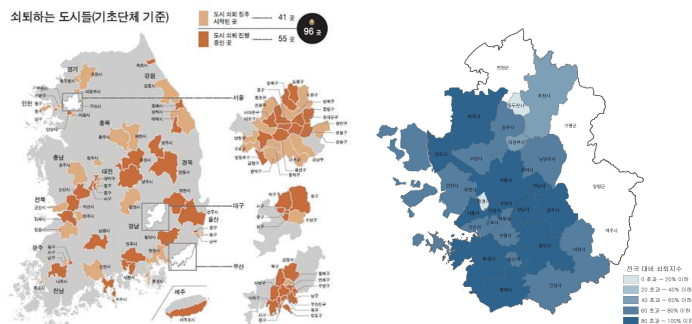
미국 도시토지연구소의 조사결과 세계주요도시 중 인프라 질 순위에서 한국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도시 쇠퇴현상이 지방과 수도권 막론하고 모두 발생하고 있다. 기존 도시인프라는 건설된 지 40~50년이 되어 설

계수명이 다해가고 있고, 동시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서 2020년까지 230개 지자체중 약 15%가 지속가능이 곤란한 지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중이며, 2009년 기준 세계인구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9.4% 이상이 1000만 이상인 메가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수도권지역 인구는 세계도시 중 8위 규모로 경제 글로벌화로 인한 도시인구 집중화가 예상되므로 국가경쟁력을 위해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메가시티는 초고가 주택, 도심 재개발등 틈새부동산 시장을 탄생시킬 것이다(김현기 외 2008).



[그림 33] 계층간 소득차이 변화  
출처 : 매일경제 2013.4.28. 발췌



[그림 34] 기초자치단체의 쇠퇴성 분석결과  
출처 : 이상대(2013)에서 발췌

## ⑥ 정치행정의 변화

### □ 정부기능의 변환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역할은 정책결정자에서 정책조정자 혹은 조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한국행정연구원 2008).

국가-시장-시민사회 구도에서 국가와 시장의 우위에 따른 권력의 비대칭성이 증대되어 행정 및 정치적 분권 뿐 아니라 경제적 분권까지 요구되는 정부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의 개발욕구 증대로 각종 규제완화 요구 가속화 및 지방정부의 상향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 □ 대의민주주의의 전환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는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슈 중심의 정책정당, 이념정당으로 정당구조가 재편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한국행정연구원 2008).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숙의(deliberation) 민주주의로 발전함에 따라 연고형 폐쇄적 집단중심 정치참여에서 네트워크화 된 개인중심 정치참여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 □ 정부고유의 정보를 활용한 통제력 강화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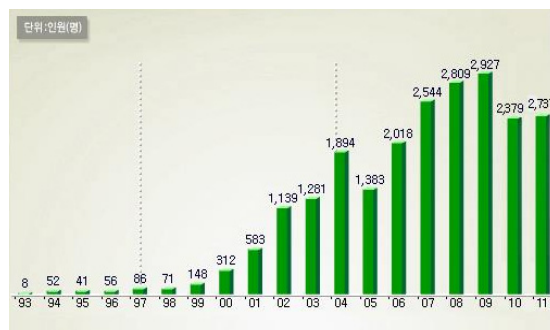
행정관리가 필요한 도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관 등 공간의 지능화로 정부의 행정통제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지식자원과 매력정치의 주도권, 즉 지식패권(knowledge hegemony)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며, 군사력·경제력을 넘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 지식력(knowledge power)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권력 행사 방식이 실력(實力, hard power)을 넘어서 매력(魅力, soft power)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 □ 남북관계개선

남북한 경제협력은 급속한 진전 또는 완만한 진전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남북한 교류가 현재보다 수십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도 정착을 도모하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역량강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부산발전연구원 2007).

북한의 인터넷 확산으로 권력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나 투쟁 발생 가능성에 의해 북한 문제의 국내화, 내부화, 급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 다극화 체제 가능성을 수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그림 35]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출처 : 통일부전자도서관 <http://lib.uniedu.go.kr>



[그림 36] 연도별 남북 교역액 현황

출처 : 통일부전자도서관 <http://lib.uniedu.go.kr>

[표 20] 국내 메가트렌드 변화 및 이슈

메가 트렌드	트렌드 이슈	내용
세계화	FTA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통합	· 전통산업 및 타기술/산업과 IT의 융합으로 생산성 제고 · 글로벌 무역체계의 발달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따른 e-커머스 성장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지리적 경계와 조직 경계의 약화	· 세계 연결망 구축으로 세계화의 가속화되어 시-공간 경계 약화, 동조화, 가상공간을 활용한 산업환경이 일반화 됨 · 국가간 경제적, 공간적 제약이 약화 되면서 부품/소재,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고 이를 기반한 신제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 일반적인 육체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급지식노동자의 비율 증가 · 국제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은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유발
고령화	삶의 질 중시 시대	· 고령화와 개인화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 · 삶의 가치가 가족과 여가중심으로 바뀌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로 전환하는 다운쉬프트 현상 증가
	비노동집약 사회진입	·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동력감소 및 복지수요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 · 활동하는 노년층의 자원봉사활동, NGO활동 등은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부담을 줄여줄 것 · 고령인구 비중 증대는 비노동 집약산업인 서비스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공공부문을 확대시킴
	노년층의 재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산업증대	· 고령화 소비트렌드 및 고령친화산업이 부상하여 재력있는 노년을 위한 서비스산업(재택의료, 재택쇼핑)이 증대
	가족해체	· 퀴앰컨비니언트 러브(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같은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30년 6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에너지	에너지 효율산업구조로 전환	·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소비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소비와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Energy Regime)차원의 접근이 적극검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재활용 및 재제조 산업, 환경산업, 에너지 소비 저감기술과 관련된 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은 연 20~30% 급성장세를 유지
	석유대체기술의 발달	· 수소에너지망을 통한 분산형-민주적 에너지 권력시대로의 전환되어 수소경제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기후변화 및 물부족	식량의 부족의 가중	· 사용하는 물의 70%가 농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하대수층은 해마다 줄어들고 강은 말라가는 등 물 부족 문제가 심화
	기후, 물, 비즈니스 시장 성장	· 물 비즈니스관련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화학분야는 분리막 처리 및 생산분야로 전환될 것이며, 선진국은 아시아시장으로 진출하고, 관련 로컬기업이 글로벌자이언트화 될 것으로 예상
	기후변화대응	·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생태계의 변화와 육상자원의 부족현상을 초래 가능하므로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개발, 해양자원 개발 및 재활용기술이 증가 할 것임

메가 트렌드	트렌드 이슈	내용
경제시장 의 변화	체험적 소비 증가	· 웰빙(wellbeing), 홀리즘(holism)에 의해 자연친화적 여가 활동 및 무공해 상품이 각광받고 예방의학(예, 건강검진, 성형수술, 치아교정등) 성장
	일터와 가정의 분리개념 약화	· 주거환경의 역할이 기존의 의·식·주를 위한 기본 생활환경에서 헬스케어, 홈오피스, 홈스쿨, 문화생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
	여성, 노령인구, 장애인의 노동참여 보편화	· 고령화로의 빠른 진전은 생산인구의 공동화로 이어질 위험 증대가 예상되나, 여성·노년층·장애인의 노동 참여, 비전형적 경제활동 증가를 유도
	생체인식기능 결합 시스템 시장의 보편화	· IT, BT, NT 신소재 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생체측정시스템, 인공지능을 포함한 통신네트워크의 발달은 광범위한 실시간 원격감시가 가능
	경제적 양극화 심화	· 고성장기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저성장기의 패러다임 전환됨에 따라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축소를 통한 사회통합개선의 노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근로자는 상층으로, 범용근로자는 하층으로 편입되어 중간층 분해
	교역, 자본, 인력이동 패턴의 변화	·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체결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등 선진통상국가 기반 마련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보호주의, 자본 및 인력이동(이민 제한) 등 통제 움직임 감지
	도시인프라의 변화 및 메가시티 시대 도래	· 도시 인프라가 건설 된 지 40~50년이 되어 설계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지방중소도시의 쇠퇴가 진행되어 2020년까지 230개 지자체중 약 15%가 지속가능곤란 지자체가 될 것으로 추정 · 수도권 지역 인구 세계도시 중 8위로 경제 글로벌화로 도시인구 집중화가 전망되므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확보
정치행정 의 변화	정부기능의 변환	·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역할은 정책결정자에서 정책조정자 혹은 조종자로 전환
	대의민주주의 의 전환	·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는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슈 중심의 정책정당, 이념정당으로 정당구조가 재편
	정부고유의 정보를 활용한 통제력 강화의 시대	· 지식자원과 매력정치의 주도권, 즉 지식패권(knowledge hegemony)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되며, 군사력, 경제력을 넘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 지식력(knowledge power)의 부상 · 권력 행사방식이 실력(實力, hard power)을 넘어서 매력(魅力, soft power)의 부상
	남북관계개선	· 남북한 경제협력은 급속한 진전 또는 완만한 진전 가능성이 높음 · 2018년 남북한 교류가 현재보다 수십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도모하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 북한의 인터넷 확산으로 권력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나 투쟁 등 발생 가능성에 의해 북한 문제의 국내화, 내부화, 급변화가 예상됨 · 동북아에서의 다국화 체제 가능성 등을 수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전망

## 2. 주요 메가트렌드와 건축정책의 관계 모색을 통한 방향 설정

미래 메가트렌드 내용을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앞서 진단한 국내·외 메가트렌드를 STEEP분석법<sup>4)</sup>을 통해 정리하였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건축·도시·조경분야와 개연성 있는 33개를 선정하고 각각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하였고, STEEP분석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메가트렌드를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경제적변화, 환경적변화, 정치·정책적 변화 등 5개로 구분하였다.

### 1) 사회적 변화

-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

건강비용 증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양극화 심화, 다문화 사회형성, 도시 쇠퇴화 진행, 삶의 질 중시 등 총 7개 항목을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 건축정책의 방향성 설정

각 키워드는 2-3개의 국정 국정과제로 세분화하였으며,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구축방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한 제도개선, 농어촌 지역 육성방안 마련,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구축,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방안 마련 등 14개 국정과제와 44개의 세부 항목을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회여건으로 분류하였다.

---

4) 미래 트렌드 키워드 선정 및 분석의 틀 : STEEP 분석법

STEPP분석은 대표적인 거시환경분석 기법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것을 둘러싼 사회(Society), 기술 (Technology), 경제(Economics), 생태(Ecology), 정치(Politics)의 영역에 대해 각각의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 중요한 동향이나 이슈를 상호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2013;한국정보화진흥원,2010;박경아 외,2013)

[표 21] 사회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
건강비용의 증가	국민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 의료복지를 위한 예방, 치료, 관리시스템 적용(홈케어, 홈 닥터) · 3고 문제(질병, 빈곤, 고독) 해결을 위한 복지 체계 포함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치료중심 → 예방과 관리중심을 위한 시스템 도입 · 건강지출비용 증가 → 소비시장의 확대를 고려 · 노인계층 중심의 전문 의료 서비스 체계, 공간 조성 · 노인계층의 세분화(60대, 70대, 80대, 90대, 남/여)된 의료 전문화
저출산 고령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 노인소비 상품 서비스 육성 → 지역 부동산시장과 연계 · 의료, 여행, 장모 산업의 성행(육아, 보육시설 수요 감소 or 고급화) · 노인 전용 지역개발 도시계획, 주택정책 방향 제시 · 1인세대, 2인세대, 독거노인 등을 위한 주거유형 확대보급
	고부가가치 사회 일자리서비스 확충	· 비노동집약형 일자리 확대 · 노령계층의 재력,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 사회 · 체험형 소비 대응 서비스 관련 일자리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 남성중심의 평면구조의 변화 필요 · 업무용 시설의 체육·보육시설 추가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범죄 예방설계기준(CEPTED)의 확대 적용
양극화 심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농어촌 지역 유형별 경관 계획 수립 · 농어촌 경관개선 사업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안정 대책 강화	· 노후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통한 주거 공급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
	국민 대통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 도시재생 사업의 지역 할당제 시행 · 지역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다문화 사회형성	국정과제없음	· 저개발국 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일상화 · 외국인 구성비 증가



도시 쇠퇴화 진행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쇠퇴현상의 전국화에 따른 자발적 지역 활성화 장려 책 마련</li> <li>· 지속가능이 곤란한 지방정부의 출현: 자족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li> <li>· 지자체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li> <li>· 맞춤형 재생전략 수립 지원</li> </ul>
	주거안정 대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한 미분양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추진</li> <li>· 주거 취약 계층을 고려한 최소생계유지형 주거 공급</li> <li>· 아파트 중심의 주거시장에서 주거공급 유형의 대변화</li> </ul>
삶의 질 중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산업유산 및 유희시설 재활용, 문화시설화</li> <li>· 구역사, 폐선부지 등 문화공간 조성 추진</li> <li>· 폐교, 농어촌 유희시설 문화공간 활용</li> <li>· 문화공간을 창작공간, 전시, 공연 공간으로 유형화하여 문화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는 여건 조성</li> </ul>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 한국 정원 등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체계 마련</li> <li>· 전통 및 근대 건축문화유산의 관리체계 구축 및 관광상 품화</li> <li>· 미래형 한국 건축문화에 대한 방향 모색</li> </ul>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고려한 복합 체육공간 조성추진</li> <li>· 유희부지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공간 확충</li> <li>· 기존 체육시설의 개편과 생활체육 기능 부여</li> </ul>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자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li> <li>· 도시에 인접한 자연지역을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 및 관 광자원화</li> <li>· 소득증대, 주5일제, 고령화, 가족형태 변화 등으로 가치가 가족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한 지역별 생활문화 공간 조성</li> </ul>

## 2) 기술적 변화

-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

기술의 융복합화, 안전위험성 증대,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기술적 변화에 대한 3개 항목을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 건축정책의 방향성 설정

기술적 변화에서는 IT산업 발달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노후 인프라 관리·개선 등 키워드에 따라 총 6개 국정과제와 19개 세부 항목을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으로 분류하였다.

[표 22] 기술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
기술의 융복합화	국가 과학기술 혁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영역의 IT, 정보접근성 증대</li> <li>· IT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공동체 사회 출현</li> <li>· 중대형 건축물의 로봇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형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li> <li>· 건축관련 R&amp;D 전략계획, 실행계획 수립</li> <li>· 설계기술의 첨단화: 오감인터페이스, 증강현실 적용</li> <li>· IT와 에너지 기술의 융합된 건축물 proto type 제시</li> <li>·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과 공간기술간의 융합</li> </ul>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PTED 기술의 표준화, 스마트 디바이스와 공간정보 실시간 연계</li> </ul>
안전위험성 증대	성폭력으로 안전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폐공간을 최소화 하는 건축 설계안 장려</li> <li>· 위급 알림 시스템 설치의 일반화</li> <li>· 공간정보를 활용한 위험지역 알림 시스템 기술 표준화</li> </ul>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개방, 공공공간의 비율 확대</li> <li>· 위급 알림 시스템 설치 의무화</li> <li>· 학교숲, 학교정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 면적의 확대</li> </ul>
도시인프라 노후화	총체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인 인프라 노후도 DB 구축</li> <li>·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 감시 네트워크 항시 가동</li> <li>·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위험지역과 인접한 도시지역에 대한 지정·관리</li> </ul>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사업시 지역 환경, 생태를 고려하여 도시와 자연이 공존 가능한 도시로 재생</li> <li>· 노후되어 재난이 예상되는 노후인프라 시설을 자연환경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개선, 신설</li> </ul>

### 3) 경제적 변화

-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

FTA 확대/새로운 국제적 산업구조 및 서비스 출현/지식기반경제의 확대, 메가시티의 발전, 글로벌 인재의 부상 등 총 3개 항목을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 건축정책의 방향성 설정

경제적 변화에서는 해외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키워드에 따라 총 3개의 국정과제와 19개 세부 항목을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으로 분류하였다.

[표 23] 경제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
FTA의 확대 · 새로운 국제적 산업구조 및 서비스의 출현 · 지식기반경제	해외건설, 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 해외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세일즈 외교 필요 · 대외경제 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지원 · 저개발국가, 신흥개발국가 시장개척 지원
	서비스산업, 전략 육성 기반 구축	· FTA를 체결한 신흥개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 수출 전략 수립 · 국내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의 국제 경쟁력 확보, 해외진출 추진 · 육성된 글로벌 인재와 연계한 인력구조 개편 ·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국제화에 저해되는 규제 완화 · 신진 건축가 육성 및 국제 브랜드화 · 우수 건축, 조경가 기업 해외소재 및 지원
메가시티발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 노후된 도시 인프라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지방중소도시의 쇠퇴화를 막을수 있는 도시재생방안 마련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시티 건설 및 관리방안 제도화
글로벌 인재의 부상	청소년 역량개발,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확대 · 사이버교육, 가상교실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환경 전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건축·도시 전문 지식인재와 전문 노동자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 · 전문자격증 취득 요건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건축, 도시, 조경 등의 첨단설계기술의 분야간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글로벌 인재로 교육받아 양성된 이들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창업, 벤처 우선 기회 부여, 실무 비즈니스 환경 마련

#### 4) 환경적 변화

-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

환경적 변화에서는 기후변화, 환경관련 신기술 신산업 성장, 에너지 다 소비 및 수요 증가 등 총 3개 항목을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 건축정책의 방향성 설정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증대, 기상변화 고려, 에너지 절감형 건축모형 개발 및 시범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 등 관련 키워드에 따라 5개 국정과제와 16개 세부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24] 환경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 정책의 방향성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 신규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설계 기준 강화 · 에너지 소비 총량제 등 소비 관리체계 도입 · 물순환 친화형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산업, 주거지역에 적용할 녹색건축 설계기법 개발
	기상이변 등 기후 변화 적응	· 5년 이상 중장기 건설, 개발 관련 계획 수립시 미래 기후 여건 고려 · 기상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된 공간 DB 구축 ·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한 산업구조 변화 대비
환경관련 신기술, 신산업 성장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 구제 강화	· 도시배출 유해물질 처리 시스템의 분산화, 고도화 ·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개발 · 환경피해, 오염지역의 생태적 회복 방안 개발 · 유해물질 자원화 산업 제도적 지원
에너지 다소비 수요 증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시티 시범 단지 조성 · 비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건축 모형 개발 · 탄소제로 건축 시범 사업 지속 진행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 순환사회 실현	· 수소에너지 사회를 대비한 도시, 건축 모형 개발 ·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방안 마련

## 5) 정치, 정책적 변화

-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

정치, 정책적 변화에서는 남북통합, 국제정세, 지방 분권화 등 총 3개 항목을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 건축정책의 방향성 설정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연구 구상, 탄소배출권 이행 및 도시 시스템 수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마련 등 관련 키워드에 따라 2개의 국정과제와 9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남북 통합과 국제정세의 경우 키워드와 세부항목(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으로 구성하였다.

[표 25] 환경적 변화 유형의 건축정책 방향성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 정책의 방향성
남북통합	국정과제 없음	· 남북한 통합에 대비한 북한 지역 연구 정책적으로 추진 · 다양한 통일 방식을 고려한 도시계획 대안 구상
국제정세	국정과제 없음	· 탄소배출권 이행을 위한 도시차원의 대안 마련 · 급성장하는 서해안권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 도시 시스템의 수출
지방 분권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지방, 수도권 경계지역에 설정된 개발제한관련 규제 완화 ·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권한 이양 · 상향식 의사결정체계 마련으로 자발적 발전 유도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지방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여 경제적 관리 권한 부여 및 부채관리 · 지방정부 발생 부채의 기업경영적 책임제 적용 검토

### 3. 전문가가 전망하는 건축정책의 방향

#### 1) 조사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건축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에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축, 도시, 조경분야의 메가트렌드의 변화의 중요도를 알아보고 각 변화에 포함된 관련 이슈들의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제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6대 추진전략 및 18개 실천과제와 5대 메가트렌드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진단한 메가트렌드가 반영 되어야 할 건축정책에 대한 보완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은 2013년 10월에 2주간 전문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e-mail을 활용한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총 25명의 전문가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조사대상 전문가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건축정책 관련 정책분야의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관련 전공분야 교수,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응답자 일반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공무원 3명, 사업체 3명, 연구직 16명, 3명 등 총 25명으로, 경력 최소 10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평균 경력 연수로는 공무원이 23.7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사업체와 학계 교수가 각각 19.3년, 연구직이 12.7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26] 설문참여 전문가 일반현황

구분	빈도수 (명,%)	평균경력(년)
공무원	3(12%)	23.7
사업체	3(12%)	19.3
연구직	16(64%)	12.7
학계 교수	3(12%)	19.3
총합계	25(100%)	11.8

### 3) 전문분야별 메가트렌드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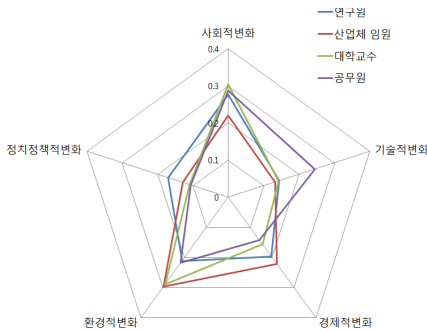
메가트렌드에 포함된 변화의 중요도에 대해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경제적변화’, ‘환경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원 집단은 사회적변화, 환경적변화, 경제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기술적변화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가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변화요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이 대응하게 인식하고 있다. 산업체 임원 집단은 환경적변화, 경제적변화,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변화를 유사한 위치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학교수 집단은 사회적변화, 환경적변화, 경제적변화, 기술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를 두드러지게 크게 보고 있다. 공무원 집단은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환경적변화, 경제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학교수 집단, 연구원 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변화를 다른 변화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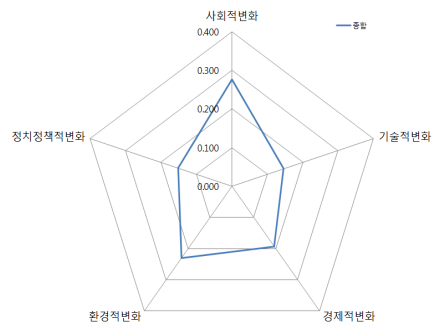
각 분야의 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사회적변화, 환경적변화, 경제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기술적변화의 순으로 중요도를 나열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의 중요도는 다른 가치에 비해 중요하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 변화와 정치·정책적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건축정책에서 반영하는데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27] 5대 메가트렌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 결과

구 분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경제적변화	환경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CI
연구원	<b>0.276</b>	0.144	0.197	0.212	0.17	0.0014
산업체 임원	0.221	0.132	0.222	<b>0.297</b>	0.129	0.0036
대학교수	<b>0.304</b>	0.142	0.156	0.289	0.109	0.0043
공무원	<b>0.288</b>	0.245	0.142	0.218	0.107	0.0292
종합	<b>0.276</b>	0.146	0.194	0.231	0.152	0.0006



[그림 37] 직종별 가중치



[그림 38] 종합 가중치

#### 4)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5대 메가트렌드 중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을 7개 그룹 4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설문하였다. 세부항목의 내용은 표-29과 같으며, 타당함의 기준점수를 1점으로 하여 정리한 결과 총 44개의 세부항목 중 18개 항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점 이상의 항목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주거공급 문제에 대한 미래트렌드 반영의 타당성이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즉, 노후주택의 신축 및 개량을 통한 주거공급이 1.6점으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 및 1인 2인세대형 주거보급(1.44점), 아파트에서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변화(1.44점)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다. 다소 낮은 타당성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유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1.08점)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시설의 체육시설 추가 시 인센티브 부여(1.4점), 미래형 한국 건축 문화방향 모색(1.4점)이 해당한다. 더불어 다소 낮은 점수이지만, 전통 및 근대 건축관리 체계 구축 및 관광상품화(1.12점), 구역사 폐선 부지 등 문화공간조성 추진(1.12점), 한국 전통 건축의 해외홍보 체계 마련(1.12점), 폐교 농어촌 유희시설문화 공간 활용(1.04점), 문화 프로그램 연계여건 조성(1.00점), 생활



권 단위생활 체육 공간확충(1.00점)등을 들 수 있다.

도시안전과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한 항목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주거 취약계층을 고려한 최소 생계 유지형 주거공급(1.36점), 지역성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추진(1.32점), 근대 산업유산 및 유희시설 재활용(1.32점), 지자체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1.24점), 맞춤형 재생전략 수립지원(1.24점), CEPTED 확대 적용(1.12점)이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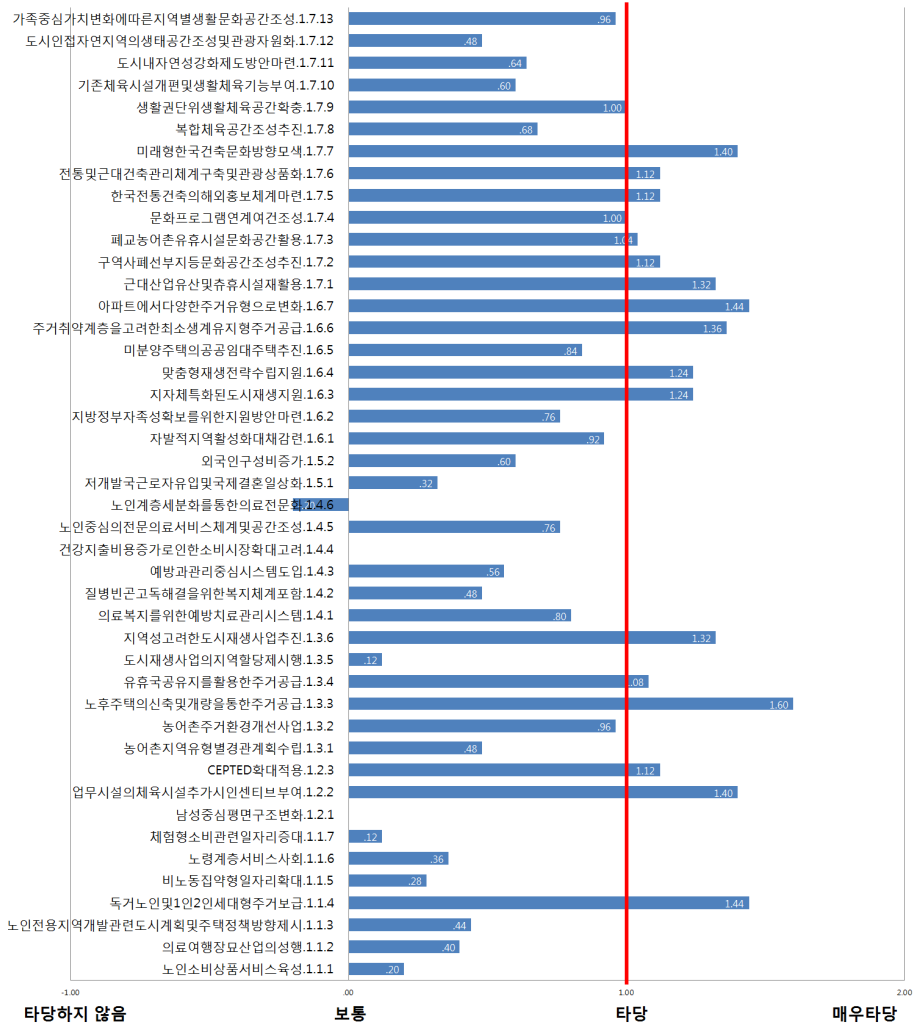
반면에 남성중심 평면구조 변화 (0.00점), 건강지출비용증가로 인한 소비시장 확대고려 (0.00점), 노인계층세분화를 통한 의료전문화 (-0.20점)은 사회적 변화에 포함된 미래트렌드이지만, 건축정책에 포함되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사회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사회적 변화 트렌드	평균	표준편차
노인소비상품 서비스 육성	.20	1.080
의료여행 장묘산업의 성행	.40	1.155
노인전용지역 개발관련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방향제시	.44	1.158
<b>독거노인 및 1인 2인세대형 주거 보급★</b>	<b>1.44</b>	<b>.870</b>
비노동집약형 일자리 확대	.28	1.061
노령계층 서비스 사회	.36	1.150
체험형 소비관련 일자리 증대	.12	1.054
남성중심 평면구조 변화	.00	1.155
<b>업무시설의 체육시설 추가시 인센티브 부여★</b>	<b>1.40</b>	<b>.866</b>
<b>CEPTED확대 적용★</b>	<b>1.12</b>	<b>1.054</b>
농어촌지역 유형별 경관계획 수립	.48	.918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96	.790
<b>노후주택의 신축 및 개량을 통한 주거공급★</b>	<b>1.60</b>	<b>.500</b>
<b>유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b>	<b>1.08</b>	<b>.862</b>
도시재생사업의 지역활당제 시행	.12	.881
<b>지역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추진★</b>	<b>1.32</b>	<b>.945</b>
의료복지를 위한 예방치료 관리시스템	.80	1.041
질병·빈곤·고독해결을 위한 복지체계 포함	.48	1.122

사회적 변화 트렌드	평균	표준편차
예방과 관리중심의 시스템 도입	.56	.961
건강지출비용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 확대 고려	.00	.707
노인중심의 전문의료서비스 체계 및 공간 조성	.76	.723
노인계층 세분화를 통한 의료전문화	-.20	.866
저개발국 근로자 유입 및 국제결혼 일상화	.32	.945
외국인 구성비 증가	.60	.764
자발적 지역활성화 대책 마련	.92	1.038
지방정부 자족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76	1.052
<b>지자체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b>	<b>1.24</b>	<b>.879</b>
<b>맞춤형 재생전략 수립지원★</b>	<b>1.24</b>	<b>.831</b>
미분양 주택의 공공임대 주택 추진	.84	.800
<b>주거취약계층을 고려한 최소생계유지형 주거공급★</b>	<b>1.36</b>	<b>.569</b>
<b>아파트에서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변화★</b>	<b>1.44</b>	<b>.712</b>
<b>근대산업유산 및 유희시설 재활용★</b>	<b>1.32</b>	<b>.748</b>
<b>구역사 및 폐선부지 등 문화공간 조성 추진★</b>	<b>1.12</b>	<b>.726</b>
<b>폐교·농어촌 유희시설 문화공간 활용★</b>	<b>1.04</b>	<b>.790</b>
<b>문화프로그램 연계 여건 조성★</b>	<b>1.00</b>	<b>.707</b>
<b>한국 전통건축의 해외홍보 체계 마련★</b>	<b>1.12</b>	<b>.726</b>
<b>전통 및 근대건축 관리체계 구축 및 관광상품화★</b>	<b>1.12</b>	<b>.781</b>
<b>미래형 한국건축문화 방향 모색★</b>	<b>1.40</b>	<b>.645</b>
복합체육공간 조성 추진	.68	.900
<b>생활권단위 생활체육공간 확충★</b>	<b>1.00</b>	<b>.707</b>
기존 체육시설 개편 및 생활체육 기능 부여	.60	.764
도시 내 자연성 강화제도 방안 마련	.64	1.036
도시인접 자연지역의 생태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화	.48	1.005
가족중심 가치변화에 따른 지역별 생활문화공간 조성	.96	.841
범례 : ★ 건축정책 수립시 필히 반영이 필요한 여건변화 요소(1점 이상)		

### 사회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그림 39] 사회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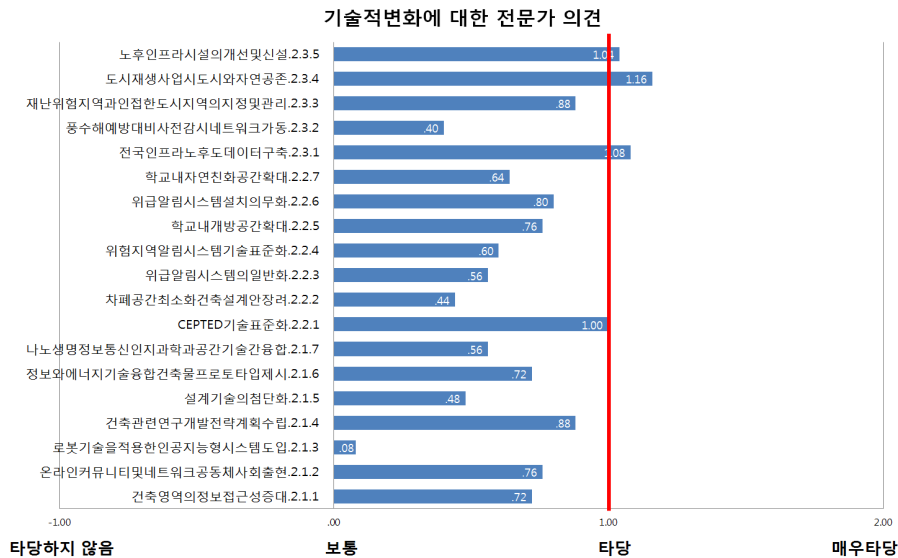
## 5) 기술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5대 메가트렌드 중 기술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은 총 3개 그룹 총 1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타당성을 설문하였다. 이중 기준점수 1점 이상으로 정책 반영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총 19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해당한다.

가장 높게 도출 된 것은 1.16점인 도시재생사업시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었으며, 이후 전국 인프라 노후도 데이터구축 (1.08점), 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 및 신설 (1.04점), CEPTED 기술 표준화 (1.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게 도출 된 것은 0.08점으로 로봇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형 시스템도입으로 아직 건축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다소 이른 미래트렌드로 인식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9] 기술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기술적 변화 트렌드	평균	표준편차
건축영역의 정보접근성 증대	.72	.980
온라인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공동체사회 출현	.76	.970
로봇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형 시스템 도입	.08	.759
건축관련 연구개발 전략계획 수립	.88	.927
설계기술의 첨단화	.48	1.005
정보와 에너지기술 융합건축물 프로토타입 제시	.72	1.021
나노생명, 정보통신, 인지과학과 공간기술간 융합	.56	1.121
<b>CEPTED 기술표준화★</b>	<b>1.00</b>	<b>1.041</b>
차폐공간 최소화 건축설계안 장려	.44	.870
위급알림 시스템의 일반화	.56	.917
위험지역 알림시스템 기술표준화	.60	.866
학교 내 개방공간 확대	.76	.831
위급알림 시스템 설치의무화	.80	.816
학교 내 자연친화공간 확대	.64	.810
<b>전국 인프라 노후도 데이터 구축★</b>	<b>1.08</b>	<b>.702</b>
풍수해 예방대비 사전감시 네트워크 가동	.40	1.000
재난위험지역과 인접한 도시지역의 지정 및 관리	.88	1.130
<b>도시재생사업 시 도시와 자연 공존★</b>	<b>1.16</b>	<b>.850</b>
<b>노후 인프라시설의 개선 및 신설★</b>	<b>1.04</b>	<b>.611</b>
범례 : ★ 건축정책 수립시 필히 반영이 필요한 여건변화 요소(1점 이상)		



[그림 40] 기술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6) 경제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5대 메가트렌드 중 경제적변화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총 3개 그룹 19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여 설문하였다.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1점을 타당성의 기준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총 19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정책반영에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에 저해되는 규제완화와 첨단 설계기술의 분야간 교류 및 네트워크기반 강화가 각각 1.2점으로 공통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국제경쟁력확보 (1.16점), 지방중소도시 쇠퇴방지 방안 마련(1.16점), 건축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조성 (1.00점)를 정책 반영에 타당한 미래 트렌드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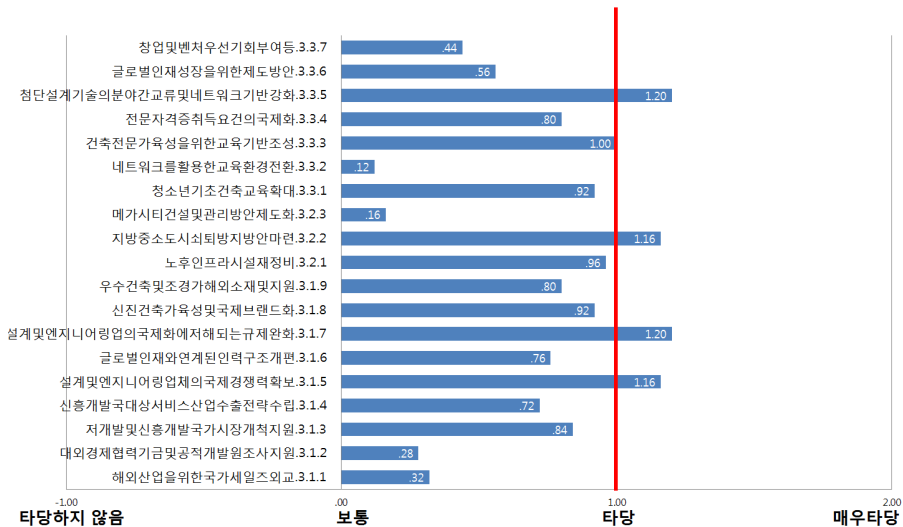
반면, 미래 트렌드에서 경제적 변화에 반영된 사항이나 정책반영에 타당하지 않은 항목은 메가 시티건설 및 관리방안 제도화(0.16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환경 전환(0.12점)이 가장 낮은 그룹에 해당되었다. 이는 향후 대규모 도시건설이 우리나라 여건에 다소 부정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30] 경제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경제적 변화 트렌드	평균	표준편차
해외산업을 위한 국가세일즈 외교	.32	1.249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공적개발원 조자 지원	.28	.891
저개발 및 신흥개발국가 시장개척 지원	.84	.898
신흥개발국대상 서비스산업 수출전략 수립	.72	.891
<b>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b>	<b>1.16</b>	<b>.850</b>
글로벌인재와 연계된 인력구조 개편	.76	.879
<b>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의 국제화에 저해되는 규제 완화★</b>	<b>1.20</b>	<b>.764</b>
신진건축가 육성 및 국제브랜드화	.92	.812
우수건축 및 조경가 해외소재 및 지원	.80	.764
노후 인프라시설 재정비	.96	.978
<b>지방중소도시 쇠퇴방지 방안 마련★</b>	<b>1.16</b>	<b>.850</b>
메가시티 건설 및 관리방안 제도화	.16	1.106
청소년 기초건축교육 확대	.92	.997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환경 전환	.12	1.201
<b>건축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b>	<b>1.00</b>	<b>.764</b>
전문자격증 취득요건의 국제화	.80	.866
<b>첨단설계기술의 분야간 교류 및 네트워크 기반 강화★</b>	<b>1.20</b>	<b>.707</b>
글로벌 인재성장을 위한 제도방안	.56	.917
창업 및 벤처 우선기회 부여	.44	1.003

법례 : ★ 건축정책 수립시 필히 반영이 필요한 여건변화 요소(1점 이상)

경제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그림 41] 경제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7) 환경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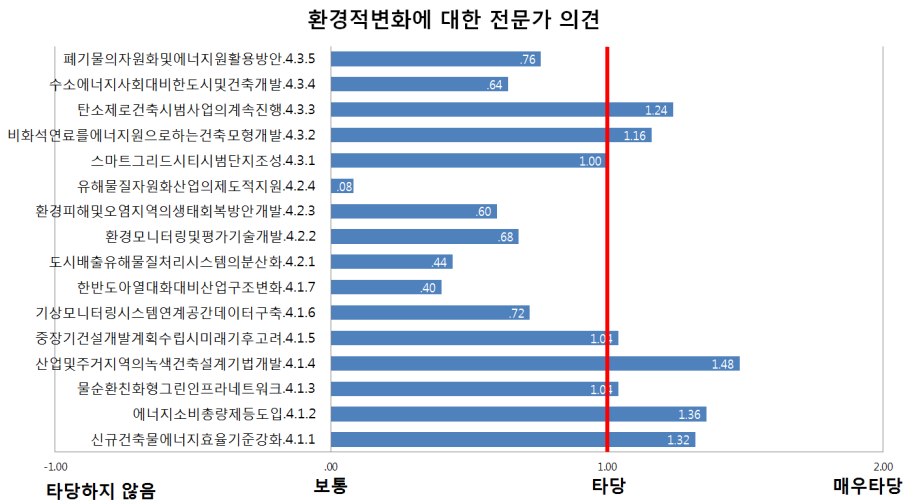
종합가중치 점수에서 사회적변화에 이어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환경적변화에 해당하는 정책반영의 고려 사항으로 3개 그룹 16개 항목을 설문하였다. 총 16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정책반영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이 높은 순으로 정리 해보면, 산업 및 주거지역의 녹색건축 설계기법 개발(1.48점), 에너지 소비총량제 등 도입(1.36점), 신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기준강화(1.32점), 탄소 제로 건축시범사업의 계속진행(1.24점), 비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건축모형개발(1.16점), 물 순환 친화형 그린인프라 네트워크(1.04점), 중장기 건설 개발 계획 수립시 미래기후 고려(1.04점), 스마트 그리드시티 시범단지조성(1.00)의 순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앞으로 유효하게 필요한 미래트렌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이후 기후변화를 고려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함에 필요한 미래트렌드인 유해물질 자원화 산업의 제도적 지원이 0.08점에 불과하게 도출되어 정책적 차원의 고려가 더불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환경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환경적 변화 트렌드	평균	표준편차
신규 건축물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1.32	.557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도입★	1.36	.569
물순환 친화형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1.04	.735
산업 및 주거지역의 녹색건축 설계기법 개발★	1.48	.586
중장기 건설개발 계획수립시 미래기후 고려★	1.04	.841
기상모니터링시스템 연계공간 데이터 구축	.72	.891
한반도 아열대화 대비 산업구조 변화	.40	1.041
도시 배출 유해물질 처리시스템의 분산화	.44	.821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개발	.68	.945
환경피해 및 오염지역의 생태회복 방안 개발	.60	1.118
유해물질 자원화산업의 제도적 지원	.08	1.152
스마트 그리드시티 시범단지 조성★	1.00	.957
비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건축모형 개발★	1.16	.624
탄소제로 건축 시범사업의 계속진행★	1.24	.663
수소에너지사회에 대비한 도시 및 건축 개발	.64	.907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원 활용 방안	.76	1.091
범례 : ★ 건축정책 수립시 필히 반영이 필요한 여건변화 요소(1점 이상)		



[그림 42] 환경적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8) 정치·정책적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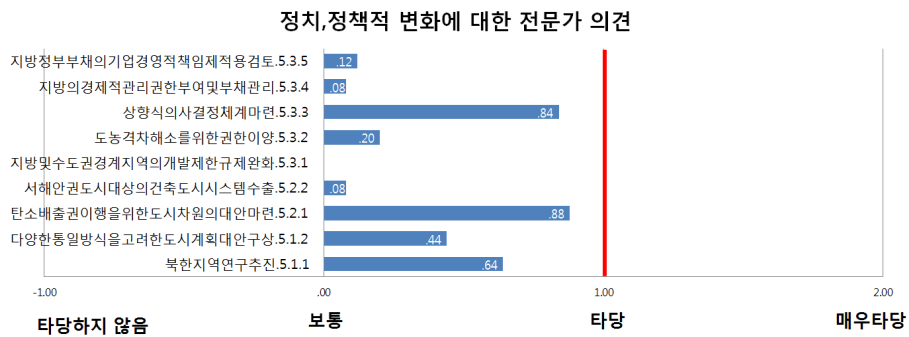
5대 메가트렌드 중에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정치·정책적 변화는 총 3개 그룹 9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설문하였다.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책반영에 타당한 세부항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탄소 배출권 이행을 위한 도시차원의 대안마련 (0.88점), 상향식 의사 결정체계 마련(0.84점)이 다소 높게 나타나 앞으로 변화하게 될 정치 정책적 여건 중 환경적 정책과 풀뿌리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 경제지역의 개발제한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0.00점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주변의 규제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국한된 문제이기도 한 남북문제 관련해서는 0.64점으로 건축정책적 타당성이 낮게 나와 아직까지는 별도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정치·정책적 변화에 대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정치·정책적 변화 트렌드	평균	표준편차
북한지역 연구 추진	.64	1,254
다양한 통일방식을 고려한 도시계획 대안 구상	.44	1,193
탄소배출권 이행을 위한 도시차원의 대안 마련	.88	1,013
서해안권 도시대상의 건축도시시스템 수출	.08	.909
지방 및 수도권 경계지역의 개발제한 규제 완화	.00	1,155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권한 이양	.20	1,118
상향식 의사결정체계 마련	.84	1,179
지방의 경제적 관리 권한 부여 및 부채관리	.08	1,222
지방정부 부채의 기업경영적책임제 적용 검토	.12	1,333



[그림 43] 정치·정책적 변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제4장 새 정부 국정과제와 건축정책

1.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건축정책의 대응 현황
2.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개선방향

### 1.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건축정책의 대응 현황

#### 1) 건축·도시분야와 관련된 새 정부 국정과제

지난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부처별, 부서별 주요정책 및 사업을 국정과제의 기조에 부합되도록 개선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난 5월에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140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건축정책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고 향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 33개의 국정과제를 선별한 결과는 아래 표34와 같다. 선별한 기준은 앞장에서 언급한 국가사회적 미래트렌드에 따라 건축·도시분야에서 대응이 필요 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에서 선별하였다.

[표 33]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건축정책 관련 과제

국정 기조	전략	국정과제
1. 경제 부흥	1. 창조경제	0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0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0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3. 민생경제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2. 국민 행복	4. 맞춤형 고용복지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6.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52.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6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5. 창의교육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7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6. 국민안전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83.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8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88.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89.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90.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9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96.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7. 사회통합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3. 문화 융성	8. 문화참여 확대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110.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9. 문화예술 진흥	112.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추진 기반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116.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14. 신뢰받는 정부	134. 국민중심 서비스정부 3.0 구현

## 2)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에서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2013년도 업무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변경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건축·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 부처로는 크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으며, 해당되는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계획을 정리하면 표35와 같다.

[표 34] 중앙부처 업무계획 중 건축·도시 관련 주요정책

중앙 부처	업무계획	
	과 제	추진계획
국토 교통부	국민 체감형 지역발전정책 추진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 추진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제로 전환	개발사업 프로세스 전환
		과잉개발 예방
		난개발 방지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실내공간정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과 공간정보 R&D 사업 추진
	건설교통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정부 3.0구현
		도시 + IT = U-City 산업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 IT 문화 = 창조기업 인큐베이터
		건설 ENG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산업단지를 창조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	건설 ENG 업계의 기술력 제고
		미래창조기업을 유치할수 있는 산업 입지 중점 지원
		노후산단 재창조를 위해 기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유치
	도시홍수 방지 기반 마련	우수인재를 산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산단의 정주환경 개선
		도시침수 종합대책 추진
	국민 일상생활 불편 개선	주거생활 불편개선
		환경생활 불편개선
	서민 주거복지 강화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행복주택 공급계획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중앙 부처	업무계획	
	과 제	추진계획
농림 축산 식품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친환경축산단지 (유휴 농·산지를 활용한 축산농가 단지화)
	산림부국 실현	숲 교육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생활여건 개선	(기초 인프라) 농촌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 추진
		(주거교통)경관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 개량, 중심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해양 수산부	국민힐링(Healing)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 조성 -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육성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
	연안어촌의 국민생활 공간화	국민들이 즐겨찾는 시민친화적 해양공간 조성
	협업과제	연안침식 통합관리
마중조 관청부	협업과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
교육부	(협업과제) 대학생 기숙사 확충	기숙사 수용률을 '12년 18.4%에서' 17년 25%까지 확대(사업비 기준)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에 따라 대학생 행복(연하) 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건립 재원 확보 지원
		캠퍼스 밖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등 건립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중심의 협력관계를 지자체까지 확대·강화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분담체계 구축

#### □ 국정기조 1 경제부흥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경제부흥과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해 건축정책의 범위에서 중앙부처에서 대응이 가능한 세부업무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36과 같다.

관련 주관부처로는 국토부, 해수부, 농축산부가 해당되며, 주로 국정과제 14번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27번 주거안정 대책 강화, 37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련된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성장,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하는 국정과제에 대해 대응하는 과제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국정기조 1 경제부흥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전략	국정과제	부처 세부업무계획	주관부처
1. 창조경제	04. <b>중소기업 성장</b> 희망사다리 구축	-	-
	05.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민간업체의 U-서비스 정보유통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U-City R&D 연구 참여확대와 해외진출을 적극지원	국토부
	09. <b>보건·관광·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성장</b>	-	-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마리나)거점형 국제 마리나를 조성하고, 10~30척 규모의 소규모 마리나 개발 완료('13.하)	해수부
		•연안유휴지(자연형성지, 국공유지 등)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친수공간오토캠핑장 등 실속형의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해수부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국가미항 개발사업 등을 통해 품격있는 항만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해수부
3. 민생경제	14. <b>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b> 기반 구축	•건설 ENG 분야의 종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감라CM 등 칸막이로 분리된 건설 ENG 업역을 단일화(건기법 개정 '13.5)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업역별로 구분된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기술등급 체계로 개선(개선안마련 '13.4, 건기법 하위법 개정 '13.7. 입법예고)	국토부
		•신기술 지정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컨설팅 센터”를 운영('13.4) •복잡다양한 51종 설계시공기준을 코드화 ('13.8)하고, 설계시공시 민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중심 기준으로 단계적 전환	국토부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임대주택은 건설(7만)과 매입전세방식(4만)을 합하여 연 11만호, 분양주택은 최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 2만호 공급	국토부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 개발 방식으로 건설, 지역 활성화도 도모	국토부
		•향후 5년간('13~'17)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13년에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 1만호 시범사업	국토부

전략	국정과제	부처 세부업무계획	주관부처
	37.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심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	국토부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주택바우처 도입	국토부
		•주택기금을 통한 구입전세자금지원을 기존 18→28만가구로 확대	국토부
		•생애주기상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
		•공공임대주택을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거점으로 활용	국토부
		•주택개량 용자 지원 확대(12년 8천동, 4천억원 → '13: 10천동, 5천억원)	농축산부

#### □ 국정기조 2 국민행복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에 대응하는 세부업무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37과 같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민행복에 해당되는 과제는 일상생활에서의 공간환경 개선 측면에서 건축정책으로 대응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부처에서의 건축과 관련된 세부업무계획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과제 44번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6번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49번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66번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70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4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76번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 환경 조성, 88번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90번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92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96번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의 과제에 대해 대응하는 정책은 부족하였다. 반면, 83번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94번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02번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과제에 집중적으로 정책이 편중되어 있고, 건축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를 대응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과제가 상당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처 과제 및 사업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36] 국정기조 2 국민행복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전략	국정과제	부처 세부업무계획	주관부처
4. 맞춤형 고용 복지	44.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	-	-
	46.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	-
	49.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
	52.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 정비(80개소) : 공공서비스기반 확충 등 중심지 기능 강화(농충공원 등 문화복지 시설 확충,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등)</li> <li>•마을 개발(270개소) : 경관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역점</li> <li>•지역개발 정책사업 추진시 농촌정비계획 및 농촌시설계획(읍면, 마을 등) 수립 의무화 추진</li> </ul>	농축산부
	60.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
	61.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	-
	63.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약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한 실내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13.12)	국토부
5. 창의 교육	66.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
	70.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
6. 국민안전	74.상목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76.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
	83.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습도시침수지역에 대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치수시설을 연계하는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마련</li> <li>•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역내 치수시설 간 연계관리, 도시 물순환 촉진 등 통합수량 관리체계 법제화(수자원관리법 제정안 마련, '13.6)</li> <li>•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 분석과 재해 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국토계획법 개정, '13.8)</li> <li>•홍수 예경보 시스템 강화를 통해 예방적 사전 대비체제로 전환</li> <li>•경관을 훼손하는 공사중단 방지건축물(전국 860여동)을 정비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13.6) 및 국가위원의 체계적인 정비 추진('14년~)</li> <li>•재해예방, 보행안전, 경관개선 등을 위해 전선 공동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선 지중화 추진</li> </ul>	국토부

전략	국정과제	부처 세부업무계획	주관부처
	8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위해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확대(1000—500세대 이상 단지, '13.5)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강화('13.9)</li> <li>• 주택성능실험센터 구축('14~'17)하여 소음, 공기질 등 개선 연구</li> </ul>	국토부
	88.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	-
	89.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제품처럼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 성능 표기 제도 도입</li> </ul>	
	90. 기상·기후 변화 등 기후변화 적응	-	-
	9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	-	-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도시계획 수립시 시행하는 환경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환경계획과의 연계 강화('13.12)</li> <li>•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도입('13.2)</li> <li>•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차등화 하고, 기반시설 확보기준, 환경경관기준 등을 구체화·합리화('13.12)</li> <li>• 부동산교통 등 14개 국가공간정보를 추가 공개('13.5)하고, 웹기반으로 제공 중인 오픈 플랫폼의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13.7)</li> <li>•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쉽게 지도를 편집·공할 수 있도록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강화('13.12)</li> <li>• 지하철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간정보 맵을 구축하여 복자안전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14~'17)</li> <li>•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합치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li> <li>• 훼손·복개된 하천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기 정비된 하천은 친수문화공간과 생태보전공간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li> </ul>	국토부
	96.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	-
7. 사회통합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방향 전환</li> <li>•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 강화, 기반시설 및 필요한 S/W사업 지원</li> <li>•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 '14-'18년간 선도지역 지원 로드맵 마련('13.6), 선도지역</li> </ul>	국토부

전략	국정과제	부처 세부업무계획	주관부처
		지정('13.12) 후 계획수립바기반시설설치비 등 지원 •도시 규모와 특성,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성장을 견인시킬 수 있는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 마련('13.12) •개발사업시 先 지역합의 유도, 後 계획확정 방식으로 전환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국토의 수용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평가하는 “개발사업평가 시스템” 도입 검토 •사업성격이 유사한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 제도를 통폐합하여 유사중복개발 방지(지역개발지원법 국회제출, '12.9) •개발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방안 마련('13.2)	
	106.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노후산단 재생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 •대전, 대구, 전주, 부산사상 등 노후화가 심각한 산단에 대한 재생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2차 사업지역 추가 선정 •산단 주변에 주거복지시설문화편의시설 등을 입주시켜 미니복합타운으로 조성	국토부

#### □ 국정기조 3 문화융성 및 추진기반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문화융성 및 추진기반에 대해서는 주로 110번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과제와 134번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구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건축문화행사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축문화교육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37] 국정기조 3 문화융성 및 추진기반에 대응하는 주요 건축정책 현황

전략	국정과제	부처 세부업무계획	주관부처
8. 문화참여 확대	108.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
	110.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충간소음 걱정없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13.5)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훼손된 공간에 누리갈여가녹지를 조성하고, 수요가 많은 여가시설 입지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13.6)	국토부

전략	국정과제	부처 세부업무계획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지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법률안」 마련(6월)</li> <li>• 유아숲체험원(21개소) 등 산림복지 공간 확충</li> <li>• 도시숲(172개소), 학교숲(149개교), 가로숲(511km) 등을 조성</li> </ul>	농축산부
		• 범죄예방, 중간소음, 환경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법제도 개선	미래부
9. 문화예술 진흥	112.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	-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116.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
14. 신뢰받는 정부	134.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교통 등 14개 국가공간정보를 추가 공개('13.5)하고, 웹기반으로 제공 중인 오픈플랫폼의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13.7)</li> <li>•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쉽게 지도를 편집·공할 수 있도록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강화('13.12)</li> <li>• 지하철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간정보 맵을 구축하여 복자안전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14~'17)</li> <li>•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li> <li>• 생활밀착형 「국토정보 R&amp;D 프로젝트」 추진('14~'20)</li> <li>•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 구축('14~'17)</li> <li>• (탈루세원 발굴지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 과소 신고자와 과세가 누락되고 있는 건축물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도로하천 등 국유지가 건축물에 무단 점유되고 있는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수입 확보 지원</li> <li>• (해외교포 네트워크) 교포, 여행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민족의 인적물적비즈니스 정보를 위치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li> <li>•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민과 중소기업의 공간정보 기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13~'14)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창업을 지원</li> </ul>	국토부

## 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개선방향

건축·도시분야에 관련된 33개 국정과제 중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 및 세부단위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①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행화가 필요한 과제, ②현재계획 계속 추진과제, ③부서·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하는 과제, ④신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 □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행화가 필요한 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도시재생 특별법 관련 과제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이 유망 서비스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사 또는 이중서비스(건설, 디자인 분야)간 융합을 통해 창조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가 현행 지속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관련과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 마련 등 도시재생 특별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방식을 개발하고,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과 관련된 과제는 복지와 관련된 국정과제와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 및 국내 건축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건축가 발굴 및 우수한 건축디자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관개선 관련사업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생활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유희시설을 이용한 문화공간 및 농촌한옥마을 조성 등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과제의 경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지역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 38]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행화가 필요한 과제

국정과제	건축정책기본계획	검토사항
0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연계</li> <li>▶건축서비스산업이 유망 서비스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li> </ul>

국정과제	건축정책기본계획	검토사항
		출과 연결됨을 제안 ▶유사 또는 이중 서비스(건설 또는 디자인분야)간 결합 및 융합을 통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 추진에 중점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어방식의 개발과 포괄적 도시재생 방식 도입</li> <li>•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li> <li>• 유형별 맞춤형 재생전략 수립 지원</li> <li>• 지자체의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 등 추가과제 발굴 필요</li> <li>▶도시재생 특별법과 연계</li> </ul>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추진</li> <li>• 건축가(조경가)의 국제 브랜드화 추진</li> <li>• 국내 건축문화와 우수 건축가(조경가) 해외 소개·지원</li> <li>•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연계성 강화</li> </ul>
21.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는 발주방식 도입과 제도화</li> <li>•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주택에 대한 시상·포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li> <li>• 신진 디자이너 대상설계</li> <li>• 공모를 통하여 신진 우수설계자 육성</li> <li>• 시상의 권위 제고 및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연계성 강화</li> </ul>
43.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의 건축·도시 관련 디자인 기획과정 강화</li> <li>•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행계획 보안을 통해 국정과제 연계성 강화</li> </ul>
5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 유형별 경관계획 수립·시행</li> <li>• 농어촌 경관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li> <li>•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주거모델 개발·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리적 환경개선과 병행하여 시설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어 추진</li> </ul>
56. 주거안정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li> <li>• 유희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검토</li> <li>•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통해 그린홈 200만 호 건설·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에 보다 초점을 두고,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보</li> <li>▶수요가 높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희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과 연계</li> </ul>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79.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이 중단된 폐선부지를 문화관광시설로 활용</li> <li>• 근대 산업유산 및 유희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li> <li>• 한옥건축물 대수선, 신축 등 건축행위에 대한 재정 지원</li> <li>•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과제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행화</li> </ul>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의 디자인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PTED(범죄예방설계기법) 적용 확대</li> </ul>

## □ 현재계획의 계속 추진 과제

건축기술 강화(건축관련 R&D사업, BIM시범사업, 첨단 건축설계기술 개발), 전문 인재 양성(경관 전문인력 확충, BIM전문인력 육성 등), 건축 문화재 및 우수건축물 등 건축문화 진흥(한옥의 신축 및 활성화, 우수건축물 관리 및 홍보 등) 등과 같이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진행되어 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계획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표 39] 현재 계획의 계속 추진 과제

국정과제	건축정책기본계획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기관별 건축관련 국가 R&amp;D 투자에 대한 총괄관리기능 강화</li> <li>• 건축관련 R&amp;D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li> <li>• BIM 적용 시범사업 추진 및 공공분야 도입</li> <li>• 건축도시분야의 첨단 선진 설계기술 개발 연구 추진</li> <li>• IT기술과 녹색기술의 융·복합 추진</li> </ul>
45.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건축문화행사 활성화</li> <li>• 건축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li> </ul>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경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li> <li>• 건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수련 요건을 도입</li> <li>• 자격등록 및 2년마다 정기 연수교육을 이수</li> <li>• BIM 관련 전문인력 육성</li> <li>• 초고층 건축물 및 수직 도시공간 등을 설계·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li> </ul>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79.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서울역사의 원형복원 및 문화공간 조성 추진</li> <li>• 한스타일 건축문화 홍보 추진</li> <li>•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의 예산 및 기술 지원</li> <li>• 한옥건축물 대수선, 신축 등 건축행위에 대한 재정 지원</li> <li>• 공공부문 지원을 통한 한옥 활성화방안 검토</li> <li>• 우수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우수한 건축문화와 관련된 기록물의 축적관리 시스템 구축</li> </ul>
82.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친수공간의 생태하천 조성</li> </ul>

## □ 부서·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

친환경 그린스쿨사업 및 폐교재산활용(교육부), 농·어촌 경관관리 및 주택 개량사업(농축산부),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및 탄소제로 건축 시범사업(산통부)

등 각부처간 특성에 따라 건축·도시 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반영하고 있는 폐교나 농어촌 유희시설의 문화공간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교육부, 농축산부, 산통부, 국토부 등 각 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이나, 지역의 대표가로 조성 등 지역별 시행사업 역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지역별 특화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뿐만 아니라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4.제정)」과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특화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각 부처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국건위에서 사업 중재·조정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0] 부서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

국정과제	건축정책기본계획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79.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교나 농어촌 유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li> </ul>
82.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추진</li> <li>• 국가의 중심적 상징거리로 조성</li> <li>• 지역의 대표가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체성 확립 및 관광자원화 추진</li> </ul>
98. 온살그스 건축 등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학교 건축</li> </ul>
10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Smart Grid City 시범단지 조성</li> <li>• 탄소제로 건축 시범사업 추진</li> </ul>
10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05. 자연에너지를 풀어 자연순환 사회 실현 11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책임 강화</li> <li>• 도시재생개념 정립과 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li> <li>•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li> </ul>



## □ 신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과제

건강, 보육, 고령화, 재난·재해, 범죄예방 등 복지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경우는 건축도시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로써 건축정책에 포함될 필요성이 짝으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관련된 과제가 부족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에 대한 국정과제가 중요한 정책기조로서 내세워진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41] 신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과제

국정과제	건축정책기본계획	검토사항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실버타운 조성 등 고령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추가과제 발굴 필요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신규과제 발굴
48.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초고령사회 대응 및 사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과제 발굴 필요
55.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확충	—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이 육성되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과제 발굴 필요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체험 및 실험위주의 학습환경 조성 및 학교내 학생건강 증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과제 발굴 필요
80.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신규과제 발굴
83.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신규과제 발굴
92.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	신규과제 발굴
94.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	환경보건정책과 연관되어 실내공기질 개선, 유해물질로 인한 아토피 방지 등 청정건강주택과 연관된 추가과제 발굴 필요
9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	신규과제 발굴
99.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및 질병 방지 등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과제 발굴 필요



## 참고문헌

### □ 보고서

- 이용우 외, '국토 대예측 연구', 국토연구원, 2009
- 김상호, 김영현,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10
- 조상규 외,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 김효정,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8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서울특별시청, 2010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도청, 2011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전라북도청, 2012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인천광역시청, 2013
- 김민수, 우신구 외, '부산건축기본계획', 부산광역시청, 2012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대전광역시청, 2012
- IITA, 'IT기술예측', 2007
- KISDI, '메가트렌드 연구보고서(2003~2008)', 2008
- KISTEP, '새로운 예측 프로세스를 적용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미래사회 전망', 2009
- LG경제연구원, '10년후 세상을 말한다(LGERI의 미래생각 시리즈(1))', 2010
- LG경제연구원,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LGERI의 미래생각 시리즈(2))', 2010

LG경제연구원, '해외 미래예측기관들이 보는 10년후 세상', 2009

STEPI,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2007

경기개발연구원, '도시 혁신의 길을 가다', 2013

과학기술부 · KISTEP,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수정 · 보완', 2008

과학기술부, 'Future 2030 : 우리의 미래 모습은?', 2005

김현기 외 4명,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 10년 후 대변혁을 가져올 44가지 미래 트렌드', 한스미디어, 2008

대한민국정부,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

미래기획위원회 · KDI, '2020/2050 미래전망 토론회', 2008

미래기획위원회 · 지식경제부, 'IT KOREA 5대 미래전략', 2009

미래전략포럼 외 2인, '퓨처코드 : 대한민국 미래 트렌드', 한국경제신문사, 2008

부산발전연구원, '미래트렌드와 미래연구', 2007

삼성경제연구소, '(SERI 보고서로 읽는) 미래산업', 2009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Green Vision Plan 미래라이프트렌드보고서', 2013

정보화추진위원회,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08

한국CEO 포럼, AT커니 코리아, 미래경제연구원, 'KOREA Scenario', 2007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와 교통체계 전망',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 2006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2010

한국행정연구원, '(정치)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2008

Eamonn Kelly, 'Powerful Times : Rising to the Challenge of Our Uncertain World', Pearson Education India

EC(European Communities), 'Future Internet 2020 : Vision of an Industry Expert Group', 2009

EIU(Economist Intelligent Unit), 'Foresight 2020 Economic, industry and corporate trends', 2006

Gartner, Inc., 'Government 2020 Scenarios', 2005

Shell, Inc., 'Shell Energy Scenario to 2050', 2008

Siemens , 'Horizons 2020', 2006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ECD 경제및도시정책보고서', 2012

국제에너지기구 (IEA), '시나리오와 전략', 2008

국제연합(UN),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8

독일 Z-punkt GmbH , 'Megatrends', 2008

미국 MIT 대학, '역대 MIT 선정 10대 유망기술', 2009

미국 NIC(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2008

미국 RAND 연구소,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2007

박영숙, 제롬 글렌 등,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2008, 교보문고

박영숙, 제롬 글렌 등, '유엔미래보고서 2', 2009, 교보문고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 '55 Trends Shaping Tomorrow's World', 2008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 'The Futurist', 2009

영국 통상산업부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Sigma Scan 271개 이슈', 2010

영국 통상산업부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World Trade : possible futures', 2009

일본 경제산업성, '미래기술 전략지도', 2009

일본 노무라연구소, 'IT Road Map of Unified Communications Until 2013', 2008

일본 이노베이션 추진본부, 'Innovation 25', 2007

강상준 외(2012)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전략, 정책연구 2012-55, 경기개발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박경아 외(2012),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와 교통체계 전망, KOTI-Brief, 한국교통연구원, pp.8-15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2013) 미래 트렌드 보고서, 서울그린트러스트

에너지경제연구원(2009) IEA 세계에너지 전망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2012)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이상대 외(2011),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방향 연구, 기본연구 2011-8,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김희연, 유영성(2012), 100세 시대 :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경기개발연구원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2009-3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Meta Analysis, 행정안전부

OECD(2011), 한눈에 보는 사회 2011: OECD 사회지표, OECD KOREA Policy Center

OECD(2012), OECD 경제 및 도시정책보고서, OECD

#### □ 홈페이지

공감코리아\_보도자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List.do>

서울특별시청\_보도자료, <http://spp.seoul.go.kr>

부산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media.busan.go.kr>

대구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daegu.go.kr>

인천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incheon.go.kr>

대전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daejeon.go.kr>

광주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gwangju.go.kr>

울산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ulsan.go.kr>

경기도청\_보도자료, <http://gnews.gg.go.kr>

강원도청\_보도자료, <http://www.provin.gangwon.kr>

충북도청\_보도자료, <http://www.cb21.net>

충남도청\_보도자료, <http://www.chungnam.net>

전북도청\_보도자료, <http://www.jeonbuk.go.kr>

전남도청\_보도자료, <http://www.jeonnam.go.kr>

경북도청\_보도자료, <http://www.gb.go.kr>

경남도청\_보도자료, <http://www.gsnd.net>  
제주도청\_보도자료, <http://www.jeu.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http://www.nhis.or.kr)  
녹색경영정보포털 : [www.gmi.go.kr](http://www.gmi.go.kr)  
동아일보 : [www.donga.com](http://www.donga.com)  
매일경제신문 : [www.mk.co.kr](http://www.mk.co.kr)  
삼성 SDI : [www.samsungsdi.co.kr](http://www.samsungsdi.co.kr)  
세계일보 : [www.segye.com](http://www.segye.com)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  
통일부전자도서관 : [lib.uniedu.go.kr](http://lib.uniedu.go.kr)  
한겨레신문 : [www.hani.co.kr](http://www.hani.co.kr)  
한국경제연구원 : [www.keri.org](http://www.keri.org)  
Economist : [www.economist.com](http://www.economist.com)





## Architectural Policy Recommenda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Cho, Sang Kyu  
Kim, Young Hyun

Due to policies of the new government, and passing of architectural legislations such as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substantial changes to the architectural sector is expected.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olicy outcomes of the first Architecture Policy Fundamental Plan launched in 2010 so that pre-emptive measures can be taken in response to changed government policies. Furthermore, taking into account currently discussed megatrend notions and plans of the new government, the research derives policy agendas and conditions that need reflectio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Architecture Policy Fundamental Plan.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outcome of the Pl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ports on architecture and urban programs from May 2010 to June 2013 were monitored. The compiled articles were categorized into architectural culture, green architecture and city, and spatial environment design. Each of these three categories were analyzed under six sections namely planning, improvement of legislation, project implementation and support,

system establishment, research and education, and finally, event and promotion.

Additionally, major issues of the architectural sector were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f various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ion's future studies report, from both Korea and abroad. In terms of methodology, the STEEP analysis, which measures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political conditions, was used as it is widely employed in future studies research. Moreover, a survey of 25 architecture and urban experts was conducted to find out what new issues may rise from the architectural sector. The survey also inquired what changes in condition would affect future architectural issues, and its respective significance.

Last,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new government's plans,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urrent Architecture Policy Fundamental Plan, the study concluded by making recommendations of improvement to the future establishment of the Plan.

**Keywords :** architectural policy, future architectural issues, megatrends

## 부 록

### 부록1. 메가트렌드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설계과정

2010년 전후로 영국, EU, 미국, 일본에서는 2020년 또는 2050년을 목표연도로 한 미래전망보고서가 다양한 미래연구집단 및 정부기관을 통해 매년 제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회적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내외 미래예측보고서를 검토·정리하였다.

각 미래예측관련문헌에서 주요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외 이슈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주요목표를 분석하고 각각의 문헌에서 선별한 주요이슈를 양극화, 고령화, 에너지다소비, 기후변화 등 사회주요현안에 따라 범주화 하였다. 각각의 범주화된 주요이슈들은 STEEP의 다섯가지 요소(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로 재분류 하였다. 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18대 세부전략을 키워드화 및 STEEP유형화를 통해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의 미래트렌드 반영도를 분석하고 정합성을 판단하였으며,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반영 가능한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하고 설문문항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세부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여건분석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 연구된 미래예측문헌〉

구분	보고서명	기관	발행 년도	연번
국내	Future 2030 : 우리의미래모습은?	과학기술부	2005	1
	함께하는희망한국VISION2030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	2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전망과 과제	NIA	2006	3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STEPI	2007	4
	미래트렌드와 미래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7	5
	2013 KOREA Scenario	한국CEO포럼,AT커니 코리아,미래경제연구원	2007	6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2008	7
	제3회과학기술예측조사수정·보완	과학기술부/KISTEP	2008	8
	2020/2050 미래전망토론회	미래기획위원회/KDI	2008	9
	IT기술예측	IITA	2008	10
	정치)미래선진한국의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11
	메트렌드연구보고서(2003~2008)	KISDI	2008	12
	퓨처코드:대한민국미래트렌드	미래전략포럼	2008	13
	IT KOREA 5대미래전략	미래기획위원회/지식경 제부	2009	14
	새로운 예측 프로세스를 적용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미래사회 전망	KISTEP	2009	15
	국토대예측연구	국토연구원	2009	16
	(SERI 보고서로 읽는)미래산업	삼성경제연구소	2009	17
	해외미래예측기관들이보는 10년후 세상	LG경제연구원	2009	18
	10년후세상을말한다	LG경제연구원	2010	19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LG경제연구원	2010	20
	Green Vision Plan 미래라이프트렌드보고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2013	21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와 교통체계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2013	22
	도시 혁신의 길을 가다	경기개발연구원	2013	23
국외	Government 2020 Scenarios	가트너	2005	1
	Foresight 2020 Economic, industry and corporate trends	EIU	2006	2

Horizons 2020	지멘스	2006	3
Powerful Times : Rising to the Challenge of Our Uncertain World	이몬켈리	2006	4
Innovation 25	이노베이션 추진본부	2007	5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미국RAND 연구소	2007	6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NIC	2008	7
시나리오와 전략	국제 에너지기구	2008	8
UN 새천년개발목표 (MDGs:MillenniumDevelopmentGoals)	UN	2008	9
IT Road Map of Unified Communications Until 2013	일본 노무라연구소	2008	10
55 Trends Shaping Tomorrow's World	세계미래학회	2008	11
미리가본2018년유엔미래보고서	박영숙, 제롬글렌등	2008	12
Shell Energy Scenario to 2050	Shell	2008	13
Megatrends	독일Z-punkt	2008	14
미래기술 전략지도	경제산업성	2009	15
World Trade : possible futures	DTI	2009	16
Future Internet 2020 : Vision of an Industry Expert Group	EC	2009	17
역대MIT선정10대유망기술	MIT	2009	18
The Futurist	세계미래학회	2009	19
유엔미래보고서2	박영숙, 제롬글렌	2009	20
Sigma Scan 271개이슈	DTI	2010	21
OECD 경제 및 도시정책보고서	OECD	2012	22

메가트렌드에 따른 주요 키워드 설정과 건축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회여건을 파악 및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설문문항유형 도출 과정

- 첫째, 미래변화예측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및 국제 사회변화와 이슈와 개선방안, 목표 조사
  - 한국 경제 및 도시정책 보고서에서 다룬 국내 경제 및 도시의 주요쟁점은 ①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 ②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축소를 통한 사회통합 개선, ③한국의 도시 화율은 OECD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달, ④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지방중소도시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 ⑤고령화, 에너지 다소비, 기후변화는 한국도시가 해결해야할 거시적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목표와 해결방안을 제시

〈미래변화예측 문헌 주요사안 조사 예시(OECD 한국 경제 및 도시정책 보고서)〉

한국 경제 보고서	이슈	급격한 고령화 진행 중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축소를 통한 사회통합개선
	제안	목표1 성장잠재력 유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유연임금제도의 도입 및 의무정년제도 탈피로 55세 은퇴고령자 고용확대 -고령화등과관련하여증가하는사회지출을부가세,환경세,보유세로 조달하여근로에대한세금증가억제및근로유인유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선 -고등교육의 지나친 경쟁 해결 및 교육품질제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대 -에너지 집약적인 경제변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세 부과
		목표2 사회 통합개선
		-고령화만으로도 사회복지 지출이 2050년까지 GDP의 20%까지 증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확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범위 개선 및 훈련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우수한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접근성 개선 -대학입학 절차 개선, 학교의 질과 다양성 확대, 그리고 직업교육 개선을 통한 사교육, 특히 학원에 대한 의존도 축소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도시 정책 보고서	이슈	한국의 도시화율은 OECD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도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문제로 집약
		고령화, 에너지다소비, 기후변화는 한국도시가 해결해야할 거시적 과제
	개선 방안: 도시 정책	부처별 단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책을 통합
		지방정부간 정책협조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마련
		기반시설디자인개선,고령자주택공급확대,대중교통개선, 보행공간 확보 등 고령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미국(뉴욕)의 경우 고령자 전용주거시설 건설시 50% 추가주택건설 허용추진
		도시디자인개선,공간적격리방지등을통해사회적결함을강화, 독일은지역정책에다문화명시,호주등은도시계획시설을특색있게운영
		서울시(국가경쟁력핵심),지방대도시(배후지역과 연계한 종합경제권 개발) 소도시(도시기능회복)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
		계획과정에서부터 예측 모델링 기법 도입, 평가 지표 등 개발
	개선 방안: 녹색 도시 정책	건물분야 : 에너지사용량 정보 제공,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성능표시 의무화
		교통분야 : 도심내 주차요금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자동차 통행제한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인프라 기금 조성, 도시별 탄소배출량 측정 등

- 둘째, 각각의 문헌에서 조사한 주요내용 범주화(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
  - 한국경제 및 도시정책 보고서에서 주요쟁점으로 다루어진 이슈는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기, 에너지 다소비, 기후변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주요 이슈에 따른 트렌드 범주화 예시(OECD 한국 경제 및 도시정책 보고서)〉

주요 이슈	분류(트렌드 카테고리)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령화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축소를 통한 사회통합개선	양극화
한국의 도시화율은 OECD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도달	저성장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고령화
지방중소도시의 쇠퇴,	저성장기
높은 에너지 소비문제로 집약	에너지다소비
고령화,에너지다소비,기후변화는 해결해야할 거시적 과제	기후변화

- 셋째, 주요 이슈에서 분류한 카테고리를 STEEP기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5개 미래변화유형에 따른 범주화

〈STEEP요소에 따른 트렌드 항목 유형〉

STEEP 요소	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y)	경제 (Economic)	환경 (Ecologic)	정치 (Politic)
트렌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비용 증가</li> <li>• 저출산 고령화</li> <li>• 교육변화</li> <li>• 국제화</li> <li>• 글로벌화</li> <li>• 글로벌 인재의 부상</li> <li>• 네트워크 사회</li> <li>• 다문화</li> <li>• 도시쇠퇴</li> <li>• 보건의료변화</li> <li>• 삶의 질 중시</li> <li>• 신가족구조</li> <li>• 양극화</li> <li>• 여가방식변화</li> <li>• 여성의 사회진출</li> <li>• 인구구조의 변화</li> <li>• 저성장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융합</li> <li>• 가상공간의 발달</li> <li>• 가상지능공간</li> <li>•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li> <li>• 로봇</li> <li>• 기술의 융복합화</li> <li>• 안전 위험성 증대</li> <li>• 인공지능융합</li> <li>• 인프라 노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확대</li> <li>• 메가시티발전</li> <li>• 소비가치 이동</li> <li>• 생활기반의 변화</li> <li>• 신성장동력</li> <li>• 새로운 국제적 산업구조/서비스출현</li> <li>• 웰빙/감성/복지/경제</li> <li>• 재정기반 취약화</li> <li>• 지식기반경제</li> <li>• 노동유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li> <li>•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li> <li>• 바이오 환경</li> <li>• 지구 온난화</li> <li>• 자원 부족</li> <li>• 환경관련 신기술 신산업 성장</li> <li>• 에너지 수요 증가</li> <li>• 에너지 위기</li> <li>• 에너지다소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정세변화</li> <li>• 규제해소</li> <li>• 직접소통</li> <li>• 남북통합</li> <li>• 통합가능성 고조</li> <li>• G20 국가의 국제사회 역할 증대</li> <li>• 한중일 + ASEAN 국가의 역할 증대</li> <li>• 글로벌 거버넌스 강조</li> <li>• 전쟁 및 테러위험 요소 존재</li> <li>• 지방분권화</li> <li>•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li> <li>• 러시아 영향력 증대</li> </ul>



- 넷째,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18대 전략을 키워드화 하고 STEEP 유형에 따라 분류(지역 및 도시지역 향상(전략)→디자인향상(키워드화)→사회(STEEP유형화))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18대 전략을 통한 정합성 판단〉

18대 세부전략	키워드화	STEEP 유형화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디자인향상	사회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제고	디자인향상	사회
공공부문 디자인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디자인향상	기술
공공건축 디자인새신	디자인향상	사회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건설/건축	사회
탄소저감형 도시환경조성	건설/건축	환경
건축물 에너지 효율제고	에너지효율화	환경
친환경 주택건설 및 공급 활성화	건설/건축	환경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에너지효율화	기술
건축산업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산업기반	경제
미래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	기술
건축 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기술개발	기술
고유한 건축문화 유산의 보전 활용	문화유산활용	사회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문화유산활용	사회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	건설/건축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건축문화혁신	사회
건축문화의 국제 경쟁력 향상	건축문화혁신	정치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건축문화혁신	사회

- 마지막으로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반영가능한 트렌드키워드를 분류하고 건축·도시 관련 설문문항유형 도출

- 각각의 트렌드 키워드를 반영여부를 선별하였으며 반영가능한 키워드의 경우 건축과 관련된 설문문항유형을 도출함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반영가능한 트렌드 키워드 선정  
및 설문문항유형 도출〉

구분	트렌드 키워드	반영 여부	반영가능한 설문문항유형
사회 (Social)	건강비용증가	○	주거공간 형태와 유형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	주거 및 생활공간 규격의 변화
	교육변화	○	단지규모의 공간구조 형태의 변화
	국제화	○	건축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재의 부상	○	건축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화	○	건축산업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사회	○	단지규모의 공간구조 형태의 변화
	다문화	○	공간 소비자의 다문화화
	도시쇠퇴	○	쇠퇴여건을 고려한 공간형성 방식의 변화
	보건의료변화	○	건축소비패턴변화/주거공간의 형태와 유형의 변화
	삶의 질 중시	○	건축소비패턴변화
	신가족구조	○	주거 및 생활공간 규격의 변화
	양극화	○	건축소비패턴변화
	여가방식변화	○	건축소비패턴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	건축소비패턴변화/주거공간의 형태와 유형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	건축소비패턴변화/주거공간의 형태와 유형의 변화
	저성장기	○	건축소비패턴변화/주거공간의 형태와 유형의 변화
기술 (Technology)	IT융합	○	신기술도입
	가상공간의 발달	○	설계산업적용
	가상지능공간	○	신기술도입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X	
	기술의 융복합화	○	신기술도입
	로봇	X	
	안전 위험성 증대	○	도시구조개선
	인공지능융합	X	
	인프라 노후화	○	도시구조개선

경제 (Economic)	FTA확대	○	건축산업경쟁력 강화
	메가시티발전	○	고도 도시화
	새로운국제적산업구조/ 서비스출현	○	산업국제화
	생활기반의변화	○	건축소비패턴변화
	소비가치 이동	○	건축소비패턴변화
	신성장동력	○	신산업 개척과 성장
	웰빙/감성/복지 경제	○	건축소비패턴변화
	재정기반취약화	○	산업구조변화
	지식기반경제	○	산업구조변화
	노동유연화	○	산업구조변화
환경 (Ecologic)	기후변화	○	설계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	설계방식의 변화
	바이오 환경	X	
	지구 온난화	○	설계방식의 변화
	환경관련 신기술 신산업 성장	○	신산업개척과 성장
	자원 부족	○	건축, 도시의 항상성 유지기술적용
	에너지 수요 증가	○	저 에너지 소비형 건축기술 개발 및 확산
	에너지 위기	○	저 에너지 소비형 건축기술 개발 및 확산
	에너지지다소비	○	저 에너지 소비형 건축기술 개발 및 확산
정치 (Political)	국제정세변화	○	건축산업경쟁력 강화
	규제해소	X	
	글로벌 거버넌스 강조	X	
	남북통합	○	남북통일 시대 대비
	직접소통	○	남북통일 시대 대비
	통합가능성 고조	○	남북통일 시대 대비
	한중일 + ASEAN 국가의 역할 증대	○	건축/건설산업의 국제시장 개척
	G20 국가의 국제사회 역 할 증대	X	
	전쟁 및 테러위험 요소 존재	X	
	지방분권화	○	산업구조변화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	산업구조변화
	러시아 영향력 증대	X	

## 부록2. 건축정책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양식

### 들어가며

본 연구원에서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년)이 수립이후 기간경과에 따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미래에 대한 거시적 변화양상을 포함한 정책을 담기위해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2020년~2050년간의 미래예측을 담은 최근 3년이내 발간된 문헌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거시적 미래변화 유형과 트렌드 키워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미래변화와 한국의 건축, 도시, 조경 분야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을 통해 여러 저명하신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귀중한 의견과 시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10.28.(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영현 연구원

031.478.9619, 010.6254.3320, yhkim@auri.re.kr

## I. 5대 거시적 미래변화에 대한 중요도 의견 분석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는 조사연구기법 중 대표적인 기법인 STEEP 법은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영역으로 미래변화 유형을 구분하고 환경적 분석을 통한 주요동향 및 이슈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본 설문은 STEEP 법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국내외 기관들이 예측한 국가사회적 거시적 변화 추세를 STEEP 분류에 맞추어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경제적변화’, ‘환경·기후적변화’, ‘정치·행정적변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설문 문항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사회의 주요 메가트렌드(안)>

거시적 변화	주요 메가트렌드 키워드
<b>사회적변화</b> (Society)	건강비용 증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양극화 심화, 다문화 사회형성, 도시 쇠퇴화 진행, 삶의 질 중시 등 총 7개 트렌드 키워드를 적용
<b>기술적변화</b> (Technology)	기술의 융복합화, 안전위험성 증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총 3개 트렌드 키워드를 적용
<b>경제적변화</b> (Economics)	FTA 확대/새로운 국제적 산업구조 및 서비스 출현/지식기반경제, 메가시티 발전, 글로벌 인재의 부상 등 총 3개 트렌드 키워드를 적용
<b>환경적변화</b> (Environment)	기후변화, 환경관련 신기술 신산업 성장, 에너지 다소비 및 수요 증가 등 총 3개 트렌드 키워드를 적용
<b>정치·정책적변화</b> (Politics)	남북통합, 국제정세, 지방분권화 등 총 3개 트렌드 키워드를 적용

### 문 1. [사회적변화]에 대한 의견

메가트렌드의 키워드 초안에서 [사회적변화]영역에 총 7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좌측 열의 트렌드키워드와 국정과제를 판단기준으로 보시고, 건축정책에 반영을 위한 트렌드가 건축 정책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견란에는 건축정책의 방향성 항목에 추가 또는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회 여건	타당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하다	
			-2	-1		1	2
저출산 고령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노인소비 상품 서비스 육성 → 지역 부동산시장과 연계					
		의료, 여행, 장묘 산업의 성행(육아, 보육시설 수요 감소 or 고급화)					
	고부가가치 사회 일자리서비스 확충	노인 전용 지역개발 도시계획, 주택정책 방향 제시					
		1인세대, 2인세대, 독거노인 등을 위한 주거유형 확대보급					
		비노동집약형 일자리 확대					
		노령계층의 재력,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 사회					
		체험형 소비 대응 서비스 관련 일자리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남성중심의 평면구조의 변화 필요					
		업무용 시설의 체육·보육시설 추가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범죄 예방설계기준(CEPTED)의 확대 적용					
양극화 심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농어촌 지역 유형별 경관 계획 수립					
		농어촌 경관개선 사업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안정 대책 강화	노후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통한 주거 공급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					
	국민 대통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시재생 사업의 지역 할당제 시행					
		지역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강비용 의 증가	국민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의료복지를 위한 예방, 치료, 관리시스템 적용(홈케어, 홈닥터)					
		3고 문제(질병, 빈곤, 고독) 해결을 위한 복지 체계 포함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치료중심 → 예방과 관리중심을 위한 시스템 도입					
		건강지출비용 증가 → 소비시장의 확대를 고려					
		노인계층 중심의 전문 의료 서비스 체계, 공간 조성					
		노인계층의 세분화(60대, 70대, 80대, 90대, 남/여)된 의료 전문화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회 여건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2	-1	0	1	2
다문화 사회형성	국정과제없음	저개발국 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일상화					
		외국인 구성비 증가					
도시 쇠퇴화 진행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도시쇠퇴현상의 전국화에 따른 자발적 지역 활성화 장려책 마련					
		지속가능성이 곤란한 지방정부의 출현: 자족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지자체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					
		맞춤형 재생전략 수립 지원					
	주거안정 대책강화	도산한 미분양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추진					
		주거 취약 계층을 고려한 최소생계유 지형 주거 공급					
		아파트 중심의 주거시장에서 다양한 주거유형으로의 변화					
삶의 질 중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격차 해소	근대산업유산 및 유희시설 재활용, 문화시설화					
		구역사, 폐선부지 등 문화공간 조성 추진					
		폐교, 농어촌 유희시설 문화공간 활용					
		문화공간을 창작공간, 전시, 공연 공간으로 유형화하여 문화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한옥, 한국 정원 등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체계 마련					
		전통 및 근대 건축문화유산의 관리체계 구축 및 관광상품화					
		미래형 한국 건축문화에 대한 방향 모색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고려한 복합 체육공간 조성추진					
		유희부지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 생활체육공간 확충					
		기존 체육시설의 개편과 생활체육 기능 부여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조성	도시 내 자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도시에 인접한 자연지역을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 및 관광자원화					
		소득증대, 주5일제, 고령화, 가족형태 변화 등으로 가치가 가족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한 지역별 생활문화 공간 조성					

## 문 2. [기술적변화]에 대한 의견

메가트렌드의 키워드 초안에서 [기술적변화]영역에 총 3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좌측 열의 트렌드키워드와 국정과제를 판단기준으로 보시고, 건축정책에 반영을 위한 트렌드가 건축 정책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견란에는 건축정책의 방향성 항목에 추가 또는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회 여건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2	-1	0	1	2
기술의 융복합화	국가 과학기술 혁신 강화	건축영역의 IT, 정보접근성 증대					
		IT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공동체 사회 출현					
		중대형 건축물의 로봇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형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건축관련 R&D 전략계획, 실행계획 수립					
		설계기술의 첨단화: 오감인터페이스, 증강현실 적용					
		IT와 에너지 기술의 융합된 건축물 proto type 제시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과 공간기술간의 융합					
안전 위험성 증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CEPTED 기술의 표준화, 스마트 디바이스와 공간정보 실시간 연계					
	성폭력으로 안전한 사회	차폐공간을 최소화 하는 건축 설계안 장려					
		위급 알림 시스템 설치의 일반화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계로 환경조성	공간정보를 활용한 위험지역 알림 시스템 기술 표준화					
		학교 내 개방, 공공공간의 비율 확대					
		위급 알림 시스템 설치 의무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총체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의 강화	학교숲, 학교정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 면적의 확대					
		전국적인 인프라 노후도 DB 구축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 감시 네트워크 향시 가동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위험지역과 인접한 도시지역에 대한 지정·관리					
		도시재생사업시 지역 환경, 생태를 고려하여 도시와 자연이 공존 가능한 도시로 재생					
		노후되어 재난이 예상되는 노후인프라 시설을 자연환경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개선, 신설					



### 문 3. [경제적변화]에 대한 의견

메가트렌드의 키워드 초안에서 [경제적변화]영역에 총 3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좌측 열의 트렌드키워드와 국정과제를 판단 기준으로 보시고, 건축정책에 반영을 위한 트렌드가 건축 정책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견란에는 건축정책의 방향성 항목에 추가 또는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회 여건	타당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하다	
			-2	-1		1	2
FTA의 확대 · 새로운 국제적 산업구조 및 서비스의 출현 · 지식기반 경제	해외건설, 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해외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세일즈 외교 필요					
		대외경제 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사 업과 지원					
		저개발국가, 신흥개발국가 시장개척 지원					
	서비스산업 , 전략 육성 기반 구축	FTA를 체결한 신흥개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 수출 전략 수립					
		국내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의 국제 경쟁력 확보, 해외진출 추진					
		육성된 글로벌 인재와 연계한 인력구조 개편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국제 화에 저해되는 규제 완화					
		신진 건축가 육성 및 국제 브랜드화 우수 건축, 조경가 기업 해외소재 및 지원					
메가시티 발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후된 도시 인프라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지방중소도시의 쇠퇴화를 막을수 있는 도시재생방안 마련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시티 건설 및 관리방안 제도화					
글로벌 인재의 부상	청소년 역량개발,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기초건축 교육 확대					
		사이버교육, 가상교실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환경 전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건축·도시 전문 지식인재와 전문 노 동자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					
		전문자격증 취득 요건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건축, 도시, 조경 등의 첨단설계기술의 분 야간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 강화					
		글로벌 인재로 교육받아 양성된 이들 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창업, 벤처 우선 기회 부여, 실무 비즈니스 환경 마련					

#### 문 4. [환경적변화]에 대한 의견

메가트렌드의 키워드 초안에서 [환경적변화]영역에 총 3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좌측 열의 트렌드키워드와 국정과제를 판단 기준으로 보시고, 건축정책에 반영을 위한 트렌드가 건축 정책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견란에는 건축정책의 방향성 항목에 추가 또는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회 여건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2	-1	0	1	2
기후 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신규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설계 기준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등 소비 관리체계 도입					
		물순환 친화형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산업, 주거지역에 적용할 녹색건축 설계기법 개발					
	기상이변 등 기후 변화 적응	5년 이상 중장기 건설, 개발 관련 계획 수립 시 미래 기후 여건 고려					
		기상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된 공간 DB 구축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한 산업구조 변화 대비					
환경 관련 신기술, 신산업 성장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 규제 강화	도시배출 유해물질 처리 시스템의 분산화, 고도화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개발					
		환경피해, 오염지역의 생태적 회복 방안 개발					
		유해물질 자원화 산업 제도적 지원					
에너지 다소비 수요 증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시티 시범 단지 조성					
		비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건축 모형 개발					
		탄소제로 건축 시범 사업 지속 진행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 순환사회 실현	수소에너지 사회를 대비한 도시, 건축 모형 개발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방안 마련					

## 문 5. [정치, 정책적변화]에 대한 의견

메가트렌드의 키워드 초안에서 [정치, 정책적변화]영역에 총 3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좌측 열의 트렌드키워드와 국정과제를 판단 기준으로 보시고, 건축정책에 반영을 위한 트렌드가 건축 정책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견란에는 건축정책의 방향성 항목에 추가 또는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키워드	국정과제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회 여건	타당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하다	
			-2	-1		1	2
남북 통합	국정과제 없음	남북한 통합에 대비한 북한 지역 연구 정책적으로 추진					
		다양한 통일 방식을 고려한 도시계획 대안 구상					
국제 경세	국정과제 없음	탄소배출권 이행을 위한 도시차원의 대안 마련					
		급성장하는 서해안권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 도시 시스템의 수출					
지방 분권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 수도권 경계지역에 설정된 개발 제한관련 규제 완화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권한 이양					
		상향식 의사결정체계 마련으로 자발적 발전 유도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지방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여 경제 적 관리 권한 부여 및 부채관리					
		지방정부 발생 부채의 기업경영적 책임제 적용 검토					

## 문 6. 메가트렌드 영역간 가중치 산정

메가트렌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메가트렌드들 간의 구분에 따라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됩니다. 메가트렌드 중에서 A 메가트렌드가 B 메가트렌드 보다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예시와 같이 A 영역 쪽으로  $\sqrt{\phantom{x}}$ 표 해주시면 됩니다. 각 응답척도의 번호에 해당되는 중요도 정도는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A 메가트렌드	2	1	0	1	2	B 메가트렌드
	A가 더 중요하다 ←		동등		→ B가 더 중요하다	
A	$\sqrt{\phantom{x}}$					B

척도	중요도 정도
0	두 개의 요소가 동일하게 중요함(equal)
1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중요함(weak)
2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함(strong)

A 메가트렌드	2	1	0	1	2	B 메가트렌드
	A가 더 중요하다 ←		동등		→ B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사회적변화						경제적변화
사회적변화						환경적변화
사회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기술적변화						경제적변화
기술적변화						환경적변화
기술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경제적변화						환경적변화
경제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환경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 문 7. 응답자 기본사항

성명		소속/직위	
전문분야			
연령	만 ( ) 세	경력	만 ( ) 년

설문작성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